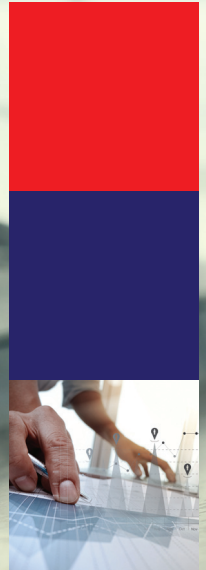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15-13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최장호
김준영
임소정
최유정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최장호·김준영·임소정·최유정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 서 언 Ⅱ

최근 북한의 대중의존도 심화와 함께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영향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 노동당 창건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는 앞으로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2002~2011년에 걸쳐 연평균 9%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이 2012년부터는 성장세가 둔화되어 연평균 7%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뉴 노멀(New normal) 시대 진입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북·중 경제협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은 데 반해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하나의 이론 틀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연구는 북·중 양국의 경제협력을 분업체제로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분업체제를 매개로 중국에서 시작된 대외경제환경 변화가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 경제협력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중 분업체제의 현황과 추이를 살피고, 국경을 마주한 두 지역의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다양한 요인과 특징을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경제여건의 변화(economic shock)가 분업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북·중 경제협력의 변화과정을 조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중국경제 둔화가 어떤 경로를 거쳐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인 무연탄과 철광석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상품무역 외에 북·중 접경지역 관광,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 등의 경제협력사업이 향후 북·중 분업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중 간에 형성된 분업체계와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를 남북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에 어떤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고찰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새로운 기여는 첫째, 북·중 양국의 경제협력을 분업체계로 규정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 둘째,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통계자료를 활용했다는 점, 셋째, 본 연구에서 정립한 개념을 현지조사를 통해 재확인함으로써 연구의 정합성을 높이도록 하였다는 점입니다. 다만 북·중 분업체계는 이 연구에서 새롭게 정립한 개념이기 때문에 학술적·실증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은 향후 관련 연구에서 보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연구에는 최장호 부연구위원을 비롯해 김준영, 임소정, 최유정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해주신 본원의 임호열 동북아경제실장과 최낙균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심사를 맡아주신 기재부 정광조 팀장,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종규 연구위원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현지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뉴 노멀’ 시대에 들어선 세계경제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가 남북관계의 디딤돌이 되어 대북 지원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2월

원장 이일형

국문요약

중국은 2002~2011년 동안 연평균 9%가 넘는 고도성장을 거듭해왔으며, 북한은 무역을 통해 중국 고성장의 혜택을 입으며 경제적인 안정기를 누렸다. 2000년대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1990년대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에 대한 자원수출 확대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북한의 내적 동인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외부 요인에 따라 빠르게 심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2012년부터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북·중 무역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면서 북·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북·중 교역환경 변화가 북·중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0년대 중국 경제 성장의 수혜로 경제안정을 누리던 북한의 경제와 무역이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였고, 2012년부터 시작된 중국경기 둔화가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중 경제협력을 국경을 마주한 국가간 분업체제로 규정하고, 분업체제 형성과 심화 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뒤, 중국 중앙정부와 라오닝 및 지린 지방정부가 경기 둔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일련의 정책이 이러한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북·중 분업체제 형태를 변화시켰는지를 밝혔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자료와 방법론에 있다. 먼저 연구 자료는 기존연구에서 사용되지 않던 새로운 중국 세관별 북·중 무역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중 무역이 단순교역에서 위탁가공과 중간재 교역으로 발전하는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응하여 무역의

일부를 중국을 경유한 대한, 대일 무역으로 우회하고 있을 가능성을 밝혔다. 연구방법은 북·중 경제협력을 분석하는 이론 틀을 제시하고, 중국 현지조사를 수차례 실시함으로써 차별화하였다.

연구내용을 보면 제2장에서는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분업체계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북·중 분업체계는 생산의 분업과 소비의 분업으로 구분하였는데, 생산의 분업이란 북·중 접경지역에서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을 매개로 중국 내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공정 일부가 북한으로 이동(production sharing)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의 분업이란 북한에 필요한 소비재를 중국이 조달하고 북한이 이를 소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규정한 북·중 분업체계는 북한과 북한에 접경한 중국 동북 2성 간 경제협력관계로 한정하였다.

생산의 분업은 상품교역에서의 위탁가공, 서비스 교역에서의 해외노동자 파견, 북·중 접경지역 관광, 광업투자, 중국의 북한수역 조업 및 수산양식투자, 중국의 대북 부동산투자, 운수업투자, 철도·도로·항만 건설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요구와 북한의 노동자 호응에 따라 중국이 기획하고 북한이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접경지역 관광의 경우, 관광상품 개발을 북한이 아닌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소비의 분업은 일반 소비재 교역을 통해 주로 형성되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향후 북·중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북한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중국의 요인으로 중국의 환경보호정책 강화와 철강산업 구조조정,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꼽았다. 환경보호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정책 강화, 경제성장 둔화와 더불어 국제시장에서의 철강 수요 감소 및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은 북·중

무역을 견인해온 북한 무연탄과 철광석의 대중 수출 정체 혹은 감소를 야기하였다. 한편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내 인건비와 사회보장비용이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동시에 북한과 국경을 접한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젊은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력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의류, 수산물 가공 등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북한 노동자가 산업연수생 형태로 파견됨으로써 노동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이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도 동북지역 중소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북·중 경제협력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북한의 요인은 북한 당국의 자력갱생 기조와 분권화 정책에 있다. 북한은 민족자립경제를 정책목표로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생산역량이 부족하여 각 경제주체는 주어진 성과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중국 동북지역 사업자와의 협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협업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중국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북한 대중 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이 국내에 부족한 생필품과 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하여 광물 위주의 수출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광물 수출과 탄광 개발을 중심으로 북·중 분업이 발전하였다. 또 생산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지하자원 개발권과 이용권을 활용하고 있다. 향후 북·중 경제협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투자로 경제협력이 가능한 위탁가공무역과 더불어 경제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외자 유치를 위한 접경지역 관광과 해외노동자 파견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분석결과를 생산과 소비의 분업 측면에서 정리하면, 생산의 분업은 접경지역 관광, 해외노동자 파견,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소비의 분업은 중국

랴오닝과 지린성의 대북 변경지역 소액무역과 대북 수산물 수입을 통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해관 통계를 활용하여 2010~2014년 동안 북·중 무역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분업, 성별 분업 현황을 살펴본 뒤, 비교우위 품목을 분석하였다. 먼저 무역 형태별 분류를 보면, 북·중 간의 가공무역은 2003~2010년 동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2011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위탁가공무역은 주로 의류와 수산물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무역은 한국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2010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중국 지역 내 창고를 이용하여 한국, 일본 등 제3국으로의 우회수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북·중 무역을 생산과 소비의 분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생산의 분업은 석유, 고무, 플라스틱, 특수직물 등 위탁가공에 필요한 원자재와 연료 품목과 더불어 견과류, 수산물, 의류 등의 주요 수출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일반무역과 변경무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이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북 수출을 장려함에 따라 2004년 이후 북·중 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그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일반무역을 통해 원자재와 건설자재, 식품류를 주로 수입하고, 변경소액무역을 통해 곡류와 생활용품을 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활용하여 동북 2성과 북한의 주요 비교우위 품목을 살펴본 결과, 북한과 다렌 사이에 생산의 분업이 나타나고 있었다. 다렌의 대북한 RCA는 섬유 또는 의류가공에 필요한 원재료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대다렌 RCA는 원재료보다는 완제품 의류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북·중 접경지역 대북 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면담자는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북·중 분업체계의 개념과 형태, 추세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과 중국의 대북 위탁가공을 중심으로 한 북·중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공감하였다.

제6장에서는 북·중 분업체계의 심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분업체계의 심화는 북한 시장화와 개혁·개방 촉진, 북한 경제난 해소와 경제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북한자원 선점과 더불어 남북경제통합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IT 산업협력, 중국 나진항 개발 참여, 북·중 호시무역구 진출, 북한의 GTI 재가입 유도 등을 통한 남·북·중 다자협력 등의 정책제언을 하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후 5·24 대북 제재의 단계적 해제 방안 및 남북통화 교환비율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차 례

Ⅰ 서언	3
Ⅱ 국문요약	5
Ⅲ 제1장 서론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8
2.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와 중국경제 종속논쟁	2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4. 연구의 범위와 구성	34
Ⅳ 제2장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분업체계	39
1. 북한 무역의 구조적 특징	40
가. 자원유출형 수출구조	40
나. 높은 대중 무역비중	42
2. 북·중 경제협력 심화	46
가. 무역	46
나. FDI	50
3. 북·중 분업체계	53
가. 분업체계 개념 및 정의	53
나. 분업체계 현황	60
Ⅴ 제3장 북·중 분업체계의 결정요인과 전망	67
1. 중국의 분업 결정요인	69
가. 중국의 북한산 지하자원 수입 감소	69
나. 중국 인건비 상승과 북한인력 수요 증가	82

다.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북 경제협력 강화	87
2. 북한의 분업 결정요인	97
가. 인민생활향상정책과 자력갱생의 한계	97
나. 열악한 생산인프라와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104
다. 외화벌이 수단의 다각화 필요성	110
3. 소결	118

Ⅱ 제4장 무역과 북·중 분업체계 121

1. 데이터	122
2. 현황	127
3. 북·중 분업체계	142
가. 소비의 분업체계: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	142
나. 생산의 분업체계: 가공무역	148
다. 성별 분업체계	155
4. 현시 비교우위지수로 본 분업체계	161
5. 소결	170

Ⅲ 제5장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분업체계 실태조사 173

1. 조사방법	175
2. 조사내용	176
가. 북·중 분업체계에 대한 인식	177
나. 중국 경제성장을 둔화가 북·중 분업체계에 미치는 영향	178
다. 에너지관리정책 및 환경보호정책이 북한산 자원 수출에 미치는 영향	181
라. 중국의 인건비 증가와 북한인력 수요 증가	183
마. 동북지역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강화	185

3. 소결	188
Ⅱ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91
1. 요약	192
2. 시사점	201
가. 북·중 분업체계 형성의 긍정적 측면	201
나. 북·중 분업체계 형성의 부정적 측면	204
3. 정책제언	206
가. 다자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	208
나. 남북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제언	212
Ⅱ 참고문헌	217
Ⅱ 부록	229
Ⅱ Executive Summary	233

표 차례

표 2-1. 중국 주변국의 대중 수출입 비중	43
표 2-2.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과 남북교역의 규모 비교	48
표 2-3. 북한의 총 FDI 순유입	51
표 3-1. 에너지 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년)	71
표 3-2. 석탄산업 안정적 운영에 관한 의견(2013년)	73
표 3-3. 석탄 수입 관세조정에 대한 통지	74
표 3-4. 북한산 무연탄에 대한 중국 당국의 품질검사 결과	75
표 3-5. 중국 전체와 동북지역의 GDP 추이 비교	88
표 3-6. 단둥 통상구 물류·인원·교통수단 이동 현황	92
표 3-7. 중·북 접경 민간 호시무역구(中朝边民互市贸易区)	93
표 3-8.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 물류·인원·교통수단 이동 현황	95
표 3-9. 훈춘 주요 신성장산업 진출 사례	96
표 3-10. 대북자원 개발에 대한 중국의 주요 투자 현황	107
표 4-1. 북·중 무역통계 출처별 비교(2015년 기준)	122
표 4-2. 무역형태별 무역액과 비중	140
표 4-3. 일반무역 분류하 북한의 대중 수입	143
표 4-4. 변경소액무역 분류하 북한의 대중 수입	144
표 4-5. 일반무역 분류하 북한의 대중 수출	145
표 4-6. 변경소액무역 분류하 북한의 대중 수출	146
표 4-7. 북·중 간 가공무역 규모	149
표 4-8. 가공무역의 연도별 변화 추이	150
표 4-9. 북한의 대중 수입 가공무역 주요 품목 종류	151
표 4-10. 북한의 대중 수출 가공무역 주요 품목 종류	152

표 4-11. 북한의 대중 수출 세관별 가공무역 규모	154
표 4-12. 중국 성별·세관별 북·중 무역 수입	156
표 4-13. 중국 성별·세관별 북·중 무역 수출	158
표 4-14. 대중 수출입의 세관별 품목당 거래량	160
표 4-15. 북·중 간 $RCA > 1$ 인 품목수(HS코드 2단위)	162
표 4-16. 북한에 대한 다롄의 현시비교우위지수 품목 순위	164
표 4-17. 다롄에 대한 북한의 현시비교우위지수 품목 순위	165
표 4-18. 북한에 대한 장춘의 비교우위	167
표 4-19. 장춘에 대한 북한의 비교우위	168

그림 2-1.	북한의 무역액 추이	41
그림 2-2.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 추이	44
그림 2-3.	북·중 분업체계 분석의 필요성	47
그림 2-4.	분업체계의 개념	55
그림 2-5.	국제 분업체계의 형성 조건	57
그림 2-6.	분업체계의 발전	59
그림 2-7.	분업체계 분야 및 현황	62
그림 3-1.	중국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 변화 흐름도	76
그림 3-2.	중국의 철강 수출입 증감률(2008~2015년 5월)	78
그림 3-3.	중국 철강생산증감률(2000~2014년)	79
그림 3-4.	중국의 철광석 수입 감소 배경	81
그림 3-5.	도시별 평균임금(2004~2013년)	83
그림 3-6.	전국취업인원의 산업별 구성현황(2010~2014)	85
그림 3-7.	중국의 접경지역 및 북한 내 노동인력 수요 상승 배경	86
그림 3-8.	중국 동북지역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강화 배경	91
그림 3-9.	북·중 간 생산과 소비 시장에서의 분업체계 형성 배경	104
그림 3-10.	북·중 간 제조업·경공업 분야에서의 분업체계 형성 배경	110
그림 3-11.	관광협력과 해외인력 파견을 통한 북·중 분업체계의 형성	111
그림 4-1.	상품교역의 분업체계 분류	129
그림 4-2.	북한 대중 수출의 무역형태별 규모 추이	130
그림 4-3.	북한 대중 수입의 무역형태별 규모 추이	131
그림 4-4.	북한 대중 수출의 무역형태별 분류	132
그림 4-5.	북한 대중 수입의 무역형태별 분류	137

그림 6-1.	분업체계 형성의 긍정적 측면	201
그림 6-2.	분업체계 형성의 부정적 측면	205
그림 6-3.	북·중 분업체계 활용의 정책적 목표	207
그림 6-4.	다자협력 방안	209
그림 6-5.	남북경제협력 강화 방안	213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	훈춘 취안허(圈河), 투먼(图们), 카이산툰(开山屯), 샤퉈즈(沙坨子) 통상구 물류·인원·교통수단 이동 현황	230
부록 표 2.	싼허(三合), 난핑(南坪), 구청리(古城理) 통상구 물류·인원·교통수단 이동 현황	231
부록 표 3.	창바이(长白), 린장(临江), 지안(集安) 통상구 물류·인원·교통수단 이동 현황	232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와 중국경제 종속논쟁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범위와 구성



1. 연구 배경 및 목적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76억 1,000만 달러(수출 31억 6,000만 달러, 수입 44억 5,000만 달러)로 2013년 대비 3.7% 증가하였다. 북한의 대중 무역은 68억 6,000만 달러(수출 28억 4,000만 달러, 수입 40억 2,000만 달러)로 전체 무역의 9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4.9% 증가하였다.¹⁾ 대중 무역비중은 2005년 처음 50%를 돌파하여 52.6%를 기록하였고, 2008년 73.0%, 2010년 83.0%를 기록하였다. 반면 한국의 대중 무역 비중은 2007년부터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영향력이 상당한 수준까지 확대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2014년의 90.1%라는 대중 무역비중은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종속을 우려할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²⁾ 2014년

1) KOTRA 중국사업단(2015, Online, 검색일: 2015. 8. 2). KOTRA의 2014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은 자체적으로 추정한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량을 포함함. 자체적으로 추정한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량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2014년 북한의 무역량은 2013년에 비해 소폭 감소됨. 중국해관(세관)은 2014년 대북 원유수출량을 '0'으로 공식 발표함. 북한은 원유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이 대북 원유수출을 중단할 경우 장마당의 휘발유 값 상승과 산업 생산 중단 등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 북한 장마당의 휘발유 가격이 북한 원화로 1만 3,000원(위안화 10원, 한국 원화 1,800원)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북한의 『노동신문』을 비롯한 『조선신보』 등에도 북한이 원유 부족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보도된 바 없음. 이에 대북 원유수출이 계속되고 있거나 혹은 다른 수단으로 대체되어 지속되고 있음에도 중국해관이 이를 의도적 혹은 기술적으로 누락시켜 '0'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음. KOTRA는 2009~2013년 동안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량을 평균하여 2014년 대북 원유수출량으로 계산한 뒤 통계에 포함하고 있음.

2)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 증대를 두고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음. 북·중 무역은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무역의 대부분이 일반상품이기에 이후 남북경제협력이 확대되고 북·일 무역이 재개되면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임. 이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자세히 논함.

의 대중 무역은 2013년 12월 북·중 경제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장성택의 처형과 2014년 1월부터 중단된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 중단³⁾으로 소원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확대된 것이어서,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욱 클 가능성이 있다. 2015년 10월 류원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면서⁴⁾ 2016년에는 북·중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중국경제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가능성을 넘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첫 번째 필요성은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북한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영향력 확대는 남북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제목에 포함된 ‘북·중 분업체계’라는 용어는 자립자족의 폐쇄경제를 지향하는 북한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 더군다나 경제관계에 있어 북한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국경제에서 북한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크기에 이런 비대칭적인 관계를 분업체계라는 용어로 표기하는 데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왜곡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분업체계라는 용어의 사용은 더욱 조

3) 「중국 대북 원유수출, 사상 첫 5개월 연속 ‘제로’」(2014. 6. 26, Online, 검색일: 2015. 5. 20). 이 기사는 이후 연합뉴스를 통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음이 밝혀짐. 「정부 “中, 北에 50만t 원유 지원 추정… 예년 수준”」(2015. 9. 17, Online, 검색일: 2015. 5. 20).
4) 류원산 “전통적 북중우호 추진, 김정은과 광범위한 합의” (2015. 10. 10, Online, 검색일: 2015. 10. 11).

심스러운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분업’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북한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관계를 분석해볼 때, 현재 북한의 중국 일변도의 경제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적합한 말이 될 수 있기에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⁵⁾ 분업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생산의 모든 과정을 여러 전문적인 부문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이 분담하여 일을 완성하는 노동 형태를 일컫는다. 북·중 간에 분업체계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북한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장기간 지속되면서 단순 무역에서 산업적 연계를 갖는 형태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북·중 간의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에서 양국의 역할과 기능이 특정화되고 고착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의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중 경제협력을 분업이라는 구조와 틀로 분석함으로써 경제협력의 법칙과 특징을 밝히고, 이론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충격(economic shock)이 분업의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 밝혀 향후 북·중 경제협력의 변화과정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필요성은 중국의 경기 둔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2002~2011년 동안 연평균 9%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은 2012년부터 연평균 7%대 성장률을 보이며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높은 대중 무역비중을 보이고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임호열 외(2015)는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북한의 무역은 교역국

5) 북·중 경제관계가 분업화의 수준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제기한 다른 연구에서는 “북한시장의 변화에서 포인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국제시장과 네트워크의 형성과 분업화이다”라고 함(이석기, 양문수, 정은이 2014, p. 108).

의 경제규모에 영향을 받으므로 중국의 GDP 성장률이 감소할 경우 북·중 무역의 성장률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북·중 무역의 성장률 감소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북·중 무역의 감소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이다. 2015년 상반기에는 북·중 무역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자원개발팀(2015)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북·중 총무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13.4% 감소(수출은 10.6% 하락, 수입은 15.8% 하락)하였으며, 주력 수출품목인 석탄, 철광석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9.1% 하락하였다. 다만 2015년 하반기에 북·중 관계가 개선된다면, 하반기의 무역 증가액이 상반기의 감소액을 상쇄하고 남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2015년 상반기의 무역액 감소가 2015년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북한이 무역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지 여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중 경제협력이 양국에 어떤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밝혀 중국의 경기 둔화가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중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과 철광석이 중국 경기 둔화에 어떠한 경로를 거쳐 영향을 받는지를 밝혀 중국 경기 둔화가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밝히고자 한다. 또 상품무역 외의 분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북·중 접경지역 관광,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향후 중국의 경기 둔화가 북·중 경제협력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북·중 경제협

력을 분업체계의 틀로 분석하여 분업체계의 형태와 현황 및 추이를 살핀 뒤, 분업체계를 매개로 북한경제가 중국경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분업체계의 형성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를 남북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에 어떤 형태로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살피고자 한다.

2.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와 중국경제 종속논쟁

북·중 분업체계에 대한 논의는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종속논쟁과 맥을 같이한다.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종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이 높아지고 북한광산 개발에 대한 중국의 투자 관련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북한 학계에서는 이른바 북한경제가 중국경제에 예속될 가능성도 검토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⁶⁾ 이른바 북한의 중국경제 종속논쟁이다. 중국경제 종속논쟁은 장차 통일한국의 경제적 번영과 성공을 위한 전략 수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여겼기에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남북경제통합과 남북통일의 관점에서, 또 동북아 경제통합과 동반성장을 위한 방향 정립을 위해서도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할 논의 주제이다.

본 연구는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종속논쟁을 북·중 분업체계와 밀접한

6) 『북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 의미와 배경』(2002. 9. 19, Online, 검색일: 2015. 7. 20); 『中 기업들, 북한 투자 열기 높아』(2004. 6. 29, Online, 검색일: 2015. 10. 20).

관련이 있는 북한시장화 촉진과 남북경제통합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종속논쟁의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 증가는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종속을 의미하는가?’이다. 둘째는 ‘북·중 무역이 확대되면서 단순 무역을 넘어서 산업적 연계를 갖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는가?’이다. 두 번째 쟁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북·중 무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북·일 무역과 남북교역을 대체하였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북·중 무역이 북·일 무역과 남북교역을 대체하였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중 무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국 동북 2성 기업의 생산 공정의 일부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혹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북·중 국경을 매개로 한 생산의 분업이 형성되었느냐이다. 셋째는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상승은 남북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통합 중 어느 것에 더 기여 혹은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가?’이다. 북한의 대중 무역이 다른 국가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면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예속은 단기적인 것이기에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그만큼 북·중 무역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북·중 간에 산업적 연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북한의 대중 무역이 대체 가능하더라도 일부만 가능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산업적 연계를 바탕으로 무역량이 증가될 것이다.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종속을 논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이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논쟁의 첫 번째 쟁점을 살펴보자.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 증가는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종속을 의미하는가?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2000년대 중반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이다.⁷⁾ 북한의 높은 대중 무역의존도로 북한경제

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남북경제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먼저 제기되었다(김광일 2005). 당시 높은 대중 무역비중과 함께 북한광산에 대한 투자 발표가 이어지면서 북한의 중국경제에 대한 종속논쟁은 현실이 되는 듯하였다.⁸⁾ 당시에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조명철 외(2005)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된다면 중국이 통일에 앞서 북한경제 자원을 선점하여 남북경제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윤병수, 동애영(2010), 윤병수(2012)도 북·중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의 소득 향상과 구매력 확대를 야기하여 남북경제 격차를 줄이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남한의 대북 영향력 약화와 중국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대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반대 논의도 이어졌다. 북한의 대북 의존도 심화는 염려할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북한의 시장경제 이행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중국은 1990년대에 그간 고수하던 ‘사회주의 식 계획경제’에서 ‘계획’을 포기하고 ‘사회주의 경제’로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은 아직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생필품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경제개혁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동호, 이상근(2008)은 북한의 중국경제 예측론의 근거는 불충분하며, 한국이 중국의 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많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KDI 북한경제리뷰』(2010)의 김병

7) 『北 종합시장 거래상품 80% 중국산』(2005. 9. 30, Online, 검색일: 2015. 10. 24).

8) 『北·中 경제협력 가속… 南北은 정체』(2005. 5. 29, Online, 검색일: 2015. 5. 10).

연과 김석진의 토론도 북·중 경제협력 확대를 관망해야 한다는 시각을 잘 보여준다.⁹⁾ 김병연은 북한의 중국경제 의존도는 다소 과장된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남북교역을 포함할 경우, 한국은 여전히 북한의 주요 수출국이며, 한국과의 무역에서 얻은 돈을 대중 무역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석진은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 상승은 일종의 개방과정으로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중국의 투자자본이 북한의 자원개발과 전력, 교통인프라 등에 투자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분야는 초기에 매우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필요하고 사업의 경제성도 높지 않아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전망하였다. 윤덕민(2006)은 북·중 경제협력 심화는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별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면이 있다고 보았다.¹⁰⁾

다음으로 종속논쟁의 두 번째 쟁점을 보자. 두 번째 쟁점은 북·중 무역이 확대되면서 단순 무역을 넘어서 산업적 연계를 갖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논쟁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북·중 무역이 북·일 무역과 남북교역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북·중 무역이 위탁가공 등 생산공정의 공유를 포함한 산업적 연계 수준으로 발전하였는지 여부이다. 먼저 북·중 무역이 북·일 무역과 남북교역을 완벽하게 대체하였는지를 살펴보자.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 상승을 두고 염려와 관망의 시각이 제기된 가운데, 북한의 중국경제 종속논쟁은 북·중 경제관계의 고착성과 실효성을 분

9) 한국개발연구원(2010).

10) 윤덕민(2006. 3. 24, Online, 검색일: 2015. 9. 24).

석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북·중 경제관계를 분석하자는 시각이 제기되었다. 이석(2008, 2010)과 이영훈(2011)은 북·중 무역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북·중 무역이 남북, 북·일 무역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석과 이영훈은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 이석은 북·중 무역이 기존 북·중 무역에 없었던 북·일 무역과 남북교역의 분야를 흡수하지 않고, 기존의 북·중 무역의 분야를 확대 발전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석은 북·중 무역은 북·일 무역과 남북교역을 대체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이영훈은 북·중 무역이 북·일 무역과 남북교역을 대체하였다고 보았다.

본 연구진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의 양자 대북 제재는 크게 세 가지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효과는 제재효과로 대북 제재로 인해 일본과 한국의 대북 무역이 실제로 없어져 북한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며, 두 번째 효과는 삼각 무역효과로 양자 대북 제재 이후 양국의 무역이 사라지지 않고 중국을 매개로 북→중→일, 북→중→한의 무역 형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효과는 대체 효과로 북·중 무역이 북·일 무역과 남북교역을 흡수하여 대체한 것을 말한다. 이석과 이영훈이 북·중 무역의 대체 여부를 분석한 것은 2010년과 2011년으로 5·24 대북 제재조치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북 제재 조치의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진행 시기인 2015년은 이로부터 5년이 지나 제재와 관련된 통계가 구축되었기에 확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더욱 명확한 후속연구를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종속논쟁의 두 번째 쟁점 중 두 번째 부분인 북·중 무역이 확대되는 과정 중에 일반무역이 생산공정을 연계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

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살펴보자.

북·중 경제협력이 단순 무역에서 투자·생산으로 확대되는 질적 변화가 있음을 밝힌 연구로는 정은이, 박종철(2014)이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북·중 경제협력에 질적 변화가 나타나 무역거래 관계가 협력관계(partnership)로 발전하여 합작(합영) 형태로 중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고 위탁 가공하는 형태가 증가한다는 것이다.¹¹⁾ 언론에서도 북·중 경제협력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¹²⁾

그러나 정은이, 박종철의 연구가 북·중 경제협력이 단순 무역에서 투자·위탁가공의 형태로 확대 변화되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은 방법론상 한계를 가진다. 이들이 주로 사용한 방법론은 현지조사와 인터뷰이다. 그러나 현지조사와 인터뷰는 좁은 지역 연구나 특정 현상의 발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을 가지나 국가나 산업 전체의 거시적인 변화 방향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 투자·위탁과 관련한 경제협력에 대한 통계를 찾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부분적으로 통계자료가 보도된 적은 있으나, 통계의 신뢰성과 연속성 측면에서는 불완전하다. 이는 북·중 경제협력의 당사자인 북한의 통계 구축 능력 부족과 공식통계 발표 금지조치 때문이기도 하며, 논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이 통계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도 통계자료 부족 문제에서 예외는 아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중국해관에서 제공하는 통계 중 무역방식별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투자·

11) 관련 연구로 박건일(2006) 참고.

12) 「북·중, 경제협력 방식 변화 조집」(2004. 6. 1, Online, 검색일: 2015. 5. 10); 「중, 북한시장 공략 장기계획」(2005. 5. 31, Online, 검색일: 2015. 10. 21).

위탁가공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해관 통계는 북·중 무역을 일반무역, 변경무역, 위탁가공, 보세창고를 활용한 무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어 북·중 무역의 질적인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종속논쟁의 세 번째 쟁점은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가 남북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통합 중 어느 것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 혹은 북·중 경제협력 강화가 남북 경제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여부이다. 그러나 이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북·중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것이 실제로 중국 당국의 정책적 장려와 한국과 일본의 양자 대북 제재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경제적 요인이 있는 것인지 살펴야 하며, 둘째,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북·중 경제협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의 진행 없이는 북·중 경제협력이 기존의 무역과 어떠한 질적 차이를 보이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 발전해갈 것인지, 또 그것의 영향은 어떤 수준이 될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학계에서는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종속 여부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종속논쟁의 이유가 북한경제가 중국경제에 종속되어 있는지, 또 그것이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중국의 지원 없이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북한경제와 중국경제 간의 산업적 유착 때문인지 구체적인 논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종속논쟁을 이어받아 북한경제와 중국경제가 산업적 유착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무역자료

분석과 현지조사,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북·중 무역과 경제 협력사업 등 북·중 경제협력을 북·중 분업체계의 틀에서 분석하여, 북·중 분업체계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고, 이들이 현재 중국과 북한의 교역환경과 경제정책 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종속논쟁의 세 번째 쟁점으로, 북·중 분업체계 분석이 남북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분업체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라는 말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말은 하나의 상품이 무역을 통해 각 국가별로 서로 다른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중국이 고속성장을 하면서 동북아 국가의 대중 무역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중간재와 자본재 무역을 매개로 산업적 연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재호, 고일동, 김상기(2010)가 밝힌 바와 같이, 북한과 중국의 분업체계 형성은 북한이 중국을 매개로 산업적 연계를 통해 동북아 역내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경제난 해소와 외화벌이를 원하는 북한과 폐쇄적인 북한을 상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제 해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자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중국 동북 2성(랴오닝성, 지린성)의 국지적인 산업적 연계과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업체계는 북·중 접경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에 있어 생산공정연계(production sharing), 소비에 있어 조달(procurement)과 소비의 고착화의 과정을 일컫는 것이다.

오히려 분업체계라는 말은 국제분업(international specialization)이라는

말과 유사한 점이 있다. 국제분업은 무역의 원동력이 되는 비교우위에서 착안한 것으로 크게 수직적 국제분업(vertical international specialization)과 수평적 국제분업(horizontal international specialization)으로 나뉜다. 수직적 국제분업은 기술격차가 큰 양국간에 무역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술력이 낮으나 부존자원이 많은 국가가 기술력이 높은 국가에 자원을 수출하고 기술력이 높은 국가로부터 소비재를 수입하는 관계를 일컫는다. 수평적 국제분업은 양국간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거나, 혹은 한 국가의 기술수준이 낮더라도 인구가 많아 저렴한 노동력의 수출이 가능한 국가와 기술력이 높은 국가간의 무역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수직적 국제분업 관계와 수평적 국제분업 관계가 발전의 선후 관계를 갖지는 않는다. 국제무역의 시작과 함께 수직적 국제분업과 수평적 국제분업은 함께 존재한다. 다만 최근 들어 다국적기업이 빠르게 성장한 점, 선진국-개발도상국의 무역규모 성장률보다 선진국-선진국의 무역규모 성장률이 더욱 빠른 점 때문에 수직적 국제분업보다 수평적 국제분업의 성장이 더욱 큰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분업체계는 상술한 수직적 국제분업과 수평적 국제분업의 관계를 모두 포괄한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북한이 중국에 자원을 수출하고 중국이 북한에 소비재를 공급하는 수직적 국제분업체계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것이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북·중 교역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북·중의 수직적 분업체계가 수평적 분업체계로 변해가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평적 분업체계의 맹아가 되는 것은 의류산업과 양식을 매개로 한 수산업, 관광 등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양국의 지배적인 분업체계는 수직적

분업체계이다.

다만 수직적 분업체계와 수평적 분업체계의 개념이 모두 무역을 통한 생산공정의 분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북·중 경제협력을 이해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는 판단하에, 본 연구에서는 이와 별개로 생산의 분업과 소비의 분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물론 수직적 분업체계와 수평적 분업체계 역시 소비의 부분을 포괄하고 있으나, 북·중 경제협력에서도 소비의 분업 형태가 2000년대 중후반 기에 접어들면서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분업체계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제2장에서 다룬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연구 자료와 방법론에 있다. 본 연구의 자료는 중국해관(세관)이 제공하는 2010~2014년 북·중 무역통계로, 각 HS코드 8단위로 세관별·연도별·국가별·무역형태별 수출입 물량과 수출입액을 포함하고 있다. 무역형태별 수출입은 기존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던 새로운 것으로 세관¹³⁾과 무역형태를 활용하면, 각 세관에 있어 무역형태의 변화가 갖는 시사점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중 무역에 있어 라오닝성과 지린성의 대북 무역의 차이점도 분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대북 일반무역, 변경무역, 무상원조, 위탁가공, 보세창고를 활

13) 라오닝성에는 다렌 세관과 선양 세관 등 총 2개의 상급 세관이 있으며, 지린성에는 지린 세관 등 총 1개의 상급 세관이 있음. 하급 세관인 단둥 세관의 통계는 상급 세관인 다롄 세관 통계에 포함됨.

용한 무역 등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중 무역도 동일한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다. 연간 북·중 무역을 입체적으로, 또 시계열적인 북·중 무역을 동적으로 분석하게 해주는 자료를 활용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다.

본 자료와 동일한 수준의 구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KITA(한국무역협회)의 월별 북·중 무역통계를 꼽을 수 있다. KITA에서는 HS코드 8단위에서 성별·국가별 수출입액을 제공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개시가 목적이기에 학술 연구를 위해 다운로드를 할 수 없으며, 무역형태별 수출입액도 추정할 수 없다.

연구방법론의 차별성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분업체계’를 분석하는 분석 틀을 제시하고 구조적 접근을 한 것이며, 둘째는 대북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의 대북 경제협력에 연관된 시설과 지역을 현지조사하고 관계자를 심층 면담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업체계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경을 매개로 한 분업체계의 분야와 발생 유인, 각 분야별 발생 유인의 차이와 성장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북·중 무역과 경제협력에 적용하여 결정요인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제시된 분석 틀은 북·중 경제협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이론적 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중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경제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분업체계 분야별로 어떠한 경로를 거쳐 상이한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밝히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현대경제연구소(2009)에서는 북·중 경제협력의 5대 특징으로 다음을 제시한다.¹⁴⁾

- ① 북한 지하자원의 대중 유출 심화
- ② 북한 전략물자의 대중 의존도 심화
- ③ 대중 교역의 지역 편중성 심화
- ④ 중국의 전략적인 대북 인프라(SOC) 투자
- ⑤ 북·중 관광 협력의 확대

현대경제연구소(2009)에서는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 배경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한다.¹⁵⁾

- ① 북·중 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전략적 이해의 공유
- ② 북·중 간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의 추구
- ③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증대와 북한 선점

현대경제연구소의 분석은 구조적인 틀 없이 정성적 분석을 통해 특징과 배경을 분석하고 있는 데 반해, 본 연구의 ‘분업체계’ 분석 틀에서는 북·중 경제협력의 특징이 북·중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현상은 아니며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자국 생산 비용보다 주변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저렴할 경우 주변국과의 경제

14) 현대경제연구소(2009), ‘요약’ 페이지에서 인용.

15) 위와 동일.

협력을 통해 비용이 더 저렴한 상품과 서비스 등을 조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에는 경제협력 분야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들 분야의 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업체계요인(예를 들면 관세)까지 분석하여, 각 변화요인(economic shocks)이 분업체계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인 변화추세와 유인을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북·중 경제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통해 새로운 결정요인을 규명한 것이 본 연구의 차별성이다.

현지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분업체계’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립한 개념의 현실적합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있다. 현지조사는 2015년에 총 3회 진행되었으며, 북·중 무역과 경제협력 동향, 본 연구에서 개념화한 분업체계 분석방법의 현실 적합성과 전망, 문제점 등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문헌조사와 통계자료 분석 외에도 현지방문 조사를 함으로써 북·중 경제협력의 실태를 더욱 현실감 있게 파악한 것이 이 연구의 차별성이다.

4. 연구의 범위와 구성

분석의 대상은 북·중의 모든 경제협력을 포괄한다.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의 사용을 명확히 하면, 북·중 경제협력은 양국간 경제협력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북·중 무역과 모든 경제협력사업을 포함한다. 무역은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을 칭하는 것이며, 경제협력사업은 양국간에 벌어지는 모든 무역 외적인 경제협력 행위를 일컫는다.

연구의 범위는 중국경제와 북한경제, 북·중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이다.

북·중 분업체계 분석을 위해 한·중·일 동북아 3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하기보다는 중국의 경제변화와 이와 연계된 북한의 경제와 무역을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상술한 바와 같이 첫째는 2010년 이후 북한의 무역이 동북아시아 국가와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산업적인 연계를 하고 있지 않아, 동북아 3국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계하여 북·중 무역을 연구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는 동 기간 동안 북한의 주요 무역국과 주요 투자국은 중국(북한 연평균 무역비중과 투자비중의 80%를 상회)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지역적 대상은 중국은 동북 2성과 일부 연안지역, 북한은 북한 전체이다.

분석 기간은 2010~2014년이며, 연구방법은 통계자료 분석 외에 문헌 검토와 현지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자료는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해관(세관) 통계로 2010~2014년 동안 중국 세관별·연도별·국가별·무역형태별 수출입량과 액이며, 현지조사는 2015년 3~10월까지 중국 동북지역에서 관계자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각 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자원유출형 수출구조의 형성과 대중 무역비중 심화의 배경을 분석한 뒤, 북·중 분업체계의 개념과 현황을 소개하였다. 이어 분업체계의 개념과 현황을 소개한 뒤, 북·중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을 분업체계의 틀로 분석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분업체계의 형성 배경과 결정요인, 성장과정의 이론적 근거를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중 분업체계의 결정요인을 중국의 요인과 북한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국의 요인에서는 기존의 북·중 무역 활성화를

견인해온 요인이 어떻게 구조적·정책적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변화가 분업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분석해보았다. 북한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북한의 최근 대내외 정책기조를 살펴보았다. 고난의 행군 이후 자력개생이 어려워진 북한이 내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또 대외환경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분업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2010~2015년간 중국해관 무역 통계에 기초하여 무역형태별, 세관별 분류를 통해 북·중 무역에 있어 소비의 분업과 생산의 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리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도출하여 북한과 다렌, 북한과 장춘 간 비교우위품목을 알아봄으로써 비교우위를 통해 북·중 분업구조의 형태를 추정해보았다.

제5장에서는 실제 대북 경제협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집경지역 인원을 대상으로 북·중 분업체계에 대한 심층면담 내용을 수록하였다. 특히 ‘북·중 분업체계’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과 제3장의 중국의 요인이 분업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장에서는 연구방법으로 심층면담을 토대로 중국 동북지역의 지역 언론을 살펴보았고, 또한 북·중 집경지역 통상구 통계자료를 함께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북·중 분업체계의 시사점과 이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하였다. 북·중 분업체계 심화의 긍정적 측면으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시장화 촉진, 북한의 경제난 해소, 남북의 경제격차 축소를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부정적 측면으로 중국의 북한 경제자원 선점, 북한경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축소로 인한 남북경제통합 장애를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정책제언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다자협력 방안으로 (남·북·중, 신규 협력사업 분야) IT 산업협력, 북·중 자유무역구 진출, 항일유적 관광단지 개발, (남·북·중·러, 기존 협력사업 분야) 동북아 범국가자유무역지대 개발, 북한의 GTI 재가입 유도, 나진·하산 프로젝트 확대 추진,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강화방안으로 남북통화 교환비를 연구와 한반도 비핵화 후 5·24 대북 제재의 단계적 해제 연구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전체 연구진의 업무 배분은 다음과 같다. 최장호 부연구위원은 연구의 총책임을 맡아 전체 연구를 기획하고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조율하였으며, 제1장과 제2장, 제6장을 주로 작성하였다. 최유정 연구원은 제3장의 2절인 북한의 분업 결정요인을 주로 작성하였으며, 전체 연구의 진행을 도맡았다. 임소정 연구원은 제4장을 주로 작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새롭게 분석한 중국해관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북·중 무역의 새로운 측면을 밝혀내었다. 김준영 연구원은 제3장의 1절인 중국의 분업 결정요인과 제5장을 주로 작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행해진 중국과 극동 러시아 현지조사를 모두 기획하여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 실태를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본 연구는 북·중 경제협력을 연구하면서 독창적인 시각과 새로운 연구결과를 찾는 것을 최대 목표로 두고 진행하였다. 부족하나마 본 연구가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에게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쓰이길 바란다.

제2장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분업체계

1. 북한 무역의 구조적 특징
2. 북·중 경제협력 심화
3. 북·중 분업체계



본 연구에서는 북·중 경제협력을 북·중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먼저 북한의 자원유출형 수출구조의 형성과 대중 무역비중 심화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어 분업체계의 개념과 현황을 소개한 뒤, 북·중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을 분업체계의 틀로 분석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분업체계 형성배경과 결정요인, 성장과정의 이론적인 근거를 소개하며 본 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1. 북한 무역의 구조적 특징

가. 자원유출형 수출구조

북한의 무역은 1999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1 참고). 수입과 수출이 증가한 시기가 다른데, 수입은 1998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수출은 2003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수입이 증가세에 있었던 2000년은 북한이 조선 노동당 창당 55주년 기념식에서 고난의 행군기 종료를 선언한 시기¹⁶⁾로 경제난에서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든 시기였다. 북한의 수출 증가는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북한이 수출 증가세로 접어들기 직전인 2002년은 중국이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시작한 첫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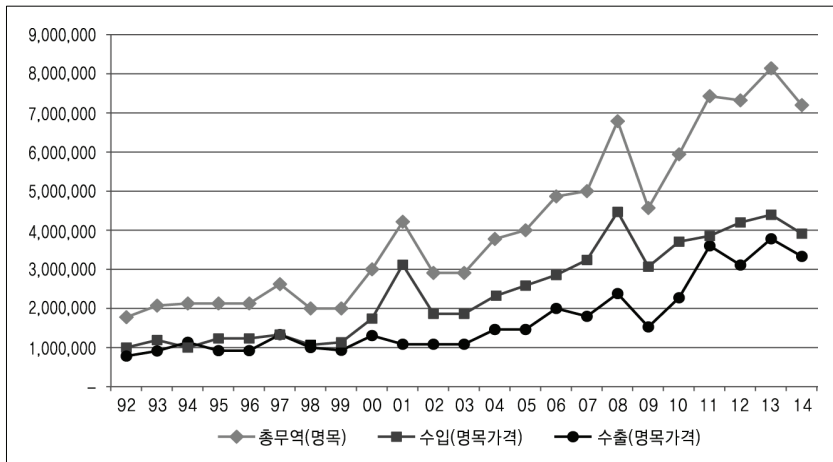
북한 무역의 특징으로는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자원유출형 무역구조, 중국에 경도된 무역형태를 들 수 있다. 먼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면, 북한의 무역은 1999년 이후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하면서 만성적인 무역적

16) 『고난의 행군 종료(송년특집)』(2000. 12. 13, Online, 검색일: 2015. 5. 4).

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으며, 발생한 무역수지 적자는 외화벌이를 통해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무연탄과 철광석으로 자원유출형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에 기인한 면이 크다. 중국은 2002~2011년 동안 연평균 9%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 원자재 소비의 블랙홀로 부상하였다. 중국이 세계의 제조공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원자재 수입이 급증하였는데, 중국의 광물수입 비중은 2001년 10.1%, 2006년 17.1%, 2011년 27.4%, 2014년 26.4%로 지속적인 증가세¹⁷⁾를 보였으며, 북한의 광물수출 비중 역시 2001년 6.6%, 2006년 48.2%, 2011년 65.1%, 2014년 53.7%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북한을 위시한 주변국은 원자재 블랙홀로 등극한 중국에 광물자원을 공급하며 자원유출형 수출구조를 형성하였다.

그림 2-1. 북한의 무역액 추이



주: 2000년부터 남북교역은 UN Comtrade 통계에서 제외됨.
 자료: UN Comtrade(Online, 검색일: 2015. 7. 7)의 북한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7) 통계수치는 UN Comtrade(Online, 검색일: 2015. 7. 7)를 활용하여 저자가 산출한 것임.

북한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별다른 기술력 없이 채굴하여 수출이 가능한 광물의 대중 수출 비중을 늘려가면서 중국의 다른 주변국보다 더 높은 비율로 광물을 수출하는 대중 자원유출형 수출구조를 갖게 되었다.

동 기간 동안 중국 주변국은 무역을 통해 중국 경제성장의 수혜를 입기도 하였다. 사실 중국은 2000년 이후 전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고 평가받기도 한다.¹⁸⁾ 중국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9%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중국의 주변국인 몽골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8.5%, 카자흐스탄은 22.6%, 미얀마는 3.1%, 베트남은 13.5%, 북한은 3.1%의 연평균 GDP 성장률을 보였다.

나. 높은 대중 무역비중

2000년 이후 북한과 한국을 포함한 모든 중국 주변국의 대중 무역비중이 증가하였다.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주변국이 이에 편승하여 대중 수출입액을 늘려간 것이다.¹⁹⁾ 이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대중 무역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몽골과 북한인데, 두 국가 모두 주요 수출품이 광물이고, GDP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18) 임조목(2007), p. 4.

19) 『고도성장 신흥국, 원자재 ‘블랙홀’ 됐다』(2011. 5. 11, Online, 검색일: 2015. 6. 15).

표 2-1. 중국 주변국의 대중 수출입 비중

(단위: %)

국가명	총수입 중 중국의 비중		총수출 중 중국의 비중	
	2000년	2010년	2000년	2010년
몽골	17	43	57	83
카자흐스탄	3	17	8	18
미얀마	11	27	6	6
베트남	9	24	11	11
북한	32	86	7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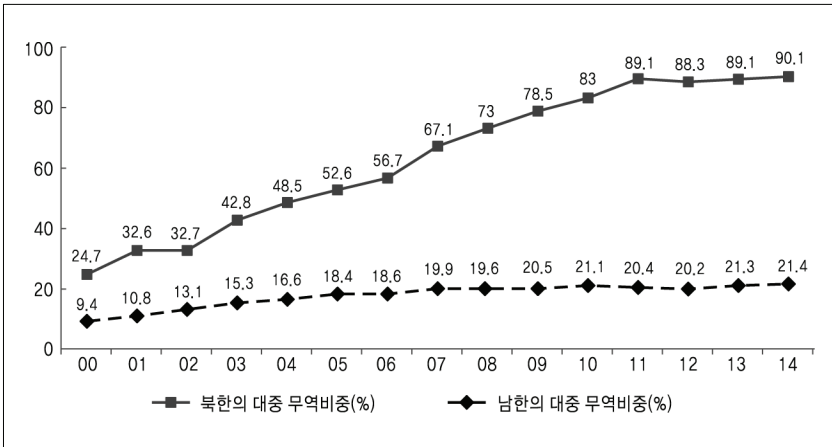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Online, 검색일: 2015. 7. 7)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만 2014년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은 90.1%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그림 2-2 참고). 2000년대 이후 중국 주변국 모두 대중 무역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은 무역을 하는 일반적인 국가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2014년 대중 무역의존도는 21.4%이다. 북한의 높은 대중 무역비중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과 중국의 대북 무역비중을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은 2000년 24.7%를 기록한 이후 2014년 90.1%를 기록하기까지 연평균 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중국의 대북 무역비중은 2013년 기준 0.16%로²⁰⁾ 별도의 증가율을 산출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학계 일부에서는 이런 북한의 높은 대중 무역비중을 근거로 북한경제가 중국경제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²¹⁾

20) 무역비중은 UN Comtrade(Online, 검색일: 2015. 7. 7)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산출한 것임.

21) 북한경제의 중국경제에 대한 종속논쟁은 본 장의 후반부에 소개되어 있음.

그림 2-2.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 추이



자료: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 KOTRA 중국사업단, 북한 대외무역 동향각 연도, Online, 검색일: 2015. 8. 2)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한국의 대중 무역비중: 한국무역협회(각 연도, Online, 검색일: 2015. 8. 4)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일부에서는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이 증가한 이유 중의 하나로 북한 주변국의 양자 대북 제재를 언급하기도 한다.²²⁾ 일본은 2006년에 한국은 2010년에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금지하였는데, 이들 국가의 양자 대북 제재가 국가간 무역대체와 삼각무역 확대를 유발함으로써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을 증가시켰다. 여기서 국가간 무역대체는 2006년 일본의 대북 제재로 북·일 무역이 북·중 무역과 남북교역으로 대체된 것과, 2010년 5·25 대북 제재 이후 남북교역이 북·중 무역으로 대체된 것을 일컫는 것으로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를 초래하였다. 또 삼각무역 확대는 양자 제재 이후 북·중 무역으로 대체되지 못한 북·일 무역과 남북교역이 중국을

22) 김영윤(2010); 「<5·24 조치 5년> ③ 북한의 대중의존도 급격히 커져」(2015. 5. 20, Online, 검색일: 2015. 6. 7).

매개로 한 삼각무역(북 → 중 → 일, 북 → 중 → 남)으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북·중 무역이 증가하였다. 중국을 매개로 한 삼각무역은 원산지 표시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확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³⁾

지금까지 북한이 자원유출형 수출구조를 가지게 된 배경과 대중 무역 비중이 증가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 배경에는 북한은 2001~2012년까지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되었던 중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북한이 무연탄과 철광석을 주력으로 삼아 대중 수출을 늘린 것이 있었다. 2006년 일본의 대북 제재와 2010년 한국의 대북 제재도 중국이 북한의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에서 가장 주요한 협력국이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이 대중 무역에 있어 자원유출형 수출구조를 가진 것과 대중 무역비중이 증가한 것은 중국의 주변국 중 북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중국 주변국 모든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이었으나,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 다른 주변국에 비해 북한 무역에서 자원 비중과 대중 무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3) 대북 제재 이후 국가간 무역대체와 삼각무역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음. 본 연구진의 현지조사 결과와 연합뉴스의 관련 기사를 보면, 대체로 국가간 무역대체와 삼각무역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데, 선행연구 중 이석(2010, 2013a)은 이에 반하는 주장을 펴고 있음. 반면 일부 품목에 한해 국가간 무역대체나 삼각무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연구도 있음. 관련 연구로 윤인주(201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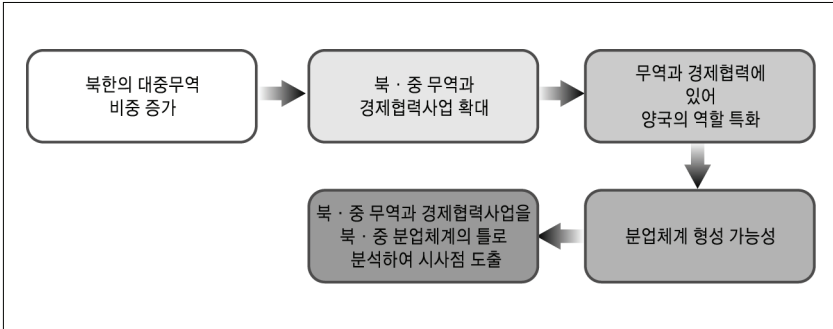
2. 북·중 경제협력 심화

가. 무역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분업체계는 북한의 대중 무역 비중이 높은 수준으로 장기간 지속되면서 양국간 무역이 단순무역에서 산업적 연계를 갖는 무역으로 성장하고, 경제협력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특정화되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칭한다. 북·중 무역은 무역액의 증대뿐만 아니라, 무역품목이 몇몇 품목으로 집중되면서 안정화되고 있고 무역액이 증대하는 동시에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협력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양국의 산업과 연계되고 있다.

분업체계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하면 [그림 2-3]과 같다. 즉 북한 무역에 있어 중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 무역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무역의 우호관계를 활용한 경제협력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에 있어 양국의 역할이 고착화되고 특화되고 있다. 역할 특화는 양국이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에서 분업체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북·중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을 북·중 분업체계의 틀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북한의 대북 무역의존도 심화를 다른 각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업체계의 틀과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북·중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2-3. 북·중 분업체계 분석의 필요성



자료: 저자 작성.

북·중 분업체계 분석을 위해서는 북한경제에 있어 중국경제의 역할과 비중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GDP와 총무역액과 무역 의존도를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먼저 북한의 GDP를 보면, GDP는 크게 한국은행과 UN이 추정된 것이 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 GDP가 UN GDP 추정치보다 더 큰 것은 북한의 생산 자료에 남한의 가격, 부가가치율, 환율 등을 적용하여 북한 GDP 추정을 함으로써 남한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변수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UN GDP의 추정치가 더 작은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얻기 위하여 UN에 직접 제출한 자료와 북한의 구매력(purchasing power parity)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GDP는 북한 GDP의 최댓값으로, UN GDP는 최솟값으로 사용하였다.

북한의 무역의존도²⁴⁾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그만큼 북한의 대외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KOTRA가 발표한 북한의 무

24) 무역의존도 = 무역총액/GDP로 산출됨.

표 2-2.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과 남북교역의 규모 비교

항 목	단위	'06	'07	'08	'09	'10	'11	'12	'13	'14
북한 GDP 한국은행(남한 환율 적용)	백만 달러	25,572.3	26,712.7	24,658.8	22,419.8	25,982.4	29,271.2	29,711.6	30,907.8	32,519.0
북한 GDP UN	백만 달러	12,031.2	12,744.5	13,139.4	13,020.0	12,958.5	13,061.8	13,232.7	13,333.9	-
무역총액(남북교역 제외, KOTRA)	백만 달러	2,986.0	2,941.0	3,816.0	3,414.0	4,174.0	6,357.0	6,811.2	7,345.0	7,611.0
① 비중 [GDP 한국은행 대비]	%	11.7	11.0	15.4	15.2	16.1	21.7	22.9	23.8	23.4
② 비중 [GDP UN 대비]	%	23.2	23.1	29.0	26.2	32.2	48.7	51.5	55.1	-
무역총액(남북교역 포함)	백만 달러	4,346.0	4,739.0	5,636.0	5,093.0	6,086.0	8,071.0	8,782.2	8,481.0	9,954.0
③ 비중 [GDP 한국은행 대비]	%	17.0	17.7	22.7	22.7	23.4	27.6	29.6	27.4	30.6
④ 비중 [GDP UN 대비]	%	33.7	37.2	42.9	39.1	47.0	61.8	66.4	63.6	-
대중무역(KOTRA)	백만 달러	1,700.0	1,974.0	2,787.0	2,681.0	3,466.0	5,629.0	6,012.0	6,547.0	6,864.0
⑤ 비중 [무역총액(남북교역 제외) 대비]	%	56.7	67.1	73.0	78.5	83.0	88.5	88.3	89.1	90.1
⑥ 비중 [무역총액(남북교역 포함) 대비]	%	39.1	41.7	49.4	52.6	57.0	69.7	68.5	77.2	69.0

남북교역(통일부) 백만 달러 1,350.0 1,798.0 1,820.0 1,679.0 1,912.0 1,714.0 1,971.0 1,136.0 2,343.0

⑦ 비중 [무역총액(남북교역 제외) 대비] % 28.7 36.6 27.6 27.5 25.0 14.3 15.4 8.2 16.2

대중무역/남북교역 배 1.3 1.1 1.5 1.6 1.8 3.3 3.1 5.8 2.9

주: 1) 한국은행에서 추정된 북한 GDP를 저자가 남한 환율을 적용하여 달러로 변환함. 한국은행에서는 북한 GDP는 북한의 물량에 남한의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추정된 것으로 이는 GDP 추정치의 추세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그 외 용도로 국가간 GDP 비교를 위해 남한 환율정보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고 통계자료진에 밝히고 있음(통계청, 2014, 2014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참고).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무역규모가 전체 경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하기 위해 환율변환을 하였으며, 통계치 활용의 신뢰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UN의 북한 GDP 통계를 보완하였음.

2) UN의 2014년 북한 GDP는 2015년 10월 1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음.

3) 무역총액(남북교역 포함)은 남북교역을 제외한 무역총액(KOTRA)과 통일부가 발표한 남북교역을 활용하여 저자가 산출한 것임.

자료: 북한 GDP: 한국은행 북한통계(Online, 검색일: 2015. 9. 1); UN Comtrade(Online, 검색일: 2015. 9. 1); 무역총액 KOTRA: KOTRA 중국시연단. 북한 대외무역 동향(각 연도, Online, 검색일: 2015. 9. 1); 남북교역: 통일부 홈페이지(Online, 검색일: 2015. 9. 1).

역총액과 한국은행의 GDP를 활용하여 북한의 무역의존도를 계산하면 23.8%(2013년 기준)이다. 20% 중반의 무역의존도는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과 구소련이 보인 수준으로 북한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2010년 16.1%에서 2014년 23.4%까지 증가한 것은 북한경제에 있어 무역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그만큼 중국과 한국 등 대외경제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도도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총무역액에 남북교역액을 포함하면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더욱 커진다. 한국은행이 추정된 북한 GDP를 기준으로 하여 2013년에 남북교역액을 제외하면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23.8%이나, 남북교역을 포함하면 27.4%에 이른다. 단 한국은행의 GDP는 과다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UN이 추정된 북한의 GDP를 기준으로 무역의존도를 다시 산출해보면, 2013년에 남북교역 제외 시 55.1%, 남북교역 포함 시 63.6%에 이른다. 한국은행 추정 GDP는 과다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UN이 추정된 것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남북교역 포함 시 2013년 기준 27.4%와 55.1%의 범위 내로 기대 이상의 높은 수준의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과거 개혁개방기의 중국과 구소련보다 높은 수준이다.

북한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무역의존도를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전체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남북교역을 제외할 경우 대중 무역비중은 2014년 기준 90.1%이나, 남북교역을 포함할 경우에는 69.0%이다. 2011년 이후 북·중 무역규모는 남북교역의 약 3배²⁵⁾

25) 2013년에는 북·중 무역이 남북교역의 5.8배에 이르렀는데, 이는 북한이 2013년 8월에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중단을 선언하면서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철수하여 약 5개월간 개성공단 조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에 이르는 수준으로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남한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북한의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의존도와 남북교역보다 3배 이상 큰 북·중 무역의 규모는 북·중 간에 분업체계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분업체계의 시작은 무역에서부터이지만, 점진적으로 무역 외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가설을 정립하는 배경이 되었다.

나. FDI

무역 외 분야에서 북·중 간 경제협력사업의 현황을 가늠해보기 위하여 대북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현황을 정리하였다(표 2-3 참고). 북한의 FDI 순유입은 2009년 이후 증가세에 있다.²⁶⁾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 GDP를 기준으로 총 FDI 순유입의 비중을 산출하면 2013년 기준 0.7%, UN이 추정한 GDP를 기준으로 하면 1.7%이다. 이를 2004년 미얀마의 명목 GDP 대비 FDI 비중 2.4%, 베트남 3.5%²⁷⁾와 비교하면, 북한의 FDI 유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북한 FDI 순유입의 GDP 대비 비중은 다른 체제전환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총 FDI 순유입에서 대중 FDI 순유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2008년 이후 북한의 대중 FDI 순유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상회하여 왔다. 2010년과 2013년이 예외이기는 하나, 해당 해에

26) 2014년의 FDI 유입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음.

27) 2004년 미얀마의 GDP는 121억 9,500만 달러, FDI 순유입은 7억 3,000만 달러로 총 FDI 비중은 6.0%이고, 베트남의 GDP는 454억 8,100만 달러, FDI 순유입은 16억 1,000만 달러로 총 FDI 비중은 3.5%임. 자료는 Oxford Economics(Online, 검색일: 2015. 9. 1)를 활용하여 저자 산출.

표 2-3. 북한의 총 FDI 순유입

항 목	'06	'07	'08	'09	'10	'11	'12	'13	'14
북한 GDP 한국은행 (남한 포함 제외)	25,572.3	26,712.7	24,858.8	22,419.8	25,982.4	29,271.2	29,711.6	30,907.8	32,519.0
북한 GDP UN	12,031.2	12,744.5	13,139.4	13,020.0	12,958.5	13,061.8	13,232.7	13,333.9	-
총 FDI 순유입 UN	-105.0	67.0	44.0	2.0	38.0	56.0	120.0	227.0	134.0
㉠ 비중 [GDP 한국은행 대비]	-	0.3	0.2	0.0	0.1	0.2	0.4	0.7	0.4
㉡ 비중 [GDP UN 대비]	-	0.5	0.3	0.0	0.3	0.4	0.9	1.7	-
대중 FDI 순유입 UN	11.1	18.4	41.2	5.9	12.1	56.0	109.5	86.2	-
㉢ 비중 [총 FDI UN 유입 대비]	-	27.5	93.7	293.0	31.9	99.9	91.2	38.0	-
㉣ 비중 [GDP 한국은행 대비]	0.0	0.1	0.2	0.0	0.0	0.2	0.4	0.3	-
㉤ 비중 [GDP UN 대비]	0.1	0.1	0.3	0.0	0.1	0.4	0.8	0.6	-

주: 1)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북한 GDP를 저자가 남한 환율을 적용하여 달러로 변환함. 한국은행에서는 북한 GDP는 북한의 물량에 남한의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추정한 것으로 이는 GDP 추정치의 추세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그 외 용도로 국가간 GDP 비교를 위해 남한 환율정보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통계자료집에 밝히고 있음(통계청 2014, 2014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참조)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무역규모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능하기 위해 환율변환을 하였으며, 통계지 활용의 신뢰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UN의 북한 GDP 통계를 보완하였음.

2) 총 FDI 유입은 순유입을 의미. 예를 들어 2006년 총 FDI 유입이 음의 값을 기록한 것은 2006년 북한의 현실함을 계기로 다수의 기업이 북한에서 철수하였기 때문임. 실제로 2006년 대북일 FDI 유입이 -2억 4,700만 달러, 프랑스의 FDI 유입이 -800만 달러를 기록함. 결과적으로 2006년 북한의 총 FDI 유입이 음의 값을 기록함. 2009년 대중 FDI 유입이 5,900만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총 FDI 유입이 2,000만 달러에 불과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임.

자료: 북한 GDP: 한국은행 북한통계(Online, 검색일: 2015. 9. 1); UN Comtrade(Online, 검색일: 2015. 9. 1); 무역총액 KOTRA: KOTRA 중국사입단,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가 연구, 검색일: 2015. 9. 1); 남북교역: 통일부 홈페이지(Online, 검색일: 2015. 9. 1); 총 FDI 유입(대중 FDI 유입(2006~2012년)): UN Comtrade(Online, 검색일: 2015. 9. 1); 대중 FDI 유입(2013년): Ministry of Commerc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3, Online, 검색일: 2015. 9. 1).

도 대중의 FDI 유입액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대북 FDI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FDI는 중국이 북한에 진출하여 북한시장 선점을 위해 북한에 기반시설을 투자한다거나, 중국의 대북 위탁가공 확대를 위해 북한에 생산시설을 투자한다거나, 북·중 접경지역 확대를 위해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등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사업의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유용한 변수이다. 전체 FDI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무역 외 분야, 즉 경제협력사업 분야에서 북·중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은 2005년부터이고, 남북교류를 북한의 무역에 포함하더라도 중국의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이 2009년부터이므로, 무역분야에는 2015년 현재 5~10년 이상 북·중 간에 긴밀한 경제관계가 형성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FDI 순유입에서 중국의 비중이 90%를 넘어선 것도 2008년부터이므로, FDI 분야에서 북·중 간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어온 것도 7년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양국간에 밀접한 경제관계가 형성되어온 것이 최소 5년 이상이므로,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를 단순관계라기보다는 양국이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으로 산업적 연계를 갖는 분업체계의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무역 개방도가 FDI의 개방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북·중 분업체계는 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형성된 뒤, 경제협력사업 분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3. 북·중 분업체계

가. 분업체계 개념 및 정의

본 절에서 정리하는 ‘분업체계’는 기존연구에서 정의된 개념을 차용하여 소개한 것이기보다는, 북·중 분업체계의 현황에 맞게 변형하여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의 산업을 비롯한 유통구조와 경영시스템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도화되지 못하여 기존연구가 규정하고 있는 분업체계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기존 논문들에 소개된 분업체계의 개념을 변형하여 적용함으로써 북·중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국경을 중심으로 한 분업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분업체계의 형성은 비단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과 북한의 분업체계 형성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도 있다. 국가간 교통 및 통신비용의 절감과 무역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제품의 생산공정은 점점 더 국경을 초월해 아웃소싱되어 국제 분업체계가 구축·발전되고 있다. 예컨대 분업체계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그 상품을 기획하거나 디자인한 국가가 아닌 중국을 위시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²⁸⁾

기존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분업체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국제 분업체계의 시작은 특정 제품의 생산공정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28) 아이폰은 5개 국가에서 각각 기획, 디자인, 부품생산 및 조립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중국에서 조립되어 전 세계에 수출됨. 아이폰의 총부가가치 179달러 중 중국의 부가가치 기여율은 3.6%인 6달러임(遊珊珊 2014, Online, 검색일: 2015. 5. 27).

있고 각 공정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국가별로 비교우위를 가진 공정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를 거치며 한 제품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즉 생산공정의 특성에 따라 가장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국가나 지역으로 특정 공정을 이전한다는 것이다. 타 국가 혹은 지역으로의 특정 공정 이전은 동일한 회사를 현지에 설립하여 이루어지기도 하나, 현지 기업에 위탁하여 가공(아웃소싱, outsourcing)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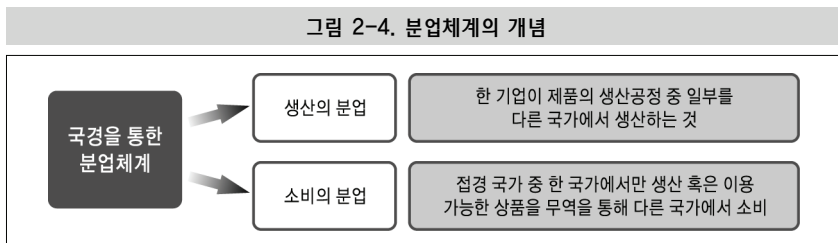
국제 분업체계의 개념은 미국에서 초국경기업이 등장하면서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다. 미국 대형의류회사들의 초국경적 생산공정 분업체계를 분석한 Gereffi and Korzeniewicz(1994)²⁹⁾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의류기업들은 주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소재한 기업과 위탁가공계약을 맺는데, 위탁가공을 맺는 국가는 인건비 외에도 해당 기업의 브랜드 전략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 브랜드가 고급일수록 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에 생산공정을 위탁하게 되고, 기업 브랜드가 대중적일수록 기술 수준이 낮은 국가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위탁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국경을 넘어서 위탁가공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인건비 절감을 통한 비용 절감이나, 인건비 외에도 기술 수준이 고려된다. 국제 분업체계에서 미국기업들이 위탁가공하는 국가에는 다섯 단계가 있는데, 그중 중국은 네 번째 단계이며, 북한은 가장 기술 정도가 낮은 다섯 번째 단계에 속한다.

국가별 생산환경에 따른 비교우위에 따라 차등적인 국가간 분업체계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런 분업체계는 각국의 경제발전 상황에 따라 변화되기도 한다. Gereffi의 연구를 더 살펴보면, 국제 위탁가공은 본사(head

29) Gereffi and Korzeniewicz(1994), p. 110.

quarter)가 주로 제품 기획과 마케팅을 맡으며 노동력이 싼 개발도상국에 위치해 있는 공장에서는 본사에서 발주한 세부내역에 따라 제품을 제작한다. 경우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술과 인건비 면에서 중간 수준의 국가에 위치한 위탁가공 업체가 본사와 최종 위탁가공 국가의 업체를 조율하며, 본사에서 하청을 받고 이를 다시 재하청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Gereffi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는 기존에는 미국에서 위탁을 받아 제품제작을 하는 공장들의 소재지였으나, 점차 경제 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미국에서 위탁을 받으면 이를 다른 개발도상국의 공장들에 다시 재위탁을 주면서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삼각무역’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국가로 바뀌었다.

본 연구에서 북·중 분업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상한 분업체계의 개념은 [그림 2-4]와 같다. 국경을 통한 분업체계는 크게 ‘생산의 분업’과 ‘소비의 분업’으로 나뉜다. 생산의 분업은 상술한 Gereffi가 소개한 것과 같이 한 상품의 생산과정 중 일부가 다른 접경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일컫는다. 소비의 분업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정의한 것으로 접경 국가 중 한 국가에서만 생산 혹은 이용 가능한 상품을 무역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 저자 작성.

소비의 분업 개념은 무역의 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무역은 그 형태나 상품의 구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하거나 고정될 수 있는 반면, 소비의 분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역의 형태나 상품의 구성이 점진적으로 안정되어가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소비의 분업은 무역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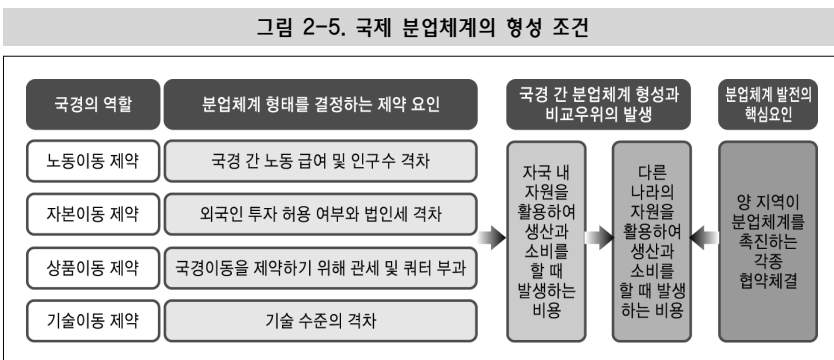
분업체계의 형성은 국경을 마주한 두 지역이 무역을 통한 산업적 연계를 통해 양 지역의 경제가 서로 연동되고, 동시에 각 지역이 속한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조건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생산·소비의 분업의 핵심은 국경을 마주한 두 지역의 무역이 단순한 재화나 서비스 교환을 넘어 양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여 발전하는 것에 있다. 무역이 양 지역의 산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면서 각 지역의 산업을 서로 연결해주고 발전하게 된다. 한 지역의 산업적·경제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분업체계를 형성한 다른 지역에 대한 산업적·경제적 수요를 증가시키고, 국경을 인접한 다른 지역은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조건에 영향을 덜 받으며, 인접지역의 경제성장에 추동되어 성장하는 것이다.

경제적 격차가 큰 두 지역의 분업체계는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에 외국 인직접투자(FDI)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UN(1999)의 World Investment Report 1999는 FDI가 투자자본을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효율성 증대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출을 증대하고, 공공재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소비재와 자본재에 대한 이용을 늘린다고 소개하였다. 분업체계 역시 두 지역이 무역을 통해 산업적 연계를 갖는 것이므로 동일한 개발 수준의 지역의 경우 두 지역이 유사한 속도로 발전하지만, 개발격차가 큰 지역인 경우에는 한 지역이 다른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

끌어낸다.

국경을 마주한 국가간에 형성되는 분업체계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제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나 생산공정공유(production sharing)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국제가치사슬이나 생산공정공유는 초기 국경을 마주한 양국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반면, 운송수단의 발달과 함께 점점 국가간 산업적 연계가 지구상의 모든 국가로 확대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국경을 마주한 분업체계라는 개념은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국경을 통한 분업체계가 형성되는 조건은 [그림 2-5]와 같다. 자연적·산업적으로 유사할 가능성이 높은 인접한 두 지역의 국경에서 사람, 자원, 제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약을 받으면 서로 다른 산업적 비교우위를 갖게 된다. 자국 내에서 생산 및 소비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보다 국경을 사이에 두고 분업체계를 형성하여 생산 및 소비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더 저렴할 경우, 두 지역 간에 분업체계가 형성되며, 이때 분업체계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국경 간 생산요소와 상품의 이동을 막는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협약을 어떻게 체결해 가느냐이다.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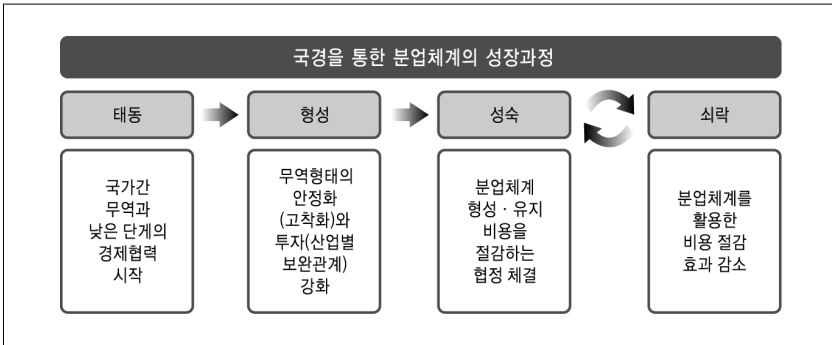
노동이동의 제약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분업체계 형성요인이다. 국경을 마주한 두 지역 간의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면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노동집약적인 생산공정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된다. 분업체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임금 격차를 통한 비용 절감이 노동집약적인 중간재가 국경을 이동할 때 부과되는 관세와 양 지역의 생산공정을 운용하기 위해 발생하는 국경간 분업체계 운용비(coordination fees)의 합보다 커야 한다.

자본이동 제약과 기술이동 제약은 노동이동 제약과 다소 상이한 이유로 분업체계를 형성한다. 국경을 마주한 두 지역의 발전격차가 크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 된 지역의 산업 중 자본이나 기술 집약적인 산업공정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상품이동 제약은 환경적 요인이나 기술적인 요인으로 국경을 마주한 두 지역 중 한 지역에서만 특정 상품이 생산되고 유통될 경우, 다른 지역이 무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안정적으로 수입하여 소비하기 시작할 때 발생된다. 북한과 중국 간에는 동북 2성(지린성, 헤이룽장성)이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아 북한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북한은 유전이 있지 않아 헤이룽장성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국경을 통한 분업체계는 태동 → 형성 → 성숙 ↔ 쇠퇴의 단계로 발전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6]과 같다. 국경을 통한 분업체계의 성장과정은 한마디로 생산요소와 상품의 국경을 넘어 이동하기 위해서는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양국이 상호의 이익에 맞추어 서로의 자원을 이용하면서 각종 협약을 통해 국경의 제약을 단계적으로 완화해가는 데 있다.

그림 2-6. 분업체계의 발전



자료: 저자 작성.

국경을 통한 분업체계는 두 지역 간 무역과 낮은 단계의 경제협력이 시작되면서 태동된다. 두 지역의 무역이 일반적인 재화를 거래하는 수준을 넘어 위탁가공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시작되면서 분업체계 형성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면 분업체계가 형성단계로 진입된다. 형성단계에서는 중간재 무역이 두 지역의 산업과 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무역형태가 안정화·고착화되며, 무역과 경제협력을 통해 두 지역의 산업별 보완관계가 강화된다. 양 지역 혹은 한 지역의 산업이 발전할수록 무역량은 증가된다. 성숙단계에서는 분업체계 형성으로 인한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협정이 체결되기 시작한다. 쇠락단계에서는 성숙단계와 반대로 분업체계를 활용한 비용 절감효과가 감소하면서 분업체계 형성의 유인이 감소된다. 결과적으로 분업체계가 소멸되는 단계이다. 분업체계의 각 단계는 [그림 2-5]의 분업체계 형성 조건에 따라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북·중 분업체계도 이상에서 서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중 분업체계가 형성된 것은 양국이 경제협력을 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과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컸기 때문이다. 이제 양국이 형성한 분업체계가 성장하는 것은 양국의 교역환경의 변화와 두 지역 간 생산요소와 상품의 이동을 막는 각종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각종 규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거하느냐에 달려 있다.

나. 분업체계 현황

결론부터 소개하면 북·중 분업체계가 태동한 것은 2000년대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2004년을 시작으로 북한이 중국의 자본을 활용한 자국의 경제개발과 외화벌이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2004년에 중국 자본의 북한광산 투자유치를 본격화하고, 중국 선박의 북한수역조업 및 수산물 양식 투자를 허용하며, 중국기업의 북한 내 운수업 투자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중 분업체계가 본격화된 시기는 2008년 전후로 중국 시진핑 부주석과 2009년 원자마오 총리의 북한 방문으로 경제기술협력, 항공운수, 도로운수 등의 분야에서 협정이 체결되면서 북·중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8년에는 북한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70%를, 북한의 총 FDI에서 중국의 비중이 90%를 넘어섰으며, 중국 중앙정부는 2008년 중국관광객의 북한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북·중 접경지역 관광이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2012년을 계기로 북·중 분업체계 분야는 확장되고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2012년에는 북한의 대중 해외노동자 파견이 시작되었다. 2013년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자국 소재의 투자기업에 대해 대북 위탁가공을 허용하였으며, 북한은 중국인의 북한 부동산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기업의 철도, 도로, 항만 등의 기반시설 건설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로 광산개발권을 부여

하는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

북·중 분업체계의 분야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북·중 분업체계의 분야는 크게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2-7 참고). 무역은 상품교역과 서비스교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제협력사업은 중국의 대북 광업 및 제조업 투자, 건축 진출, 서비스 산업 진출,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다만 무역의 상품교역을 제외하고는 통계자료가 전무하여 북·중 분업체계의 구체적인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일한 대안이 현지조사이나 현지조사는 조사자의 신원안전 문제, 충분한 응답자 확보 문제, 응답자가 특정 지역에 편향되는 문제 등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북·중 분업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을 중심으로 북·중 분업체계를 분석하되, 현지조사 결과와 현지 언론보도자료, 기타 문헌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사업도 분석하도록 하겠다.

무역 중 상품교역을 먼저 살펴보면, 상품교역은 생산의 분업을 보여주는 위탁가공과 중간재 교역, 소비의 분업을 보여주는 일반 소비재 교역으로 나눌 수 있다. 소비의 분업인 일반 소비재 교역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이 고난의 행군기에 경제난으로 인하여 부족한 소비재와 식량을 중국에서 조달하면서 시작되었다. 소비의 분업인 일반 소비재 교역에서는 중국의 동북 2성이 북한에 필요한 물건을 조달해주는 ‘공급자’ 역할을, 북한이 이를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 역할을 한다. 생산의 분업인 위탁가공-중간재 교역에서는 중국이 위탁자 역할을, 북한이 수탁자 역할을 한다. 중국 중앙정부가 중국기업의 대북 위탁가공을 허용한 것은 2013년이다.

그림 2-7. 분업체계 분야 및 현황

분업체계 분야		분류	역할 구분	본격화 시기	현황(2014년)
상품교역	일반 소비재 교역	소비의 분업	중국: 공급자&조달자 북한: 소비자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	북한 GDP _{base} 대비 23.8%, 북한 GDP _{inc} 대비 55.1% (2013년 기준)
	위탁기공-중간재 교역		2012년		
	해외노동자 파견		2012년		
서비스교역	북·중 점령지역 관광	생 산 의 분 업	중국: 소비자&운영자 북한: 공짜	2008년	2014년 총북3성 1만 5,000명 (2011년 중국파견 시작) 북·중 국경 오픈 통해 인원: 76만 6,000명
	광업(무연탄, 철광석, 금광) 투자		2004년		
광업 및 제조업	북한 수역조업 및 수산물 양식 투자	중국의 대북 FDI 비중	중국: 투자자 북한: 광산자원 제공자	2004년	전체 FDP 대비 99.9%(2011년) 91.2%(2012년) 38.0%(2013년) 북한 명목 GDP 대비 0.4%(2011년) 0.8%(2012년) 0.6%(2013년)
	의류·신발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 위탁기공		2013년		
건축업	부동산 투자	중국: 투자자 북한: 투자자&위탁자	2013년	2013년	
서비스업	운수업 투자	중국: 투자자 북한: 운영자&소비자	2004년	2004년	
기반시설 건설	철도·도로·항만 건설	중국: 투자자 북한: 투자자	2013년	2013년	

자료: 분업체계 분야; 역할 구분, 본격화 시기는 저자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현황 중 상품교역의 GDP 비중은 UN Comtrade(Online, 검색일: 2015. 9. 1)를 참고하여 저자가 직접 산출; 현황 중 2014년 총북 3성 1만 5,000명은 저자가 현지조사와 인문을 참고하여 추정; 현황 중 북·중 국경 오픈 통해 인원은 중국해관(2014)을 참고하여 작성; 현황 중 FDI 관련 통계는 UN Comtrade(Online, 검색일: 2015. 9. 1)를 참고하여 저자가 직접 산출.

서비스교역은 경제협력사업과 유사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의 틀에 따라 무역에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서비스교역 중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파견된 시기는 2012년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³⁰⁾ 2012년 145명에서 시작된 북한의 대중 해외노동자 파견이 불과 3년 사이에 1만 5,000~2만 명 수준³¹⁾으로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은 중국이 10여 년 이상 연간 9%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룬 마지막 해로, 경제고성장의 부작용으로 동북 3성은 인력공동화와 임금상승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문제해결을 위해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³²⁾ 동북 3성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면서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하였다는 사실은 경제상황에 따라 북·중이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중 접경지역 관광의 시작은 2008년으로 추정된다.³³⁾ 중국 중앙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관광 붐이 일기 시작하였다. 북·중 접경지역 관광객이 늘어나면 관광객의 동북 2성 유입 인원도 그만큼 늘어났다. 북·중 접경지역 관광객의 정확한 수는

30) 『北 근로자 고용, 北中 경제협력 새로운 모델』(2010. 11. 10, Online, 검색일: 2015. 10. 25); 『北, 中 무단장에 여성노동자 2천명 파견 추진』(2011. 1. 19, Online, 검색일: 2015. 10. 24); 『中 인력난 해소, 北 외화벌이로 양측 이해 맞아』(2011. 12. 22, Online, 검색일: 2015. 7. 13); 『中, 북한 근로자 수만명 수입』(2012. 7. 2, Online, 검색일: 2015. 7. 13); 『"北인력 145명 中투먼 섬유공장 근무시작"』(2012. 7. 30, Online, 검색일: 2015. 7. 14).

31) 2014년 기준. 정확한 통계가 발표된 적은 없으나, 현지조사와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1만 5,000~2만 명 내외의 수준으로 짐작해볼 수 있음.

32)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은 북한 측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음.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외화벌이 목적의 일환으로 러시아, 중동, 유럽 등에 이어 중국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함. 그러나 중국도 이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면이 있음.

33) 『中, 자국 관광객 방북절차 간소화』(2007. 12. 20, Online, 검색일: 2015. 10. 25); 『中 여행업계, 북 관광특수 부문 기대감』(2008. 9. 4, Online, 검색일: 2015. 10. 21).

알 수 없으나, 대신 북·중 국경 육로 통행인원을 보면 76만 6,000명³⁴⁾ 수준이며, 2008년 이후 북·중 국경의 육로 통행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북·중 접경지역 관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중 분업체제 분야 중 무역 외 분야로 경제협력사업 분야를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간 경제협력은 ‘무역’과 ‘투자’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나, 북·중 간 투자는 구체적인 통계와 자료가 부재하여 ‘투자’ 대신 ‘경제협력사업’으로 분류하였다. 경제협력사업은 크게 광업 및 제조업, 건축업, 서비스업, 기반시설 건설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광업 및 제조업 중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광업으로 외국인 투자가 본격화된 것은 2004년경으로 추정된다.³⁵⁾ 다만 이후 북한의 광업 및 제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 추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간헐적으로 보도된 신문기사 외에 관련 분야의 추이를 파악해 볼 수 있는 통계가 전무하여 추가 분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중국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을 시작하고, 수산물 양식을 본격화한 것은 2004년으로 추정된다.³⁶⁾ 중국이 대북 위탁가공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2013년부터이다. 물론 2013년 이전에도 비공식적으로 무역을 통해 위탁가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제한적으로 혹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소수의 사업자에게만 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북한이 중국인을 상대

34) 중국해관(2014).

35) 「북, 광산분야 외국투자 유치 적극 모색」(2002. 2. 7, Online, 검색일: 2015. 10. 15); 「중 기업들, 북한 투자열기 높아」(2004. 6. 29, Online, 검색일: 2015. 10. 20).

36) 「중국 어선, 북한수역조업 현실화 우려」(2001. 12. 17, Online, 검색일: 2015. 10. 15); 「‘북한, 중국 공동 어로 협약’ 정부 대책 촉구」(2004. 9. 26, Online, 검색일: 2015. 10. 20).

로 부동산사업을 본격화한 것은 2013년으로 추정되며,³⁷⁾ 중국 운수업체의 북한 운수업 진출을 허용한 것은 2004년,³⁸⁾ 철도·도로·항만 등 기반 시설 건설에 중국의 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인 것으로 추정된다.³⁹⁾

37) 『북한 나선특구 중국인 상대 부동산 개발 ‘러시’』(2013. 12. 13, Online, 검색일: 2015. 7. 14).

38) 『中 운수업체 7억위안 대북 투자 계획』(2004. 11. 28, Online, 검색일: 2015. 10. 20).

39) 『북한, 광산개발권 대가로 기반시설 건설 추진』(2013. 1. 7, Online, 검색일: 2015. 10. 21).

제3장 북·중 분업체계의 결정요인과 전망

1. 중국의 분업 결정요인
2. 북한의 분업 결정요인
3. 소결



본 장에서는 북·중 분업체계 형성과 확대를 결정할 양국의 구조적·정책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다. 최근 북·중 경제협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북·중 무역은 양적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북·중 무역 활성화를 견인한 주요 대중 수출품인 철광석과 무연탄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북·중 경제협력사업은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동북지역 인건비가 상승하고, 접경지역 대북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중 경제협력의 변화는 북·중 분업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기존에 분업체계를 형성했던 무역활성화 측면이 다소 위축된 반면, 경제협력사업 분야가 분업체계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간의 분업체계를 결정짓는 각국 내의 구조적·정책적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그 전개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중국의 분업체계를 형성·촉진할 결정요인 중 세부요인으로 대내외적인 경기 둔화와 이로 인한 철강, 무연탄 수요 감소 등 구조적·정책적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겠다. 어떤 요인이 내수시장 조달 시 비용을 하락시키고 해외 수입 비용을 상승시키는지, 또 중국 전반의 수요 감소가 중국 국내기업에 대한 수요보다는 해외 수입분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에너지관리정책과 환경보호정책 강화의 정책적 요인 역시 검토해보고, 인건비(인건비) 상승이라는 정책적 요인과 낙후된 경제 여건으로 인해 중국 동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젊은 노동력의 대도시 유출요인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겠다. 끝으로 지린성, 랴오닝성 등 동북지역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요인을 검토해본다.

한편 북한의 측면에서 분업체계를 형성, 촉진 및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

보기 위해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과 대내경제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먼저,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가장 주요한 정책구호로 표방되고 있는 인민경제 향상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북·중 분업체제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분석하겠다. 또한 북한의 생산경제가 어떠한 문제점에 봉착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경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최근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과 이것이 북·중 분업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결에서는 향후 북·중 분업체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전망하도록 한다.

1. 중국의 분업 결정요인⁴⁰⁾

가. 중국의 북한산 지하자원 수입 감소

1) 에너지 관리 및 환경정책 강화와 북한산 무연탄 수입 감소

북한산 무연탄은 북한의 대중 주력 수출품으로서 2000년대 진전된 북·중 무역 활성화와 이로 인한 북·중 분업체제 형성의 핵심 품목이다. 2015년 현재도 북한의 대중 제1위 수출품으로서 분업체제 심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중국경제의 정책적 변화로 인해 무연탄 수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고, 분업체제 역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12년 이후, 중국의 환경오염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에

40) 이 절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은 임수호, 김준영(2015)을 참고.

너지 발전전략 수립, 특히 석탄 사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 정책 강화 흐름에 그 배경이 있다. 중국경제의 압축 성장 이면에는 심각한 환경오염이라는 폐해가 있다. 중국은 12·5 경제기획단계에서 본격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정책적·제도적인 개입을 강화하였다. 특히 2012년 제18차 전당대회에서 기존의 국가 목표인 정치·경제·문화·사회 건설 목표에 ‘생태문명’을 추가하였는데, 시진핑 집권 이후 핵심 목표로 부상하였다.⁴¹⁾ ‘생태문명’ 건설목표는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근본 원칙으로 하여, 자연회복을 중심으로 녹색발전, 순환발전, 저탄소 발전을 추진하여 공간구조, 산업구조, 생산방식, 생활방식을 개선하며 국토공간의 개발구조 최적화, 자원절약, 자연생태계 및 환경보호 강화, 생태문명제도 건설의 세부 강화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보호정책은 신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관리정책과도 불가분에 있다. 대기,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유발산업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동시에 새로운 대체에너지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이다. 2010년 국무원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决定)」을 공표하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차세대 IT·바이오·첨단장비 제조·신에너지·신소재·신에너지 자동차 등 7개 산업부문을 제시하여 환경보호와 신에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에는 「에너지 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년)[关于印发能源发展战略行动计划(2014~2020年)]」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더욱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선 확보를 목

41) 新华网(2012, Online, 검색일: 2015. 6. 12); 각 강화방안, 정책, 제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강택구, 조성제 외(2013), pp. 52~80 참고.

표 3-1. 에너지 발전전략 행동계획(2014~2020년)
 [关于印发能源发展战略行动计划(2014~2020年)]

주요 내용		
지도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당 18차 전당대회와 2중·3중 전회 정신에 따라 당 중앙과 국무원의 각 정책결정 부서 전면 현실화 · 에너지 개발, 절약, 감축에 중점을 두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보 · 에너지 발전 방식 전환 및 더욱 우수한 에너지원 구조로 조정, 에너지관리시스템 ·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소비의 과잉 증가를 엄격히 통제 · 청정에너지 발전 박차, 에너지의 녹색 발전 추진 · 과학기술의 진보 촉진, 에너지산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 	
목표	“절약, 청정, 안전”이라는 가치하에 청정, 고효율, 안전한 지속가능 현대적 에너지시스템 구축	
전략	① 절약우선	에너지 효율 제고, 2020년까지 1차에너지 총소비량을 48억 톤 표준석탄까지, 석탄소비를 42억 톤까지 감축
	② 국내공급 안전보장	국내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선 확보(에너지주권 확보), 2020년까지 에너지안전보장시스템 원비, 국내1차 에너지 총소비량 42억 톤 도달 시 자급공급 능력 85% 확보, 석유추적비율을 14~15%까지 제고, 에너지 긴급공급시스템 구축
	③ 녹색 저탄소	청정저탄소 에너지를 에너지 구조조정 핵심으로, 석탄 소비비중 점진적 감소, 천연가스 소비 제고, 풍력·태양력·지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소비비중 확대, 2020년까지 1차 에너지소비에서 비석화 에너지의 비중을 15% 까지 올리고, 천연가스의 비중을 10% 이상 올리는 반면, 석탄소비 비중을 62% 이내로 감축
	④ 창의적 실현	에너지시스템 개혁 심화, 2020년까지 개방적이고 통일된 현대적인 에너지시장 시스템 구축

주: 표준석탄은 중국정부가 규정한 매 킬로그램당 7,000칼로리의 열량을 함유한 석탄 단위.
 자료: 国务院办公厅(2014, Online, 검색일: 2015. 6. 1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로 정하였다(표 3-1 참고).

특히 이 가운데 기존 북·중 분업체계 형성에서 무역활성화를 견인한 석탄 품목에 대한 정책이 변화하였다. 우선, 에너지 발전전략의 추진으로 인해 에너지자원 관련 수입정책 역시 변화하였다. 이 전략의 핵심 골자는 기존의 에너지원 구조 전환에 있는데, 해외에서의 에너지 수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정책 변화이다. 이 중 석탄 사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주요 의제로 대두하였다. 2012년 이후부터 시장 수요

감소 및 상품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과잉생산이 지속되면서 부실기업이 속출하는 등 석탄산업에 대한 각종 문제가 불어졌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3년부터 「석탄산업 안정적인 운영에 관한 의견(关于促进煤炭行业平稳运行的意见)」을 공표하여 석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표 4-2 참고). 이 정책의 5대 목표는 ① 석탄품질 제고를 위해 무질서한 석탄 생산 금지, ②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석탄기업의 조세비용 부담 경감, ③ 저품질 석탄 수입규제를 위해 석탄 수출입체인 관리강화, ④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석탄기업의 생산 경영 수준 제고, ⑤ 석탄기업의 양호한 발전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각 목표에 따라 세부 이행사항을 설정하여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석탄 사용의 효율적 관리는 자국산 석탄과 수입산 석탄 모두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석탄 사용의 효율적 관리로 자국 석탄기업의 도산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면서 저품질 수입 석탄이 이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 단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국 석탄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먼저, 석탄수입에 대한 비용이 상승하였다. 가령 수입석탄에 대해 관세조치를 취했다. 기존의 석탄수입이 거의 무관세에 가까웠으나 이를 최혜국 대우수준으로 복구하였다(표 3-3 참고). 임호열 외(2015, p. 157)는 중국의 대북 석탄수입 공식관세율을 3%, 관행 관세율을 2%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장기간 지속된 변경무역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관세가 정책적 조정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 중국 당국은 북한 석탄에 대해서도 공식관세율을 적용

표 3-2. 석탄산업 안정적 운영에 관한 의견(关于促进煤炭行业平稳运行的意见)(2013년)

항목	주요 내용	정책 목표
① 무질서한 석탄 생산 금지	· 과잉생산 억제, 관련 법규 정책 완비, 생산총량 관리 강화 · 석탄의 시장진입 허가기준 재정립, 연간 30만 톤 이하 생산 석탄 탄광과 연간 90만 톤 이하의 석탄과 가스를 생산하는 경도 신규 건설 금지. 신규 탄광은 엄격한 심사기준 통과 필요	석탄 품질 제고
② 석탄기업의 조세비용 부담 경감	· 2013년 연말 이전, 재정부와 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석탄 생산 중인 중점 성(省)과 석탄 산업 수입·소비 상황에 대해 집중 정리를 단행하여, 각종 불법요금과 불법자금모음, 불법부과 금지를 명령하여 기업부담 경감 · 석탄 관련 요금정리 및 석탄 자원세의 증가징수 개혁 가속 · 재정부, 발개위는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국무원에 보고	생산 비용 절감
③ 석탄 수출입 체인 관리 강화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호 요구에 따라 석탄의 품질에 대한 국가 표준 제정에 대해 연구 · 수입 석탄 상품의 질량 검사 기준 강화. 석탄 수입 관세 정책의 차별화를 연구 및 준비하여 양질의 석탄 수입을 장려하고 회분, 유황 함량이 높은 석탄에 대한 생산, 사용 및 수입 금지 · 석탄 수출입 총량, 구조, 추세 등에 대해 분석하여 국내외 시장변화에 따라 적시에 석탄 수출 관련 정책 실시	저품질 수입 규제
④ 석탄기업의 생산 경영 수준 제고	· 석탄기업의 시장 공급 수요 분석 강화, 생산구조 및 채굴 최적화 · 법에 의해 질서 있게 생산하며 함부로 경계를 넘어 채굴하는 것을 엄금. 탄광의 지질 탐사와 자원 비축을 강화하고 노후 탄광지역의 자원 비축량을 분명히 하여 탄광지역의 채굴 기한 연장 · 기업 내 관리 강화, 비생산성 지출 압축, 생산경영에 대한 합리적 비용관리시스템 구축 · 탄광지역 안정적인 전환과 관련업종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 보장 · 산업협회가 자율관리, 통계감측, 정보공표, 선진기술 및 관리경험 확대, 표준 제정 연구 등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 발휘	생산성 향상 유도, 생산 비용 절감
⑤ 석탄기업의 양호한 발전 환경 조성	· 노후한 탄광과 기업의 과거 문제 해결 · 원래 국유 중점 탄광에서 부담하던 사회형성 기능 비용 중 일부를 지방의 학교, 공안 등 기구들의 운영 소관으로 분리·이전하고, 관련정책의 규정에 따라 현지 지방재정 예산에 포함 · 미분리 기능은 지방정부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전 가속화 · 관련 정책을 실시하여 국유 중점 탄광기업의 파산 후 이직 및 퇴직 인원의 사회보장 등 문제를 해결, 퇴출 시스템을 준비하여 가망 없는 탄광에 대해 즉시 파산 처리. 탄광기업발전 탄광지역 순환경제 지원 · 유효한 조치들을 연구 및 시행하여 탄광 기업과 소비자 간 중장기 석탄 계약 체결 추진. 석탄사업과 제조업계획 및 생산운행의 결합을 강화하여 석탄 공급 촉과 수요 측의 균형 발전 촉진 · 지방 각급 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석탄시장 변화 상황에 따라 신속히 기업 심사 체제를 준비하고 전국 석탄시장에 대한 전면적 사상을 수립하여 석탄의 정상적 유통을 제한하는 지방 보호성 조치 시행	생산성 향상 유도, 생산 비용 절감

자료: 国务院办公厅(2013, Online, 검색일: 2015. 6. 1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3-3. 석탄 수입 관세조정에 대한 통지(关于调整煤炭进口关税的通知)

무연탄 (27011100)	코크스탄 (27011210)	코크스탄 이외의 기타 유연탄(27011290)	기타석탄 (27011900)	알탄 등 연료(27012000)
3%	3%	6%	5%	5%

자료: 税委会(2014, Online, 검색일: 2015. 6. 17).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4년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석탄자원 세제 개혁에 관한 통지(关于实施煤炭资源税改革的通知)」를 내려, 자국 산업에 대해 감세를 해주는 등 세제 혜택으로 자국 석탄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북한산 무연탄의 대중 수출환경이 악화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입석탄에 대한 품질관리는 북한산 석탄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석탄경영관리감독법(煤炭经营监管办法)」의 (제13호령) 통지 중 환경보호와 품질관리를 위해 저품질 석탄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2000년 초중반, 중국의 석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량의 북한산 무연탄이 중국에 유입되었다. 북한산 석탄수입이 증가하면서 주요 수입로인 중국 산둥성의 옌타이항(烟台港), 르자오항(日照港)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검역기관이 북한산 무연탄 품질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시행하여, 북한산 무연탄의 불완전연소 문제 등 품질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표 3-4 참고). 특히 품질 불균질성에 대한 문제가 과거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최근 저품질 수입석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됨으로써 향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 북한산 무연탄에 대한 중국 당국의 품질검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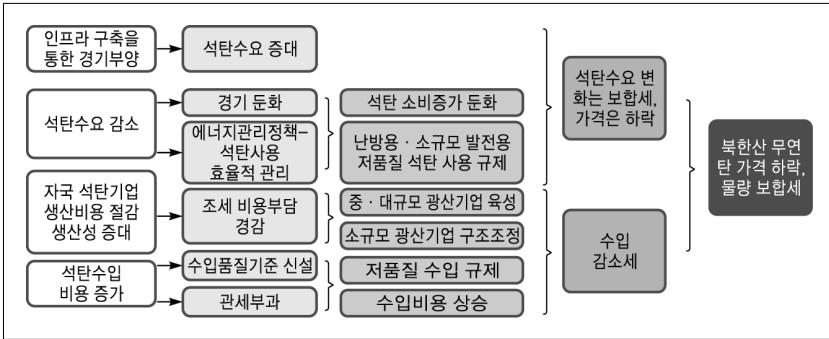
항구	조사 내용	
	시점	조사 결과
옌타이항 (烟台港)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석탄(阳泉煤)과 비교 시 북한산 무연탄의 품질이 낮음 · 불완전연소 문제 및 발열량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작음 · 북한산 무연탄은 냉열강도(冷熱強度)가 낮고, 연소 중 배출물질이 많아 설비손상이 많음 · 북한산 무연탄 사용 시 중국 석탄과 함께 사용 가능 · 북한산 무연탄 수입 시 세심한 품질검사 요망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산 무연탄의 품질이 전체적으로 불안정 · 중국 산시성(山西省) 석탄과 차이가 커 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른 비용이 크고, 이를 모르는 기업이 큰 손해를 입음 · 북한산 무연탄 사용에 다섯 가지 측면의 문제 발생 ① 실제 품질과 계약서상 품질 불일치, ② 각 석탄의 불균등, ③ 국내 산시성 석탄과 성질 및 회분의 용융성 차이, ④ 중국 국내 석탄과 발열량 차이 큼
르자오항 (日照港)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2009년간 118회(1척)의 북한산 무연탄에 대해 품질검사 시행 · 북한산 무연탄은 수분함유량, 회분량이 불안정 · 단 북한산 무연탄은 무연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휘발성과 수소함량은 안정적인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산 무연탄이 저가로 수입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중국 검역 및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 · 품질불안정이 최대 문제

자료: 관련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종합하면, 중국은 환경보호 강화와 에너지관리정책의 변화에 따라 석탄 소비를 감축하고 있다. 게다가 자국 석탄산업보호정책에 따라 품질상 문제를 지적받아온 북한산 무연탄에 대한 수입이 하락 추세에 있다(그림 3-1 참고). 비록 향후 추진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이 일시적으로 석탄 수요 증대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북한산 무연탄 수입의 확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석탄을 매개로 한 북·중 분업체계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에너지 소비의 증가율은 낮아지고 있을 뿐 에너지 소비량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중국정부가 환경규제와 에너지관리 정책을 기치로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면서 대체에너지와 환경오염

그림 3-1. 중국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 변화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유발이 낮은 에너지 소비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지 않는다면, 중국정부가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중국의 석탄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된다면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보다는 경기부양과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더욱 역량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한 석탄 수입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줄어들더라도 큰 폭으로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석탄을 매개로 한 북·중 분업체계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석탄 소비 감소는 북한의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철강 수요의 구조적 감소와 북한산 철광석 수입 감소

철광석은 북한의 대중 자원수출에서 무연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북한산 철광석의 수출 감소 추세에 따라 북·중 분업체계의 변화를 야기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이 중요한 발전동력 이었고, 이에 따라 철강산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이는 철강의 원자재인 철 광석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고, 북한산 철광석 수입 역시 증가하였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무연탄과 차별화되는 것은 무연탄은 경제성장 둔화로 가격은 하락했으나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 철강산업은 경제성장 둔화로 가격과 수요 모두 감소하여 산업 자체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대규모 시설투자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개발은 중국이 장기간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는 주요 동력 중 하나였다. 서부대개발을 비롯해 연안지역의 산업시설 구축, 각 성(省)의 거점도시의 도시화 등 크고 작은 부동산 개발사업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되었다.

아울러 저임금의 우수한 노동력을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었던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든 제조업 생산기지의 최적의 입지가 되었다. 이에 수많은 해외기업이 생산거점을 위한 투자를 단행하였고, 이 역시 부동산 개발사업이 가속화되는 주요 동인 중 하나였다.

특히 부동산 개발의 주요 자재를 공급하는 철강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해왔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철강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2013년 말 기준 세계 총 철강생산량의 49.2%, 아시아 총 철강생산량의 73.6%에 육박하는 제1의 철강생산국으로 도약하였다. 또 세계 10대 철강기업 중 6개 기업이 중국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총 철강생산량은 2억 3,000만 톤으로 이는 세계 총 철강생산량의 14.5%에 해당한다.⁴²⁾ 이 과정에서 핵심 원자재인 철광석 수요가 폭등하였고, 북한산 철광석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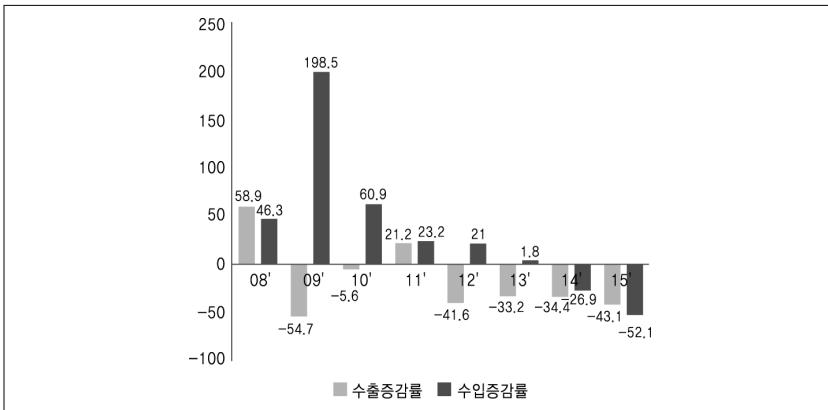
42) 이고은(2014), p. 26.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철강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국제적, 국내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철강 수요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중국 철강산업은 타격을 입게 되었다. 재고 물량 누적으로 공급과잉이 발생하면서 중국 철강 수출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⁴³⁾ [그림 3-2]와 같이 2009년 이후 철강의 수출증가율은 다소 상승하였지만, 2012년부터 2015년 5월 현재까지 대폭 감소하였다. 수출 감소에 따라 철강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중국 철강업체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급과잉으로 인해 국내외 철강업체들과 무역마찰이 증대된 점 역시 기업의 부담으로 귀속되었다.

그림 3-2. 중국의 철강 수출입 증가률(2008~2015년 5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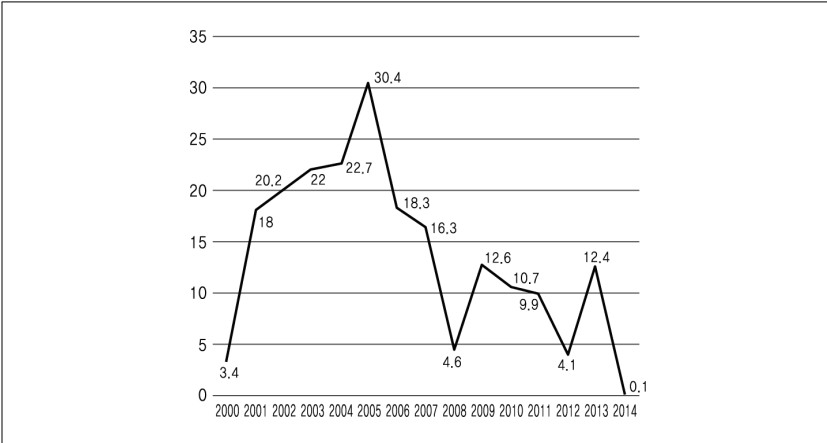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Online, 검색일: 2015. 8. 4).

43) 중국 내 철강의 과잉생산이 지속되어, 철강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함에 따라 2015년 1~7월 동안 철강재 수출량은 총 6,213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6.6% 상승을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전년의 2,380억 위안보다는 2.6% 감소한 2,319억 위안을 기록하여 과거보다 저가에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3. 중국 철강생산증감률 (2000~2014년)

(단위: %)



자료: 이고은(2014, p. 26, 재인용).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중국 철강업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경제성장 기간 동안 중국 내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고, 이 과정에서 성장한 철강 수요가 중국 내 철강업계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과잉투자로 인해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부동산개발 사업 및 관련 투자에 대한 기조가 긴축정책 기조로 전환되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철강의 국내 수요 감소로 인해 과잉공급 상황으로 연결되었고, 현재는 이 상황에 대해 물량과 가격 측면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젠팡(诸建芳 2014)은 현재 부동산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부동산 산업의 중장기적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부패 정책, 신용대출, 부동산세 인상으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 분석하였다. 특히 부동산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 약화는 결과적으로 서

비스산업이 대체해 나갈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역으로 기존 부동산 연관 산업인 강철, 시멘트, 화학 산업, 기계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을 의미하기도 한다.⁴⁴⁾

국내외적인 중국의 철강 수요에 대한 감소요인 외에도 자국 철강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 역시 향후 철광석 수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12·5 규획단계에서부터 제품구조 고도화, 에너지 절약, 산업구조조정, 자원 확보를 목표로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고강도·고인성 자동차용강, 아연도금강 등 고부가가치 철강제품의 자급률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노후화된 부문을 제거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에너지 소모 축소 정책을 추진하면서 철광석 수입 역시 부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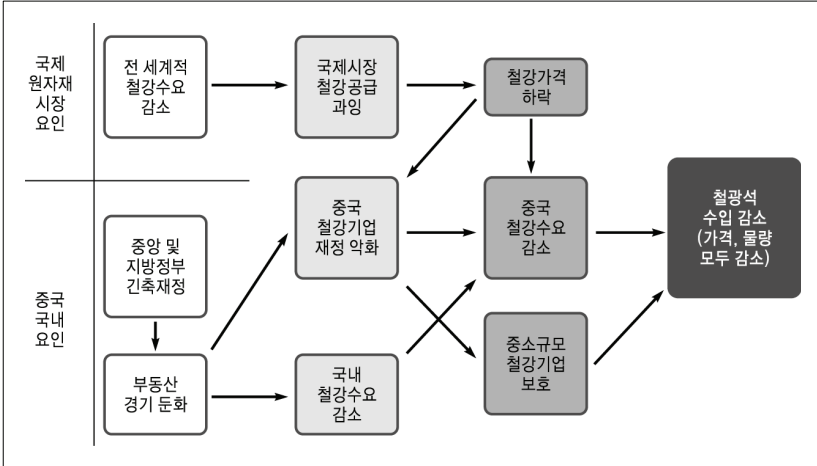
중국의 철강 수요 감소로 인해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의 약세가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철강 수요가 정점에 도달하여 철강생산이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것이고 향후 동시에 철강 축적량이 증가하여, 재고 철강의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 철광석 수요, 수입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호주, 브라질 등 자원 보유국의 환율 약세가 지속되고, 원자재 경기 회복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철광석 가격 약세가 장기화될 것이다.⁴⁵⁾

결과적으로 철강 수요 감소는 철광석 수입의 감소로 연결되고, 이는 가격과 물량, 두 가지 면에서 모두 감소함을 의미한다. 북한의 대중 철광석 수출 가격, 물량이 줄어든 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그림 3-4 참고).

44) KIEP(2013), pp. 2~7.

45) 허진석(2015), p. 6.

그림 3-4. 중국의 철광석 수입 감소 배경



자료: 저자 작성.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한 교역환경 변화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중국 철광석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북한이 중국에 광물을 제공하는 분업 체계 역시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중국의 철광석 소비가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다른 나라의 대중 철광석 수입을 대체해가면서 북한의 대중국 철광석 수입은 증가시켜가는 방안 또는 철광석 외의 다른 신규 상품을 개발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중국의 철광석 소비 감소는 철광석을 매개로 한 북·중 분업체계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향후 5·24 조치가 해제될 경우, 북한산 철광석은 남한의 철강기업으로 수출이 가능하여 남북 분업체계 형성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나. 중국 인건비 상승과 북한인력 수요 증가

북·중 분업체제 확대 배경에는 중국의 인건비 상승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덕택에 비용을 대폭 절감하였으나, 최근에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인원을 감축하거나 혹은 일부 단순노동집약적 생산공정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인력수급이 안정적이고 용이한 해외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 알 수 있다.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노무자가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나 혹은 일부 생산공정이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의 확대는 분업체제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저임금의 풍부하고 우수한 노동력은 과거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었고, 세계 주요 수출국과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에 유인을 갖고 대중 투자와 생산기반을 확충해왔다. 개혁개방 초 중반에는 특구를 중심으로 단순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입지해 있고, 수출입이 편리한 연안 지역을 따라 유사 산업이 성장하였다. 중국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국유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 역시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을 토대로 가속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은 핵심적인 투자유인 중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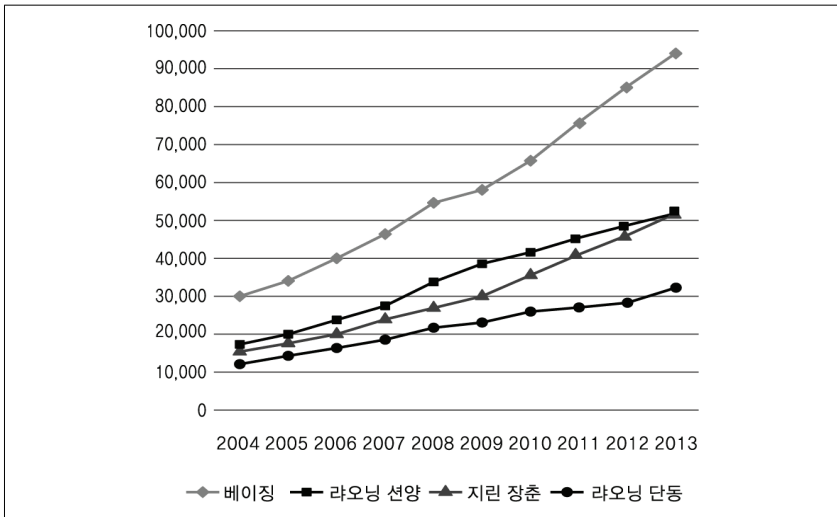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 진입하며 중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최저임금을 비롯한 사회보험료 및 각종 보험비용 등 전체적인 임금이 상승하면서 중국 내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금상승의 배경에는 정부정책과 물가상승 요인이 있고, 제조업 분야에서 특히 임금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이 더욱 압박을 받고 있다.⁴⁶⁾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임금상승을 비롯한 노동자 권익 강화와 사회보장제도 완비 등 노무

환경의 변화가 타국으로 기업이전을 고려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⁴⁷⁾

더욱 주목할 점은 중국정부의 민생보장이 내수소비 확대라는 경제발전 방식 전환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생보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선진화를 비롯한 실업, 신규일자리 등을 포괄한 중국 인민의 전체적인 복지증진을 의미한다. 복지증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소득 증가를 핵심 요인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인구와 일자리가 집중된 도시를 중심으로 민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동북지역의 성도(省都)인 선양, 창춘, 북·중 교역의 핵심지역인 단둥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3-5 참고).

그림 3-5. 도시별 평균임금(2004~2013년)

(단위: 위안화(RMB))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17).

46) 김부용, 이상훈, 임민경(2012) 참고.

47) 임민경, 여지나(2013) 참고.

한편 접경지역의 인력공동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수소비 확대와 민생 확대가 전국 각 지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신형도시화(新型城镇化)는 경제발전방식 전환과 맞물려 있는 핵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2014년 3월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년)[国家新型城镇化规划(2014~2020年)]』은 기존의 양적인 성장에 역점을 둔 도시화에서 질적인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프로젝트이다. 특히 리커창(2012)은 신형도시화가 내수 확대의 최대 잠재력이라 평가하며,⁴⁸⁾ 2020년까지 도시 상주인구 비율 60%, 도시 후커우(주: 호적)인구 비율을 4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⁴⁹⁾ 이미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 흐름을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신형도시화는 단순 2차 산업 중심의 도시개발에서 탈피하여 보다 고도화된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3-6 참고).⁵⁰⁾

중국 동북지역에서 젊은 인력 유출현상 역시 지역적인 맥락에서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의 분업체계 형성에 중요한 원인이다. 동북지역에서 유독 두드러지고 있는 인력유출 현상의 배경에는 낙후된 동북지역의 경제에 기인한다. 동북지역은 과거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계획경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이는 곧 민간 기업의 발전에 한계가 있어 경제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임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경제가 발전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동북지역의 국유 공업기지에 대한 구조조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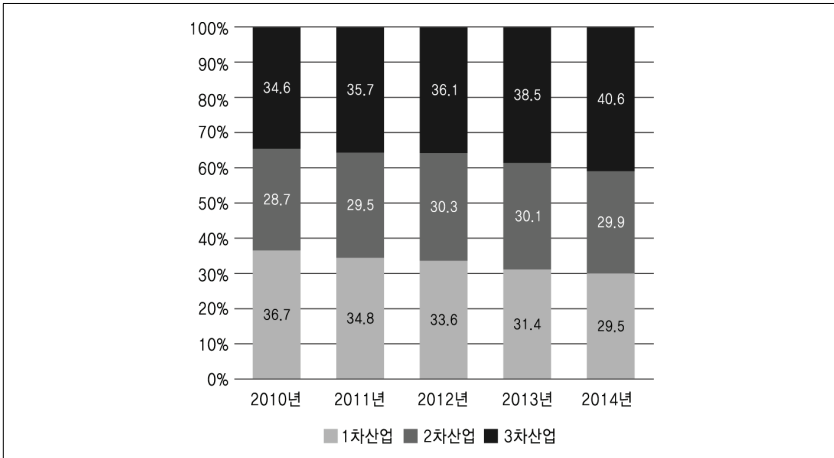
48) 李克强(2010).

49) 2012년 도시 상주인구 비율 52.6%, 도시 후커우인구 비율 35.5%.

50) 2015년 ‘중국제조 2025(中国制造2025)’, ‘인터넷+(互联网+)’ 정책을 차례로 제시하며, 선진적인 제조업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함.

그림 3-6. 전국취업인원의 산업별 구성현황(2010~201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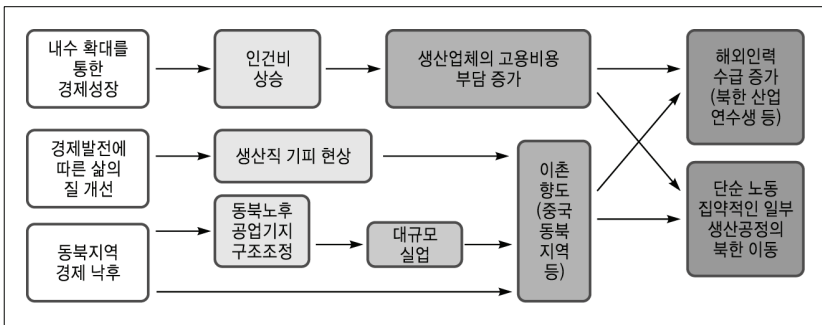
자료: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2015, Online, 검색일: 2015. 8. 4).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였다. 현재까지도 노후공업기지 구조조정 등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지역의 노동력이 낙후된 지역경제를 이탈하여 더욱 발달한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 가령 엔벤조선족자치주의 경우, 중국어와 조선어 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진출한 중국 대도시나 한국에서 노동 수요가 항상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조선족의 젊은 인력이 대도시나 남한으로 이주하여 취업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린성의 인력유출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 농촌지역의 젊은 인력은 도시화 정책의 영향 혹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유인에 따라 상급도시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¹⁾

51) 더욱이 동북지역의 인구증가율이 랴오닝(1.0%), 지린(1.3%), 헤이룽장(1.03%)으로 전국 평균인 1.5%를 하회하고 있어, 향후 20년 후 노동가능인구의 감소가 예견됨.

종합하면, 생산업체의 노무임금비용 상승, 민생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제고, 중국 동북지역의 젊은 인력 유출현상은 북한인력 수요 증가 요인이 작용하고, 이는 곧 북·중 분업체계를 촉진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7 참고).

그림 3-7. 중국의 접경지역 및 북한 내 노동인력 수요 상승 배경



자료: 저자 작성.

과거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이 현재의 경제발전에 따른 구조적·정책적 이유로 더 이상 단순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유치할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도 거의 사라졌고, 무엇보다 토지 임대료가 저렴한 중소 도시나 농촌에서는 젊은 인력의 유출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생산기지로서의 입지 매력도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때문에 북한의 접경지역 해외노동자 파견을 매개로 한 북·중 분업체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보다 접경지역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투자의 불확실성, 재산권 보호, 에너지 수급 문제 등 중국의 기업가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한 산업투자가 불확실한 상황에

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중국 접경지역 도시 개발로 중국 변경지역의 균형 개발을 유도하고 부족한 인력을 북한에서 공급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북한도 해외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와 중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부족한 물자 획득 등의 장점이 있어 접경지역 해외노동자 파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노동자 파견으로 외국문화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 경우, 북한 내 시장제도 확산 등의 우려가 있어 북한 당국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상황이며, 파견된 노동자가 해외에서 머무는 기간이 2년 내외로 제한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인력을 수급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인력수급을 매개로 한 북·중 분업체제는 양 지역의 이익이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북 경제협력 강화

북·중 접경지역에 위치한 중국 지방도시들은 최근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협력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북한 노동자 고용을 통해 현지기업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북·중 무역 활성화기조에 한층 박차를 가하기 위해 대북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의 동북지역 유입을 유도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강화 흐름이다. 한편 나진항 확보를 통해 중국 국내 물자를 해상을 통해 남부지역으로 연결하는 형태 역시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상 출로 확보에 따라 북한 수산

물을 수입하여 가공수출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시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향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단둥, 훈춘 등 접경지역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를 염두에 둔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접경지역 지방정부들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강화 배경에는 우선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성장 둔화라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최근 동북지역의 경제성장 둔화 속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동북지역은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 전체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이후 급격하게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2014년은 전국 31개 성(省)에서 하위 5위에 머무는 수준이었다. 중국이 중고속의 경제성장 상황에서 동북지역의 경제가 더욱 활력을 잃어가는, 소위 ‘신동북현상(新东北现象)’이 발생하였다. 특히 다른 성에 비해 성장률이 현저히 낮아 동북지역의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표 3-5 참고).⁵²⁾

표 3-5. 중국 전체와 동북지역의 GDP 추이 비교

기간	2011	2012	2013	2014
중국 전체	9.3	7.7	7.7	7.4
베이징	8.1	7.7	7.7	7.3
랴오닝	12.2	9.5	8.7	5.8
지린	13.8	12	8.3	6.5
헤이룽장	12.3	10	8	5.6

자료: 중국국가통계국(Online, 검색일: 2015. 8. 16).

52) 2014년 리커창의 선양 방문, 시진핑의 연변, 창춘, 선양 방문에서 동북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독려하면서 개혁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주문함.

동북지역 지방정부들은 기존의 부동산 개발 중심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다. 11·5 규획부터 추진된 ‘동북진흥전략(东北振兴规划)’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동북지역의 발전을 이끈 핵심개발 프로젝트였다. 동북지역의 노후 공업기지에 대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었고, 12·5 규획단계인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북지역의 각 성급(省級) 지방정부들에서도 일련의 발전계획이 추진되어왔다. 랴오닝성의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발전계획(辽宁沿海经济带发展规划)(2009)’, 지린성의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中国图们江区域合作开发规划纲要—以长吉图为开发开放先导区)(2009)’, 헤이룽장성의 ‘헤이룽장과 내이멍구 동북부지역의 접경개발계획(黑龙江和内蒙古东北部地区沿边开发开放规划)(2013)’ 등이 각 성의 대표적인 개발계획이었다. 이 밖에 북한과 접경지역에 있는 소규모 도시인 훈춘, 단둥 지역 역시 각각 ‘국제무역시범구(国际合作示范区)’, ‘단둥접경경제협력구(丹东边境经济合作区)’ 등을 조성하여 지역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동북지역에서 그간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앙정부와 성급 지방정부가 추진한 동북노후공업기지의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고, 무리한 부동산 개발, 건설 중심의 재정정책이 한계에 이르렀다.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고, 낙후된 동북지역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구유출이 초래되었다. 다만 산업기반이 미미한 지방에서의 부동산 개발 위주의 투자는 과잉투자 유발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⁵³⁾

53) 정지현, 김홍원(2014), pp. 8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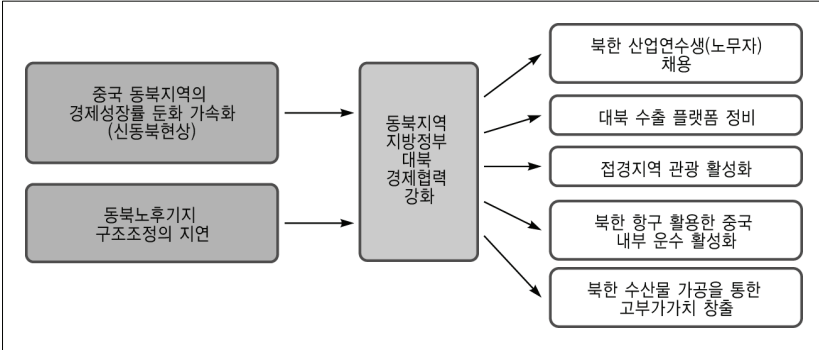
아울러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계획경제와 관료주의가 여전히 민간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 내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지역은 시장경제가 잘 정착되었고, 민간경제가 성장한 지역들이다. 동북지역의 경우, 1980년대 초 국유기업이 견인하는 가운데 전국 16%의 공업 생산력으로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국유기업과 계획경제의 잔재가 남아 있어 여전히 민간경제가 확대되는 것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중앙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지방정부의 기존 프로젝트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변화가 필요한 점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시진핑을 필두로 한 이번 중국 지도부의 핵심 정책으로,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일부를 포괄하는 초국경적인 광역개발전략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동북지역은 상대적으로 관련 정책이 미비한 편인데, 기존의 지역개발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이대이투와 연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⁵⁴⁾ 다만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지역개발전략의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기존 정책을 부드럽게 조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동북지역 발전의 또 다른 정체 원인은 해상으로의 출로가 여전히 막혀 있다는 점이다. 즉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여건 조성이 동북지역에서의 항시적인 선결과제이다. 지리적으로 해양과 분리된 내륙에 위치해 있고, 접경국가인 북한과 러시아 극동이 개방에 소극적인 점 역시 대외개방의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54) 관련 기관 담당자 면담(비공개).

그림 3-8. 중국 동북지역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강화 배경



자료: 저자 작성.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 강화는 이러한 맥락하에서는 중국 동북지역, 특히 접경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새로운 활로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북한의 대중국 육상 교역의 창구에서 한 발 나아가 사람과 물자, 돈이 오가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시가 성장하는 정책 기조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 중 라오닝성 단둥시와 지린성 훈춘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에서 단둥시와 훈춘시의 대북 경제협력 강화 정책을 용인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북·중 관계가 소원했다고 할지라도 경제협력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대북 경제협력이 두 도시의 발전에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

단둥시는 북·중 교역의 요충지로서 화물교류량과 이동인원, 교통편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단둥시는 도로 통상구와 해상 통상구를 통해 물류, 인원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해왔다(표 4-6 참고). 특히 북한의 대중 수입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둥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최근에는 접경지역을 비롯한 북한 관광이 한층 활성화되면서 인적 왕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6. 단둥 통상구 물류·인원·교통수단 이동 현황

주요 통상구		2011	2012	2013	
도로	도로	수출(만 톤)	60.60	85.70	94.80
		수입(만 톤)	15.00	16.60	21.90
		이동인원 출입합계(만 명)	14.70	19.20	15.50
		교통수단 출입합계(만 량)	12.60	15.5	15.6
	철로	수출(만 톤)	19.70	18.40	15.00
		수입(만 톤)	26.60	28.90	40.20
		이동인원 출입합계(만 명)	7.60	7.10	9.50
		교통수단 출입합계(만 량)	0.2	0.1	0.2
	합계	수출입 합계(만 톤)	75.60	102.30	116.70
		전년대비 도로 수출입 증감률(%)	30.00	35.3	14.10
		전년대비 철로 수출입 증감률(%)	51.30	2.2	16.70
		전년대비 도로 이동인원 증감률(%)	63.30	30.6	-19.30
전년대비 철로 이동인원 증감률(%)		20.60	-6.6	33.80	
전년대비 도로 교통수단 증감률(%)		16.70	23	0.60	
전년대비 철로 교통수단 증감률(%)		-	-50	100	
해상	화물	수출(만 톤)	205.70	188.90	243.00
		수입(만 톤)	375.10	442.70	662.30
		합계(만 톤)	580.80	631.60	905.30
		전년대비 수출입 증감률(%)	27.80	8.7	44.30
	컨테이너	컨테이너 합계(만상자)	70.80	5.0 ¹⁾	150.80
		컨테이너 증감률(%)	121.90	-9.1	20.60

주: 1) 통상구의 각 연도 연감을 종합해 작성한 본 표에서 해당 수치가 제시되었으나, 계산상 부정확함.
 자료: 中国口岸年鉴(2012, 2013, 2014)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단둥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북 경제협력사업으로 신압록강대교 건설, 황금평·위화도 특구, 중·북 접경 민간 호시무역구(中朝边境互市贸易区) 설립, 출경무역(出境贸易)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신압록강대교는 경제협력사업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북한 측의 마무리 공사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나 연결된다면 양국의 물자교류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또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황금평·위화도는 중국과 북한이

공동 개발하는 경제특구로서 큰 상징성을 함의하고 있다. 최근 단둥시는 단둥신구 지역에 호시무역구 설치를 발표하여 2015년 10월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호시무역구는 신압록강대교의 중국의 초입 지역인 단둥신구에 위치하고 있고, 북한을 겨냥한 투자유치에 보다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표 3-7 참고). 이 지역은 일정액(8,000위안) 이하 상품구매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무관세 특별구역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단둥시는 2014년부터 ‘출경무역(出境貿易)’에 대한 관세면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임가공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이 제도는 시범단계에 있으나 북·중 분업체계가 확대일로에 있음을 시사한다.

표 3-7. 중·북 접경 민간 호시무역구(中朝边民互市贸易区)

	주요 내용
위치	· 단둥 신구 국문만(国门湾) 과학기술오금성(科技五金城)
규모	· 면적: 4만 평방미터 · 건축면적: 2.4만 평방미터
주요 서비스	· 5대 서비스 지역으로 구분 ① 전시교역(展示交易) ② 물류저장(仓储物流) ③ 정차점검(停车候检) ④ 관련검사(联检办公) ⑤ 행정서비스(管理服务)
주요 특혜	· 단둥시에서 20km 내 거주 중인 주민증을 가지고 호시무역구 내에서 북한 주민과 상품교환 가능 · 1인당 매일 8,000위안 이하의 상품은 수입관세와 수입과징금 면제
향후 추진계획	· 호시무역구 관리기구 설립 및 제도, 운영방식 정립 · 관련 시설 정비 및 호시무역 상품리스트 작성 · 국내외 무역기업 유치 활동 전개

자료: 辽宁省人民政府(2015, Online, 검색일: 2015. 9. 10).

한편 제3국 민간기업의 참여 역시 북·중 분업체계 확대의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한국기업인 SK의 보세창고가 운영 중인

데, 북·중 물류이동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2011년 진출 이후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지연되면서 작년에는 12만 톤 수준으로 하락하여 최저치를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2015년에는 회복 추세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보세물류창고가 취급하는 주요 상품 중에서도 북한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 철광석인데 대중 수출입 모두 줄어드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무연탄(광산물)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비롯해 북·중 관계가 개선되면 물류산업 활성화와 함께 분업체계 역시 한층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훈춘시는 지린성의 소규모 지방정부임에도 중국, 북한, 러시아 3국이 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대외개방과 투자유치를 위해 대북, 대러시아 경제협력정책을 추진하여 북·중을 비롯한 3국 분업의 잠재성이 풍부하다. 지린성 정부에서는 훈춘시를 2015년 8월부터 연벵주와 동급의 지자체 정부로 격상하여, 독자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훈춘시 정부는 자체적으로 225개 항목에 대한 심사 권한을 확보하는 등 권한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배경에는 훈춘시가 지린성 창지투 계획 중 대외개방의 선봉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훈춘시는 지린성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선행선시(先行先試) 지역으로서 차항출해(借港出海)를 위해 북한 나선특구의 나진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자루비노항 연계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⁵⁵⁾

55) 선행선시(先行先試)는 특정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추후에 받는 권한을 의미함. 차항출해(借港出海)는 해양과 떨어져 있는 지린성을 비롯한 동북지역이 북한,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구를 빌려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정책을 가리킴.

표 3-8.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 물류·인원·교통수단 이동 현황

주요 통상구		2011	2012	2013	
도로	도로	수출(만 톤)	5,43	13,13	14,26
		수입(만 톤)	14,20	6,60	9,10
		이동인원 출경(만 명)	13,10	17,92	18,40
		이동인원 입경(만 명)	13,01	17,82	18,51
		교통수단 출경	40,309	51,377	59,092
		교통수단 입경	42,816	50,795	58,910
	합계	수출입 합계(만 톤)	19,63	19,73	23,36
		이동인원 출입합계(만 명)	26,11	35,74	36,91
		교통수단 출입합계	83,125	102,172	118,002
		전년대비 수출입 증감률(%)	61,50	0,50	18,40
		전년대비 이동인원 증감률(%)	67,20	36,90	10,20
		전년대비 도로 교통수단 증감률(%)	75,60	22,90	17,80

자료: 中国口岸年鉴(2012, 2013, 2014)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이 가운데 훈춘시는 북한의 산업연수생(노무자)을 더욱 적극 활용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향후 신규산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훈춘시 정부는 향후 2020년까지 ‘13·5 계획’을 추진, 8대 산업(해산물, 의류, 물류, 관광, 광물, 의료, 신형 건축자재, 목재)을 100억대 규모로 성장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표 3-9 참고). 이 과정에서 의류와 수산물 가공에는 거의 북한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은 훈춘에서 진행되고, 북한에서는 단순임가공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곧 북·중 분업체계의 현황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훈춘시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9. 훈춘 주요 신성장산업 진출 사례

산업	주요 사례
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젠성에 본부를 둔 중국 최대 민영 금 생산업체인 '초진광업'이 금·동에 투자를 마쳤고, 20일에 시범생산 가동착수, 생산능력은 100억대 예상 · 블라디보스토크항과 나진항 등을 통해 러시아 또는 춘화의 금·동광에서 광물을 반입하여, 훈춘에서 가공, 중국 내수로 공급
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최대 의류업체 중 하나인 '야겔'이 진출해 있으며, 역시 2~3년 내 100억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수산물 기업이 운영 중에 있고, 향후 4개 기업이 추가로 진입 예정
관광 및 물류 (인프라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창춘-훈춘 간 고속열차가 9월 20일 개통 예정, 장춘까지 약 2시간 반 소요, 일평균 22.5차가 운행될 예정이라고 함. · 항공: 훈춘공항이 30인 이하 소형비행기 운영용 민영비행장 운영 예정, 연결에 공항이 있으므로 비행장 설립 거리제한에 걸려 보조 역할로 시범운영 계획 · 도로: 러시아와 고속도로 건설을 논의 중,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철도 연결 타진 · 자전거: 국제 자전거 대회를 연 1~2회 개최하고 있으며, 사튀즈 통상구를 통해 일일관광 허가

자료: 언론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종합하면, 중국 경제성장 둔화속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동북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로 인해 분업체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북·중 중앙정부 간의 정치적인 관계가 악화되어 있지만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수요,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 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⁵⁶⁾ 이러한 중국 동북지역 지방정부의 대북 협력정책 강화 기조는 점경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북·중 분업체계를 더욱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5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은 임호열 외(2015)를 참고.

2. 북한의 분업 결정요인

본 절에서는 최근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북·중 분업체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① 인민생활향상정책과 자력갱생의 한계 ② 열악한 기초인프라 여건 개선을 위한 BOT식 개발정책 ③ 대중의존도 심화와 외화벌이 수단의 다각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인민생활향상정책과 자력갱생의 한계

최근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거듭 강조하며 인민생활용품의 보급과 인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보조금 예산 고갈, 에너지·원자재·외화 부족, 생산기계·설비 파괴로 인해 김일성 시대부터 누적되어온 문제와 경제회생 자생력의 상실이었다. 그동안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은 국방공업 관련 산업의 회복으로만 한정되었으며, 인민경제 부문은 공장·기업소 및 지방 행정당국 자체의 노력으로 복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때문에 집권 초기 김일성의 최고 이상이었던 인민경제문제 해결을 경제정책의 중점 목표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고, 이를 통해 3대 세습의 정당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올해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표현을 다섯 차례나 쓰면서 식량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북한이 인민경제생활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발표한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북한은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국방에 집중되던 자원을 인민생활로 회귀시

킬 것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동 회의에서 김정은은 “핵강국이 되면 강력한 전쟁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 건설에 자금과 노력을 총집중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밝혔다.⁵⁷⁾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군수산업으로만 집중되던 자본을 경제부문에 배치하여 인민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북한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⁵⁸⁾ 이러한 배경하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선언한 ‘경제·국방 병진노선’은 인민생활 향상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인민경제생활 향상을 위한 개선조치는 ‘경공업과 농업부문’ 주력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북한은 2010 신년사⁵⁹⁾를 통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공업과 농업이 4대 선행 부문(금속·전력·석탄·철도)보다 우선과제로 제시된 것은 1994~1997년 ‘3대(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가 제시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⁶⁰⁾

2011~2012년 신년사에 이어 2013년 신년사에서도 “농업과 경공업은 여전히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설”임을 상기시켰으며, 동년 3월 18일에는 전국 경공업대회를 열고⁶¹⁾ 김정은이 직접 육성연설을 통해 경공업 육성의 중요성, 경공업 원료·자재 문제 해결 및 설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57) 『北, 軍병력 30만명 경제 부문에 배치하기로』(2013. 7. 10).

58) 2013년 4월 1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새로운 병진노선은 경제건설의 힘 있는 박차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핵억제력이 있고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 수 있는 군사적 힘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도 마음 먹은 대로 다그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함.

59) 『당 창건 65돌을 맞은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의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2010. 1. 1).

60) 홍익표(2010), p. 42.

61) 북한에서 전국 규모의 경공업 대회가 개최된 것은 2003년 3월 전국 경공업부문 일꾼회의 이후 10년 만임.

고 언급하면서 생산원자재의 자급자족을 강조하였다.

이 때문에 표면적인 정책기조로만 미루어본다면 북한은 인민생활향상 정책 실현에 있어 자력갱생 기조를 굳건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경공업대회에 직접 참석하여 경공업 부문에서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원자재의 높은 수입 의존도이며 이러한 수입병(病)이 경공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⁶²⁾ 또한 “공장을 현대화한다고 해서 남의 것을 쳐다보면서 많은 외화를 들여 설비를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 오려고만 하는 편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자력갱생의 기조를 다시금 확인시켰다. 또한 외국 상품을 ‘수입병’으로 규정하고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신문』을 통해 ‘모든 것을 수입해 쓰는 사람이 바로 현대판 노예’라고 보도하기도 하였다.⁶³⁾ 이러한 자력갱생의 기조하에서, 북한은 자체적으로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경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지방경제 주체들의 창발성을 강조하며 분권화 정책을 시도하였다. 각 공장·기업소에 생산과 처분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였으며, 계획지표 이외의 잉여 생산물은 시장판매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의 붕괴와 지속된 경제난으로 생산에 필요한 수단과 원·부자재를 국가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자력갱생’의 기조하에 생산현장에 부여된 자율권이 오히려 각 공장·기업소들이 생산정상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외화를 벌여 필요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것을 촉진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이게 하였음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분권화정책은 자력갱생을 주창하는 한

62) 법무부 북한연구지원단(2013), p. 41.

63) 『사랑하라 우리의 것을』(2015. 3. 30).

편, 각 공장·기업소에 무역권한을 확대하여 대외무역을 통한 원·부자재 수입과 외화벌이의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⁶⁴⁾

북한의 자력갱생정책의 한계는 생산 원·부자재 공급원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하였다. 특히 식료품과 생필품을 생산하는 식료품공장과 경공업 분야의 공장은 지방에 많이 있고, 이들 공장은 중앙기관이 직접 챙기는 공장보다 설비, 자재 등이 열악한 편⁶⁵⁾이다. 공장·기업소 내의 유보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력갱생의 기초하에서도 실제로는 기술 개발과 원부자재(원료)를 대부분 외자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표 3-3, 표 3-4 참고), 석유·역청유 등의 에너지원료, 쌀(정미)·옥수수·밀가루·감자분말·대두유 등의 식품원료가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을 통한 대중 수입품목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원·부자재 조달 문제는 인민생활향상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 최근 김정은의 경제적 치적 사업의 일환으로 평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동원사업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북한은 천리마와 마식령 속도에 이어 평양 속도를 강조하며 동원사업을 통한 국지적인 경제 치적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야말로 이런 보여주기식 업적 개발이 필요한 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 소식통에 따르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하여 평양에서 진행되던 건설사업이 건설자재 부족으로 인해 중단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진시만 하더라도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는 주변 고무산시멘트공장에서, 철강재는 김책제철

64)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 연구 완성술」(2013. 5. 15); 전충혁(2013), pp. 39~40.

65) 「北, 지방개발에 속도대나...‘자체 외화벌이’ 강조」(2013. 11. 10, Online, 검색일: 2015. 7. 13).

연합기업소 압연분공장에서 받았는데 전기와 원료 부족으로 인하여 이러한 자재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해져, 대대적인 건설사업과 동원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평양은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⁶⁶⁾ 북한은 주택시장의 부분적 사유화를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도시건설에 돈주들의 개인자본을 활용하거나, 심지어는 일부지역의 경우 외국인에게 아파트 건설·투자·매매를 허용함으로써 외화자본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⁶⁷⁾ 이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 부동산투자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재 시장에서도 외국상품, 특히 중국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 기준과 품목이 모호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북한시장에서의 중국 상품의 비율은 60%에서 많게는 90%까지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시장에 중국 상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가 붕괴되고 북한 공장·기업소의 원활한 생산이 어려워진 것에서 기인한다. 중국에 연고를 둔 북한 화교, 중국 연고자, 조선족 등이 북한시장의 상품 공급자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산 상품이 급격하게 유입되고, 북한시장을 크게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다.⁶⁸⁾ 국영상점의 기능이 약화되고 장마당을 포함한 시장기능이 크게 확대되었고, 때문에 북한 인민생활경제는 장마당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산 상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한 탈북자 인

66) 「북, 철길주변 아파트 건설 중단」(2014. 5. 27, Online, 검색일: 2015. 9. 20); 「북, 자재부족으로 건설사업 부진」(2015. 6. 11, Online, 검색일: 2015. 9. 20).

67) 평양 인근에 새로이 조성되는 신도시의 경우, 일정 몫을 국가에 지불하지만 하면 외국인도 주택을 건설하고 리모델링 판매 및 임대를 할 수 있음. 구매자는 주택을 개인적으로 소유 또는 임대할 수 있게 됨.

68) 이석기, 양문수, 정은이(2014), pp. 16~17.

터뷰에 따르면, “북한의 경공업, 즉 비누, 치약 같은 생필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일부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는 하나, “의류, 신발 등의 90% 이상이 수입산”이라며, 김정은까지 직접 나서서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수입품이 범람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⁶⁹⁾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 내 일부 구매력이 확대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북한산보다 질이 좋은 중국산 소비제품에 대한 수요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신경제관리조치와 함께 개별 주체의 생산활동의 제한적인 자율화, 상업·유통업 분야에서의 계획경제 완화 등의 조치는 생산과 소비 시장에서의 북·중 분업체계 심화를 더욱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⁷⁰⁾ 중국시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생산과 소비의 분업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2003년 종합시장 개혁 이후 무역회사가 종합시장의 영역에 포함되고, 최근 무역권한을 가진 기업이 확대됨에 따라 무역회사는 각 지역에 판매소를 설치하여 중국 상품을 직접 시장에 유통하는 주체로 성장하였으며, 분업화된 시장은 무역 하부단위에서도 전문성을 띠면서 중국시장과 직접적인 거래소통을 하고 있다.⁷¹⁾ 이러한 무역업의 성장은

69) 「북한 ‘국산품 애용’ 강조…특권층은 한국산 선호」(2015. 5. 16, Online, 검색일: 2015. 9. 20).

70) 2013년 6월, 조총련 월간지 「조국」과 오영민 내각 상업성 국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도매 상업 기업소들은 계획 초과분과 계획 외의 상품 등을 임의의 소매망들로부터 주문받아 운송해주는 운영방법으로 전환할 것이며, 상품의 양과 품목에 대한 상업·유통기관의 재량권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할. 또한 또한 상업·유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에게 주문을 받아 상품을 생산·공급하는 ‘주문제’를 실시해야 하며 “주민들의 상품 수요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생산보장 가능성을 고려, 상품주문서를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되게 작성·제기해 수요와 생산을 제때 맞물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북한, 상업·유통 부문 자율성 강화 추진」(2013. 1. 10, Online, 검색일: 2015. 7. 14).

계획분야에서의 잉여 노동력을 무역 관련업, 특히 상업과 운송업으로 이동시켰다. 무역회사가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함에 따라 중국산 화물차 수입도 크게 늘었으며, 북한 전역을 연결하는 장거리 버스 운영체제도 형성되었다.⁷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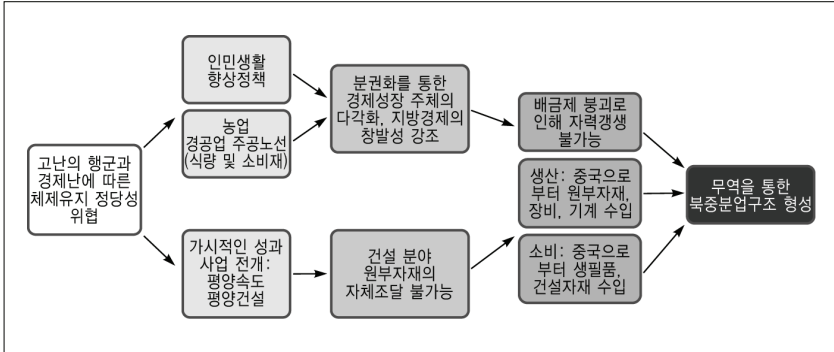
정리하자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체제유지 정당성에 대한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들어선 김정은 정권은 인민생활향상정책과 농업·경공업 주공노선을 통해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주요 정책기조로 내세웠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의 개혁조치를 통해 시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경제주체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생산과 외화벌이의 주체를 다각화하였다. 한편 상기한 경제정책의 성과가 미약하자 평양 속도 및 평양건설을 강조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원·부자재 조달과 소비재 생산의 자력갱생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소비시장에서의 대중의존도가 높아지고, 북·중 분업체계가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그림 3-9 참고).

북한의 상업·유통업과 노동시장은 대중무역과 연계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북·중 무역이 심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의 북·중 분업체계가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일정한 형태로 고착화되고 있다. 북·중 무역의 확대와 분업체계의 고착화는 북한경제 전반이 중국경제에 취약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중국 경기 둔화와 북한의 대중 교역 조건 악화가 북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

71) 이석기, 양문수, 정은이(2014), pp. 108~109.

72) 「“北, 중고버스가 판친다?” 대중교통 마비 속 사설 장거리 버스 활개」(2015. 5. 3, Online, 검색일: 2015. 10. 20).

그림 3-9. 북·중 간 생산과 소비 시장에서의 분업체계 형성 배경



자료: 저자 작성.

다. 따라서 최근 중국 경기의 둔화에 따른 북한의 교역조건 악화는 북한이 생산과 소비의 부문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하자원을 매개로 한 북·중 무역 이외에 생산과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력갱생 방안과 외자유치 정책을 강구해야 함을 암시한다.

나. 열악한 생산인프라와 광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북한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어 생산역량만 확보되면 경제성장에 필요한 원료를 자체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⁷³⁾ 그러나 풍부한 광물자원을 생산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생산인프라인 전력수급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생산에 어려움을

73) 북한이 자원부존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광물자원 매장량은 추정자료에 의존함. 북한의 광종별 매장량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을 세계적인 자원대국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나 생산수준이 낮기 때문에 개발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초기 북한 경제를 도약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만큼의 풍부한 양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정우진 2014, pp. 8~9).

겪고 있다. 북한 학술지인 『경제연구』에 따르면, “오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다그치는 데서 가장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전기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다. 전기문제부터 풀어야 석탄, 철과 기계, 비료와 쌀도 나오고 철도수송문제도 풀리며 모든 문제가 다 풀려 공장, 기업소들이 잘 돌아가고 나라의 전반적 경제가 활력 있게 전진해나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북한 역시 열악한 생산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⁷⁴⁾ 전력의 자체적인 조달이 어려움에 따라 생산역량 제고가 불가능해진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광물 및 광물성 제품의 수출 진흥’ 정책을 발표하고, 광업분야의 외자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하였다. 고난의 행군 이후 극심한 경제난 타파를 위해 광물자원을 자체적으로 소비하여 생산역량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수출을 통한 외자유치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중국은 2005년 10월과 2006년 1월의 2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하여 교역, 투자,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할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투자보장과 경제기술협조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북·중 분업체계가 태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북한이 합영·합작기업의 창설 운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외국인 투자법」·「합영법」·「외자기업관세법」 등 해외 투자유치 관련법령을 수정·보완하며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은 광업 분야에서의 북·중 분업체계를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BOT(Build-Operate-Transfer) 식 개발방식을 도입하여 투자자에게 장기적으로 생산설비 이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투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유인이

74) 차금순(2015), pp. 23~24.

있는 것이 사실이다.⁷⁵⁾

그러나 실제로 북·중 간의 광업 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북·중 간의 광업 투자 현황은 실제로 계약 체결이나 실제 생산 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표 3-10]은 대북자원 개발에 대한 중국의 투자현황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2005년을 시작으로 2006년 이후 중국의 대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북 투자 이후 성공 여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2012년 이후에는 관련 기사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2년 KOTRA가 발표한 「중국기업의 북한진출 현황」에 따르면 북한에 투자된 중국자본의 약 70%가 광산자원에 대한 투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⁶⁾ 일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북한 광산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해 30억 위안(약 5,300억 원)규모의 ‘북한투자전용펀드’를 설립하기로 협약을 맺었다는 보도도 있으나,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북·중간의 광물자원 공동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열악한 광산투자환경은 투자자가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대북 투자자에 따르면 북한의 낮은 신용등급, 투자금 선(先)예치와 금품 요구, 열악한 인프라 환경, 수시로 변경되는 규제 등은 북한에 대해 장기적인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실제로 2012년 중국 시양그룹이 북한 황해남도 웅진철광에 2억 4,000만

75) BOT식 개발은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 투자자가 자본설비 등을 일정 기간 운영하는 것을 말함. 그 기간 동안의 운영수입을 통해 투자재원을 회수하고, 이용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함.

76) KOTRA(2012, Online, 검색일: 2015. 10. 15), p. 3.

표 3-10. 대북자원 개발에 대한 중국의 주요 투자 현황

광산명	광종	소재지	추진 현황
무산	철	함북 무산군	· '07 연변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철광 80만 톤 수입 · '09.2 길림천우집단국제공사 900만 달러 투자
혜산 청년	동	양강도 혜산시	· '08.11 중국왕상그룹과 혜산청년광산 공동 「혜중광업합영회사」 설립(중국 지분 51%) · '11.9 부분생산 개시, 중국과 동광제련문제 이견 · '14.9 생산정상화, 현재 한 달 300톤 생산
혜산 청년	연 아연	양강도 혜산시	· '06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중국 중진 철광 그룹 협약 체결, 채광설비 제작 · '09.7 설비 제조를 중단했으나 개발 재개
덕현	철	평북 의주군	· '07.3 홍콩봉황투자집단공사와 합작계약 - 투자규모 6억 위안, '08년 철정광 5만 톤 생산 수입
웅진	철	황남 웅진군	· '08.6 요녕성서양그룹과 개선무역총회사 공동 「서해합영회사」 설립, 투자액 3,000만 유로
은파	연 아연	황북 은파군	· '06.3 청해성 서부광업유한책임공사와 채취공업성 은파광산 합작합의서 체결(3억 5,000만 위엔)
장진	몰리브 덴	함남 장진군	· '06.5 단둥위민국제상무유한책임공사와 조선대양총회사 공동 「대양-중국제합영집단공사」 설립 - 합영투자규모 240만 유로(중국 50%, 북한 50%)
우산	금광석 금광분	자강도 우산시	· '12.12 중국 훈춘 응이수출입무역회사와 북한 평양모린봉무역총회사 금광합영개발 위한 계약 체결
운산	금광	평북 운산군	· '12.12 중국 후난웨이진 투자그룹, 추정매장량 50톤 이상인 운산 금광에 2,000만 달러 투자계획 발표
농포/하면/ 훈용탄광	석탄	함북 경원	· '09 연변의 한 기업이 북한 조선승리경제무역연합회사와 합작개발 계약 체결 · '10 북한 중앙당국이 합영회사 설립 허가 - 경원 탄광에서 연간 100만 톤 석탄 생산 계획
룡등	무연탄	평안북도	· '05.10 중국 우광그룹과 합작회사 설립 합의
-	무연탄	함경남도	· '06.12 중국 칭금성세발전과 무연탄 생산 및 수입 협의서 체결 - 매달 2만 톤 수입하고 가격은 한 달에 한 번 시세에 따라 조정
김정숙	석영	양강도 김정숙군	· '11 중국 칭바이경제개발구 변경무역 수출입 총회사와 북한의 조선신진 회사 석영광산 공동 개발협약 체결 - 채굴한 석영을 중국으로 들여옴
-	철	김책시	· '11 중국 연변 진룽철광, 협의 거쳐 김책시 철광 개발 착수. 이미 장비 보냄 - 채광설비 규모가 6,000만 위안

자료: 정우진(2014), p. 34를 참고하여 저자가 업데이트함.

위안을 투자하여 철광석 선광공장을 건설했으나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례를 볼 때 대북 투자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열악한 대북 투자환경은 향후 북·중 분업체계가 장기적인 기초 인프라 투자가 필수불가결한 광업분야보다는 위탁가공을 위시로 한 제조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위탁가공은 공장을 신규로 설립할 필요 없이 조립과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만 제공하고 현지 노동력과 기계설비로 생산한 제품을 다시 국내 시장 또는 제3국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농업·수산업 부문에서 각광받는다는 측면에서 북한에 충분히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위탁임가공무역의 경우 통관 시 세금이 일반 무역관세의 1/5만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 인하에 따른 수요 급증이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서 대북 위탁가공이 처음으로 허용됨에 따라 접경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을 중심으로 대북 위탁가공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2013년 1월 6일, 지린성 장춘해관은 북한과 접경한 훈춘시에 있는 4개 의류제조업체⁷⁷⁾에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2년간 시범적으로 허용하였으며, 해당 업체는 상당한 정도의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한 벌에 200위안(약 3만 6,000원)인 의류의 경우 중국으로 들여올 때 일반무역에서는 54위안(9,720원)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위탁가공무역의 경우에는 1/5인 10.8위안(1,944원)이 부과된다. 시범적 위탁가

77) 대상기업은 훈춘운달복장유한회사, 훈춘홍풍제의유한회사 등 중국기업 2곳과 한국 길림 트라이방직유한회사, 일본 고지마의류훈춘유한회사임.

공무역을 허용한 이후 5개월 만에 지린성 정부는 대북 위탁가공을 통한 의류제품을 국내 생산으로 간주해 품질·안전 검사 측면에서 우대해주고, 북한으로 원자재를 반출하여 가공한 의류를 중국으로 재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지린성검험검역국이 해당 상품을 국내 생산으로 간주해주는 등 추가적인 우대혜택을 제공하였다.⁷⁸⁾ 또한 중국을 경유하여 러시아로 수출되는 북한산 식용 수산물 중에서 중국 내에서 가공하지 않은 단순 중계 무역인 경우에 허가절차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지린성은 추가적인 통관절차 간소화 노력을 통해 통관시간도 단축하였다. 훈춘세관의 경우 ‘원스톱식’ 통관 방식에 따라 수입품의 평균 통관시간이 1.3시간으로 과거보다 57% 단축되었다.⁷⁹⁾

2014년에는 단둥에서도 5개 의류업체에 2년간 대북 위탁가공무역이 시범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위탁가공무역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으로 단둥의 의류생산업체가 120개에서 70개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에 단둥 현지 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활용하려는 추세이다. 현지 언론은 장기적으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단둥에 창장·주장·삼각주에서 이전하는 대규모 의류산업기지와 물류센터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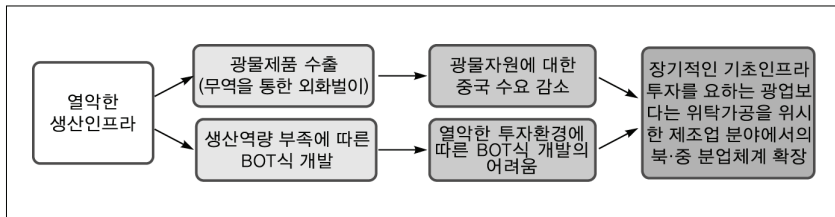
정리하자면, 북한은 열악한 생산인프라 문제를 외자유치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풍부한 광물자원은 광업분야에서의 북·중 협력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기간의 생산설비 이용

78) 지린성은 이번 조치가 훈춘국제합작시범구 활성화를 위한 시범조치라고 설명함.

79) 『中, 대북 임가공품 통관 절차 간소화』(2014. 5. 24, Online, 검색일: 2015. 7. 13).

권 부여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투자환경은 막대한 규모의 자본이 장기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광업분야에서의 북·중 분업체계의 형성과 촉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북·중 분업체계는 광업보다는 위탁임가공무역을 위시로 한 수산업·농업과 방직공업 등의 노동집약적 경공업·제조업 분야에서 심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제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산 수산자원에 대한 중국 측 유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은 북한 수역 조업 및 수산물 양식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북지역의 인력공동화 현상과 북한 측 저임금 노동자의 시너지 효과로 의류·신발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중국은 유효수요자와 원·부자재 공급자로서, 북한은 수탁생산자로서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그림 3-10 참고).

그림 3-10. 북·중 간 제조업·경공업 분야에서의 분업체계 형성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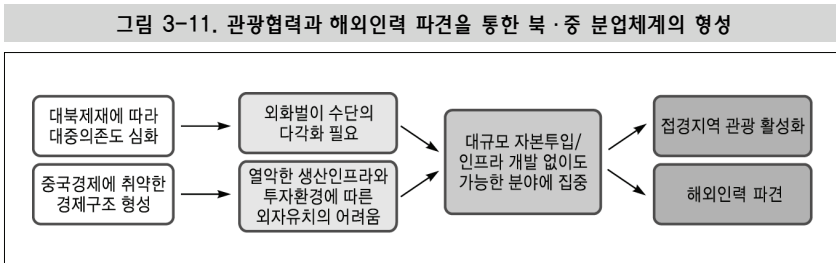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다. 외화벌이 수단의 다각화 필요성

최근 관광산업 및 해외인력 파견 등 서비스 교역분야에서도 북·중 분업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해외인력 파견과 관광산업을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과 같이 자원 개발에 편중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는 외화벌이에 상대적

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투자장애요인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원활한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대북 제재와 남북경색 등 무역을 통한 외화벌이 손실과 더불어 중국 발 경기 둔화에 따른 부정적인 경제효과를 관광산업과 해외인력 파견사업을 통해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도 할 수 있다(그림 3-11 참고).



자료: 저자 작성.

북한은 2013년 『경제연구』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자원개발에 편중된 것은 주요한 투자 목적이 생산활동을 위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투자 방식뿐 아니라 투자 부문에서 다양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앞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활동에서 부정적 후과(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⁸⁰⁾ 2013년 ‘도마다 경제개발구를 창설’하여 각 지역의 특화산업을 제시한 것 역시 투자 부문의 다양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하에서 북한은 상대적으로 기초인프라 투자가 덜 들어가는 관광산업과 해외인력 파견을 통해 외화벌이 수단을 다각화하고 있다.

80) 손흥도(2013).

1)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

관광산업은 2014~2015년 북·중 경제협력 대상 산업 중 가장 주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북한은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전체회의에서 대외무역의 다원화·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 현지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도마다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더불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구를 설치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각종 박람회나 토론회를 통해 북한 관광 홍보와 관련산업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관광지 개발과 관련산업 육성에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중국 역시 북한의 관광특구 개발과 관련산업 개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 경제협력을 통한 북·중 분업체계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⁸¹⁾

관광산업은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이다. 관광산업은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조업 등 여타 산업에 비해 기초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가에 적합한 외화벌이 수단이다. 북·중 접경지역인 동북 2성의 입장에서도 대북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이해관계가 명확하다. 북한 관광이 활성화되면 북한 관광에 대한 중국 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 관광을 위해서는 중국 본토 및 해외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인해 동북지역의 관광산업 역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²⁾

81) 2008년 말 중국은 북한을 ‘중국 공민 단체 해외여행 목적지 국가’에 포함한 후, 북·중 변방관광을 허용하였다. 이후 2009년 10월 원자바오 전 총리가 방북하여 북·중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중국은 2010년 2월부터 북한을 단체관광 허용 대상지로 정식 승인하였다(이교덕, 김병로, 박병광 2014, p. 107).

82) 『중국은지투자유한회사 장백현서 조선손님 회견』(2015. 5. 8, Online, 검색일: 2015. 10. 17).

최근 북·중 간의 관광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사례는 이 분야에서의 분업체계가 대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2015년 5월 제18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를 통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에 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활약하는 조선족 기업인 150명을 정식으로 초청하여 북한 내 투자 환경과 원산-금강산 지대 현황 및 개발 계획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투자를 권하였다.⁸³⁾ 또한 투자 목적으로 원산-금강산 현지 방문을 원하는 인사의 경우 방북 신청을 10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⁴⁾ 한편 양강도 경제특구개발총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많은 중국 투자자가 무봉노동자구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삼지연군에서 현장답사와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광철도 공사 및 삼지연 비행장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⁸⁵⁾ 삼지연 비행장을 확장하는 것은 대형여객기의 안정적인 이착륙을 보장하고, 공항 청사를 새로 지음으로써 관광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혜산과 삼지연을 잇는 철로 착공식을 2015년 6월 진행한 바있다. 두 지역을 잇는 철로가 완성되면 백두산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고 관광객을 수송하기가 수월해짐에 따라 북·중 간의 관광협력을 통한 분업체계가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다롄과 북한을 오가는 봄 유람 기차도 현재 운영 계획 중인 것으로

83) 『조선, 중국 조선족 기업인 150명 금강산으로 초청』(2015. 4. 22, Online, 검색일: 2015. 10. 21).

84) 투자는 공동경영이나 합작, 독자 혹은 양자 협약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투자자는 관광지대의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얻음. 『朝, 원산-금강산 국제 관광지대 개발에 박차』(2015. 6. 3, Online, 검색일: 2015. 10. 21).

85) 『북, ‘백두산 관광지구’ 본격 개발』(2015. 6. 4, Online, 검색일: 2015. 10. 21).

알려졌다. 북경과 접경지역에 위치한 중국 소재의 북한전문 여행사가 북한 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함에 따라 북한 관광에 대한 중국에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⁸⁶⁾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북한은 인프라 투자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북·중 접경지역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관광산업 육성정책은 중국 동북지역 내의 관광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중국이 이미 북한 관광특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단둥 현지조사에 따르면, 북·중 관계 전문가는 관광산업은 양국 경제 모두의 이익(互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시에 각국의 이해관계를 전혀 해치지 않는 협력분야이므로 북한의 적극적인 관련산업 개발정책과 함께 향후 더욱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북·중 접경지역 관광을 통한 북·중 분업체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북한 여행 제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영국의 민간 조사기관이 전 세계 항공사를 평가한 결과, 북한의 고려항공은 4년 연속 최악의 항공사로 평가받았다.⁸⁷⁾

2) 해외인력 파견 활성화 요인

최근 북한은 해외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있어 북·중 간의 노동시장에서의 분업체계가 형성·촉진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북한은 노동임금 상승과 인력공동화 현상으로 악화되고 있는 동북지역 노동시장의 노동 공급자로

86) 「중국 소재 북한전문 여행사, 백두산 마라톤 관광상품 출시」(2015. 6. 11, Online, 검색일: 2015. 10. 17).

87) 「북한 고려항공, 4년 연속 세계 최악 항공사」(2015. 8. 28, Online, 검색일: 2015. 10. 20).

서, 중국은 북한인력의 수요자이자 공동 관리자로서 북·중 분업체계를 심화하고 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해외인력 파견이 체제 유지에 상당한 위험요소가 되어 확대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김정은이 “국내외적으로 ‘적’들의 압박이 가시화하는 엄중한 시기에 과감하게 일을 벌이지 않으면 돌파구를 열 수 없다며 해외인력 파견을 더욱 확대할” 것을 지시⁸⁸⁾함에 따라 북한의 해외인력 파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북한의 해외인력 파견 관련 법·제도는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나, 중국에 공식적으로 파견된 시기는 2012년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145명에서 시작된 북한의 대중 해외노동자 파견이 불과 3년 사이에 1만 5,000~2만 명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⁸⁹⁾ 2012년은 중국이 10여 년 이상 연간 9%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룬 마지막 해로, 경제고성장의 부작용으로 동북 3성은 인력공동화와 임금상승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⁹⁰⁾

“북한 근로자 고용이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의 한 의류업체가 북한 근로자 500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중국 당국의 허가를 요청했다.”⁹¹⁾

88) 강철환(2015, Online, 검색일: 2015. 10. 5).

89) 2014년 기준. 정확한 통계가 발표된 적은 없으나, 현지조사와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1만 5,000~2만 명 내외 수준으로 추정됨.

90)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은 북한 측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다.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외화벌이 목적의 일환으로 러시아, 중동, 유럽 등에 이어 중국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함. 그러나 중국도 이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면이 있음.

91) 「北 근로자 고용, 北中 경제협력 새로운 모델」(2010. 11. 10, Online, 검색일: 2015. 10. 25).

“북한과 중국은 경제협력의 한 모델로 지난해(2010년 - 저자 주) 하반기부터 훈춘과 투먼 등 북·중 접경지역에 북한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해왔으나 아직 성사되지는 않았다.”⁹²⁾

“중국 지린성 투먼시 공산당위원회의 류보 선전과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투먼경제개발구 안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기업공업원구를 따로 조성했다고 밝혔다.”⁹³⁾

“중국이나 북한 양측 당국은 한번도 공식 발표한 적은 없지만 중국은 약 4만 명에 이르는 북한 재봉사, 기술자, 기계공, 건설 노동자, 광부에게 산업 연수생 비자를 발급하는 협정을 맺었다.”⁹⁴⁾

“북한인력 145명이 국경 인근 중국 투먼시 섬유공장에 취업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북·중 관계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⁹⁵⁾

북한의 해외인력 파견이 급증할 수 있었던 것은 남북경색과 대북 제재로 인해 외화벌이 수단을 다각화할 필요가 절실했기 때문이고, 이러한 북한의 요인을 중국 측에서도 수용할 만한 충분한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가 세계 각지로 파견되어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주요 요인은 ①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해외인력 파견 의지와 ② 북한 저임금 노동력의 높은 업무집중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다각화의 필요와 동북 3성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면서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하였다는 사실은 경제 상황에 따라 북·중 양국이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

92) 「北, 中 무단장에 여성노동자 2천명 파견 추진」(2011. 1. 19, Online, 검색일: 2015. 10. 24).

93) 「中 인력난 해소, 北 외화벌이로 양측 이해 맞아」(2011. 12. 22, Online, 검색일: 2015. 7. 13).

94) 「中, 북한 근로자 수만명 수입」(2012. 7. 2, Online, 검색일: 2015. 7. 13).

95) 「"北인력 145명 中투먼 섬유공장 근무시작"」(2012. 7. 30, Online, 검색일: 2015. 7. 14).

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력파건을 통한 북·중 분업체계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어렵다.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북한 교역조건의 악화는 무역을 통한 외자유치를 더 어렵게 할 것이며, 따라서 북한은 단기적으로 해외인력 파건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인이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자본주의시장에 노출되면 될수록 사회주의 체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그 규모가 어떻게 든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지난 6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중국에 파견된 파견인력을 일부 당국으로 소환한 바 있으며, 이는 북한 고위층의 잇단 탈북에 따른 전면조사로 보인다는 의견이 다분했다. 중국 측의 수요 또한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중국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이 계속 늘어나는 것보다는 중국기업이 직접 북한 현지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미 노동자본이 풍부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주변국의 저임금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썩 반가운 일은 아닌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북한 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도 꾀할 수 있다. 북한 노동자는 사실상 휴일이 없고, 이동의 자유가 없는 데다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임금의 대부분을 북한 당국에 상납하고, 노동자가 실제로 받는 액수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⁶⁾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해외인력 파견제도에 대해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북한도 이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⁹⁷⁾

96) VOA 현지취재 결과에 따르면, 카타르에서 북한인은 외국인 노동자 중 가장 장시간 일하고 있었지만, 월급의 대부분을 상납금으로 떼이고 10%만 노동자 손에 들어온다고 밝힌.

97) 2015년 5월, 카타르의 건설회사에서 해고된 북한 노동자 90명에 대한 추방 사례가 이를

결과적으로 북한의 정치적 부담, 중국 노동시장 수요, 국제사회여론 등의 요인으로 인해, 향후 북한의 해외인력 파견을 통한 외자유치 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향후 북·중 분업체계 형성 및 확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과 북한 각국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현재까지 구축된 북·중 분업체계의 형성을 결정한 요인을 점검하고 구조적·정책적 변화를 검토해보았다. 중국에서 환경보호정책과 에너지자원관리정책이 강화되면서 대북 무연탄 수입 역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 전 세계적인 철강 수요 감소와 중국경제 전반의 경기 둔화로 인해 중국 철강산업이 위축되면서 대북 철광석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기존 대중 주력 수출품의 변화는 북·중 분업체계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내수 중심의 경제발전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생보장을 위한 인건비, 사회보장비용 등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북한 노동력을 중국 내 혹은 북한 내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동북지역의 경우 지역경제가 낙후되어 젊은 인력의 유출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러한 현상으로 이 지역 노동 인력이 북한 노동인력으로 점차 대체됨으로

보여줌. 카타르 유명 건설회사인 CDC(Construction Development Company)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192명 중 절반가량이 추방된 사건으로, CDC는 북한 감독관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 강요, 안전절차 무시 등 노동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북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밝힘. 『카타르서 해고된 북한 노동자 90명 추방』(2015. 5. 22, Online, 검색일: 2015. 10. 5).

써 북·중 분업체계는 한층 심화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지방정부들이 자구책을 선보이고 있으며, 동북지역의 경우 대외개방을 골자로 한 주변국과의 협력정책에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신압록강대교 건설, 중·북 접경 민간 호시무역구 신설, 출경무역 시행 등 라오닝성의 단둥시와 선행선시(先行先試) 지역으로서 지린성의 대외개방을 선도하는 훈춘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역적으로도 분업체계를 한층 선도하고 있다.

전자의 두 가지 요인(대북 철광석 수입 감소, 환경보호조치 강화와 무연탄 수입 감소)은 철광석과 무연탄을 비롯한 1차 상품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하는 북한의 대외교역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이 5·24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북한은 중국발 교역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후자의 경우(인건비 상승과 동북지역의 인력공동화 현상)에는 동북지역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북한의 유희노동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을 통해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국 내에서 섬유 및 의류 산업 원자재 수입가격의 하락 추세와 수출가격의 상승 추세로 미루어볼 때 향후 관련 분야에서 북·중 분업체계가 형성 → 촉진 → 심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지방공업육성과 BOT 방식의 투자재원조달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지만 체제 내부의 개혁 결여, 미비한 법·제도 등 열악한 투자환경과 더불어 정치·안보적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해외투자 재원 마련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무역다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이 어려운 상태이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중국경제

의 구조적·정책적 변화는 이러한 어려움을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자국 경제성장에 필수요소인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투자유치 관련 법안을 개정·보완하고 있으며 위탁가공무역 장려, 해외인력 파견과 관광산업 유치 등을 통해 외화벌이 수단을 다양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제4장 무역과 북·중 분업체계

1. 데이터
2. 현황
3. 북·중 분업체계
4. 현시 비교우위지수로 본 분업체계
5. 소결



1. 데이터

북한에 대한 질적, 양적 데이터는 공개가 제한되어 있다. 그중 거울통계로 알아볼 수 있는 북한의 무역 데이터가 외부 연구자에게 허용되는 몇 안 되는 북한 관련 자료이다. 본 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는 중국해관 데이터이다. 현재 KITA에서 공개하는 북·중 무역 데이터가 바로 중국해관에서 얻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중국이 WTO 가입국으로서 매년 무역 데이터를 제공하는 UN COMTRADE, 중국해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구성되는 KOTRA 데이터도 있다.

이석(2013b)은 KITA와 UN COMTRADE 통계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을 지적하고 같은 해관통계라고 해서 모든 통계가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 따르면 KITA와 UN COMTRADE 통계치가 연간 총액에서뿐 아니라 개별 상품별 액수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월별 통계인 KITA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표 4-1. 북·중 무역통계 출처별 비교(2015년 기준)

	시기	상품단위	세부분류	시계열의 범위
UN COMTRADE	연별	최대 HS 6단위	없음	1990~2014
IMF DOT	연별	세부 분류 없음	없음	1990~2014
KOTRA	연별	HS 4단위	없음	1990~2014
KITA	월별, 분기별, 연별	HS 8단위	중국 각 성별 분류	1998~2014
본 보고서의 중국해관 무역통계	연별	HS 8단위	중국 각 세관별·무역 형태별 분류	2010~2014

자료: UN Comtrade(Online, 검색일: 2015. 7. 7); KOTRA 중국사업단(Online, 검색일: 2015. 7. 7), 중국해관 통계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8월에서 11월까지의 수치가 누락되어 있어 그해 무역 총액 면에서 두 통계치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같은 해관통계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을 수 있다.

많은 북한 관련 연구에서 지적한 대로, 이러한 수치와 내용의 차이는 북한 무역 데이터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주요 요인이 되어왔으며, 이러한 낮은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의 노력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북·중 데이터 역시 이러한 신뢰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분업체계 분석을 위하여 2010~2014년에 걸친 총 5개년의 중국해관 통계를 사용하였다. 최근 5년간 자료를 활용하여 북·중 무역관계를 분석하는 것의 장점은 앞선 연구들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리포팅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과 2009년 4개월간의 데이터 누락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⁹⁸⁾ 그럼에도 2014년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 자료 누락 문제와 밀수 등의 문제는 피하지 못하였다.

리포팅 오류란 많은 국가, 특히 지리적으로 멀거나 교류가 많지 않은 국가 중 남한(South Korea)과 북한(North Korea)을 혼동하여 수출입통계를 함으로써 남한의 무역이 북한의 무역으로, 또는 북한의 무역이 남한의 무역으로 잘못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로 남한과 북한을 혼동하여 분류하는 리포팅 오류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데이터 누락이란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무역통계에

98) 이 문제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이석(2013b)에서는 중국해관 통계 중 기타 아시아 항목에 있는 교역물품과 액수가 북한의 그것과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이것을 2009년 누락된 통계에 보충하는 방법을 제시함.

2009년 8~11월의 북·중 무역액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데이터 누락으로 중국해관 통계와 UN COMTRADE, IMF 북·중 무역통계에 차이가 발생해 북한의 무역을 보여주는 모든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에는 2009년 자료누락 기간이 제외되어 있다.

이 외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2014~2015년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 통계 누락이다. 중국해관 통계에는 2014년과 2015년 상반기의 대북 원유수출이 '0'으로 표시되어 있다. 북한 원유수입의 상당 부분이 중국인 짐을 고려해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이 0일 경우, 북한이 원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으나, 실제 북한의 언론동향을 분석해보면 북한이 원유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이 해관 데이터에서 누락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본 장의 후반부에 더 자세히 설명하였다.

북한의 무역 자료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리포팅 오류, 데이터 누락, 원유수출 통계 누락은 눈에 띄는 부분으로 쉽게 누락 여부를 알 수 있으나, 그 외 다른 품목은 누락 혹은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지조사나 언론보도를 통해 탐지해내는 방법 외에 데이터의 오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상술한 것 외에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북·중 간 밀수이다. 북·중 접경지역에는 많은 보따리상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양국을 오고가는데, 그중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수형태의 교류가 상당하다는 현지 사업가들의 진술을 접할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북·중 밀수 규모를 공식 통계치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추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밀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북·중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은 통계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의 신뢰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무역에서 대중무역이 90%를 상회하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무역활동을 가장 많이 설명해주면서 다른 나라의 거울통계보다 오류가 적은 데이터는 중국해관 통계가 유일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국해관 통계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해온 중국해관 통계와 비교하면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국가단위의 해관 통계를 활용한 반면, 본 연구의 중국해관 통계는 중국 하위지역단위 세관별 통계와 더불어 무역형태별 통계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UN, KOTRA, IMF 무역통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무역형태별 분류와 어떤 세관을 통해 물품이 수출입되었는지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같은 중국해관 통계라고 할지라도 본 연구의 세관별 무역통계와 KITA에서 제공하는 중국 성별 무역통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KITA는 HS 8단위 품목별 북·중 무역자료를 성별로 매월 제공하고 있으며, 성별 무역자료에서는 품목을 선택하면 월단위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HS 8단위 품목별, 연단위 북·중 무역자료를 사용하는데, 주요 하위단위로 세관별·무역형태별로 구분되어 있다.

UN Comtrade, KOTRA 데이터와 중국해관 통계를 비교해보면, 총수출입액은 대부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2014년 총수입액에 있어 KOTRA에서 발표한 수치가 나머지 통계와 차이가 있다

는 점이다. 이는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남진욱(2015)이 분석했듯이 KOTRA는 HS코드 27품목, 즉 세관통계에 누락되어 있는 원유를 북한의 대중 수입에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해관 통계의 세관별 통계는 성별 통계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기본적으로 세관별 통계는 상품이 통관하는 세관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한 것이며, 성별 통계는 그 물품이 최종적으로 도착하거나 출발했던 성을 중심으로 통계를 집계한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세관별 통계와 성별 통계는 통계치가 매우 유사하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 성별 통계 작성은 수출입 송장을 작성하는 업체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출입 업체가 세관과 동떨어져 위치해 있는 경우가 드물어 세관을 통관하는 물품의 대부분을 해당 세관과 동일한 곳에 위치한 업체가 취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은 수입품에 한해 성별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품의 성별 이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각 성별로 경제와 산업 여건이 다르고, 다소 상이한 경제 및 보건 정책을 펴고 있어 대규모 수입품의 성별 이동이 지양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 내수 생산된 수출품의 성별 이동은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관별 통계와 성별 통계가 매우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계는 세관별 통계로 KITA에서 제공하는 성별 통계와 집계 단위가 다르나, 세관별 통계를 성별 통계로 전환할 경우 두 통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본 장의 후반부에서 다시 논하도록 하겠다.

2. 현황

이 절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중국해관 무역 자료의 무역형태별 분류를 통해 북·중 무역의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중국해관 자료에 있는 분류체계 중 하나인 무역형태는 19개 분류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분류방식은 일반무역, 변경무역, 가공무역, 보세무역, 원조 등이고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된다.

중국 전체 수출을 봤을 때 2014년 기준으로 일반무역이 총수출의 51%, 진료가공무역이 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보세구중계화물이 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래료가공무역이 4%로 그 뒤를 이었다. 다른 무역형태는 모두 2% 이하의 비중을 차지했다. 수입도 마찬가지로 일반무역이 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진료가공무역(15%), 보세구중계화물(10%), 보세창고수출입화물(5%), 진료가공무역(5%) 순이다. 변경소액무역과 무상원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 무역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전체 무역을 봤을 때 가공무역과 보세무역이 일반무역을 제외하고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술한 진료가공무역과 래료가공무역은 모두 가공무역의 한 형태이므로 한 분류로 묶어도 무방하나, 래료가공무역이란 해외기업이 수입 원료를 제공하여 중국 현지기업에서 외환결제를 할 필요 없이 가공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만들어주면 가공비만 받고 판매는 외국기업이 하는 방식을 일컫으며, 진료가공무역은 현지기업에서 공장을 사용하고 재료도 수입해서 가공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⁹⁹⁾ 이 두 형태의 무역 모두 완제품이 중국 현지에서 팔리는 것이 아니라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전제로 해외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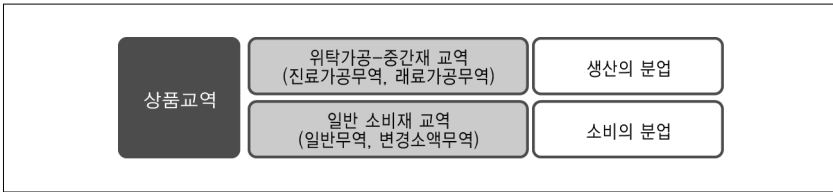
자 유치를 위해 일정한 관세혜택을 제공한다. 원재료를 수입할 때는 관세와 일종의 부가가치세인 증치세가 면제되고 가공 후 수출되는 화물은 증치세가 면제된다.

중국의 무역을 ‘일반무역, 진료가공무역, 래료가공무역, 보세구중계화물, 보세창고수출입화물, 변경소액무역’ 등으로 무역형태 분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역형태에 따라 매겨지는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일반무역의 경우 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와 바로 소비될 물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관세가 비교적 높게 매겨진다. 반면 가공무역의 경우는 중국에서 가공공정의 발전을 위해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부과해 원자재를 들여오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개념적으로 무역형태별로 분업체계 분류방식을 규정해봤을 때 일반무역을 통해 일반적인 무역에서 국가간에 어떤 식으로 상품이 상호 소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는 소비에서 어떻게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소액변경무역 역시 일반무역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단지 변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 우대를 해준다고 할 수 있어 소비의 분업체계 분류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가공무역은 가공단계의 생산공정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아웃소싱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물품의 가공단계가 두 국가 사이에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4-1]이다. 즉, 생산의 분업은 중간재 교역을 나타내는 진료가공무역과 래료가공무역으로 나타나고 소비의 분업은 일반무역 및 변경소액무역으로 교역되는 소비재 교역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¹⁰⁰⁾

99) 김화섭, 이진면, 리소영(2013), pp. 14~17.

그림 4-1. 상품교역의 분업체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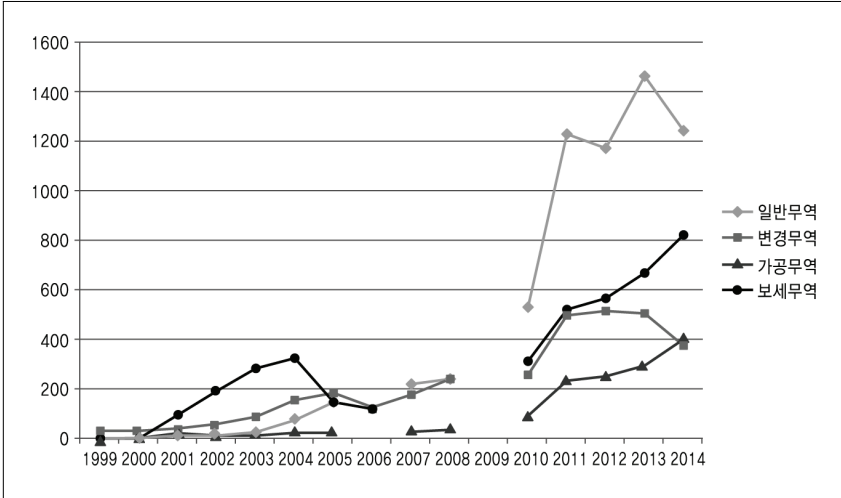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무역형태별 분류는 북·중 분업체계의 형태와 현황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비교적 장기간 북한의 무역분류별 대중 수출 추이를 [그림 4-2]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여기에서는 분류를 일반무역, 변경무역, 가공무역, 보세무역 등으로만 추계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일반무역과 변경무역 규모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소폭 축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 2009년 자료의 부재로 완벽한 추세 선은 아니지만 2005년까지의 가공무역은 미미한 규모를 보인 반면, 2010년 이후부터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세무역은 이전보다 확대된 규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가공무역의 규모는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는 변경무역보다 보세무역이 더 큰 규모를 대부분 기간 동안 유지하고 있는 특징을

100) 이 개념은 국제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산업 간 무역(Inter-industry trade)과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 개념과는 구별됨. 두 개념 모두 생산과 소비의 측면이 각각 포함되어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 차용하는 생산의 분업은 산업 내 무역 중에서도 가공무역이라는 ‘out-sourcing’ 또는 ‘production sharing’ 측면에서의 보다 좁은 범위의 분업체계를 개념적으로 정의한 것이고, 소비의 분업은 무역을 통해 수입 또는 수출된 물품의 최종 소비자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최종재 또는 중간재로 소비되는 것을 아우르는 개념임. 또한 본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생산의 분업과 특히 소비의 분업에서는 어느 정도의 고정성을 전제로 함.

그림 4-2. 북한 대중 수출의 무역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명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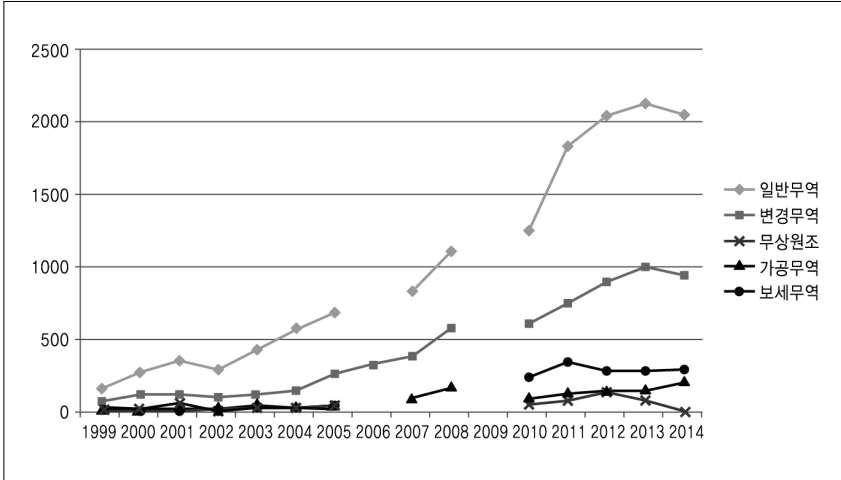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Online, 검색일: 2015. 9. 10); KOTRA 중국사업단(1999~2005 자료, Online, 검색일: 2015. 8. 2); 손수윤(2007), pp. 28~29; 윤승현(2010), p. 38; 중국해관 통계(2010~2014 자료).

보이는데, 특히 2000년대에는 일반무역 규모보다 더 컸다는 점이다. 그러다가 2010년도 이후에는 더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0년 한국의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이 중국을 통과해서 한국이나 일본 등으로 우회하는 무역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일 수도 있다.

북한의 대중 수입 측면에서 무역형태별 규모를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무역과 변경무역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4-3 참고). 가공무역과 보세무역은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2010년 이후로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고, 가공무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세무역도 어느 정도 수준의 규모를

그림 4-3. 북한 대중 수입의 무역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명목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Online, 검색일: 2015. 9. 10); KOTRA 중국사업단(1999~2005 자료, Online, 검색일: 2015. 8. 2); 손수윤(2007), pp. 28~29; 윤승현(2010), p. 38; 중국해관 통계(2010~2014 자료).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소비의 분업이 있어나는지의 여부는 세부 품목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거래되어왔는지를 보지 않고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가공무역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은 생산의 분업이 점점 더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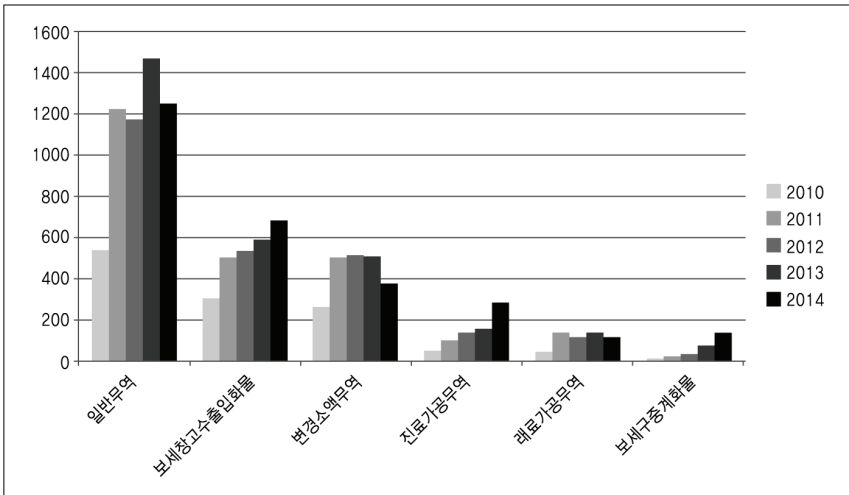
다음은 더 자세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좀 더 세부적인 분류의 무역형태별 자료를 살펴본다. 중국해관 데이터의 무역형태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일반무역이다. 일반무역은 내수를 위한 모든 수입과 상대국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수출이 이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관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최종 소비재도 포함되지만 기업을 주요 소비대상으로 하는 중간재도 포함되어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일반무역은 북한의 대중 총수출

의 58.5%, 총수입의 48.7%를 차지하였다. [그림 4-4]과 [그림 4-5]를 보면 북·중 무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무역이다.

먼저 무역형태별 북한의 대중 수출을 보여주는 [그림 4-4]를 살펴보면, 일반무역은 2010년과 2013년 사이에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4년에는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기 둔화 및 이미 다른 곳에서 지적된 바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⁰¹⁾ 최근 3년간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의 대부분이 일반무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4-4. 북한 대중 수출의 무역형태별 분류

(단위: 백만 달러)



주: 명목 기준.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01) Lee(2015), pp. 4-8; Stahler(2015. 1. 20, Online, 검색일: 2015. 9. 1).

일반무역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무역형태는 보세창고수출입 화물로, 주로 위탁매매를 위해 수출입한 물품이나 분쟁 또는 사고로 인해 단기간 보관해야 하는 수출입품을 중심으로 보관을 하며, 이 외에도 가공무역에 사용되는 원료를 창고에 보관하는 형태의 무역형태이다. 위탁매매란 북한이 중국의 수출창고와 시설, 항구를 이용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보세창고수출입화물을 통한 위탁매매의 경우 보세창고를 이용한 경비만 청구될 뿐 별도의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가공무역¹⁰²⁾ 원료를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것은 관세부과를 피해 원료자재 보관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가공무역 용도의 원료는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데, 규정상 이 원료는 1년 이내에 완제품 또는 중간재로 가공되어 재수출되어야 한다. 업체의 사정으로 가공무역 용도의 원료를 1년 내에 소비하지 못하고 중국 내수시장으로 반입할 경우 일반무역으로 재분류되어 추가로 관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가공무역용 원료를 추가 관세부담 없이 보세창고로 이전하여 보관하는 것이다. 보세창고에서 추가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내에 업체의 편의에 따라 가공무역용 원료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가공무역 업체들은 보세창고를 위탁매매를 위한 수입품 보관 외에 가공무역용 원료 보관용도로 활용하면서 총 2년간 가공무역용 원료 보관을 한다. 위탁매매와 가공무역용 원료 보관 외에도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A/S를 위한 부품이나 외국 항공물류회사에서 사용되는 부품과 연료도 보세창고에 보관하기도 한다.

북한의 대중 보세창고수출입화물 규모는 갈수록 점차 늘어나 2014년에

102) 가공무역에는 진료가공무역과 래료가공무역이 있으며, 본 장의 후반부에서 이 두 무역 방식을 자세히 설명함.

는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했다. 이는 위탁매매 또는 가공무역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지조사 결과, 원산지 표기법 위반으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나, 보세창고에서 북한산 제품에 미국이나 서방국의 유명상표만 새로 붙이거나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라벨을 부착하는 작업을 거쳐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승호(2014)의 연구에서와 같이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최근 보세창고의 이용 증가의 원인 중 하나는 5·24 조치를 비롯한 여러 양자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이는 즉 북·중 무역으로 보이는 물품교역이 사실은 다른 제3국으로의 수출입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대중 수출 면에서 그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역형태는 변경소액무역이다. 변경소액무역은 1984년 중국에서 「변경소액무역감정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국경을 접하는 지역에 한해서 지정된 품목 이외에는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50%를 감면해주고 기업 관계자가 변경지역에서 사들인 1인당 3,000위안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¹⁰³⁾

감세혜택 외에도 변경무역의 거래가격이 일반무역보다 낮아 변경무역이 선호되는 경향도 있다. 민간인의 흥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무역형태이므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변경지역에 지사를 두고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도 한다.¹⁰⁴⁾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이러한 예외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있었으

103) 「북(北)·중(中) 국경 지역서 무역이 성행하는 이유는?」(2009. 11. 20, Online, 검색일: 2015. 5. 20).

104) 위와 동일.

나, 최근에는 변경무역을 최혜국대우 차원의 예외로 인정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13개국 중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변경무역 수출액 비중은 약 3.7%를 차지했다.¹⁰⁵⁾ 북·중 무역이 국경을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변경소액무역이 북한의 대중 수출 면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상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변경소액무역방식에 해당하는 대중 수출은 최근 3년간 점차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형태의 무역 감소가 중국경제,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과 맞닿아 있는 동북 2성의 경기 침체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홍익표(2006)는 북한의 핵도발로 인해 강화된 각종 제재로 인해 비공식적인 민간교역이 많이 일어나는 북·중 변경지역에서의 변경소액무역방식이 오히려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¹⁰⁶⁾. 중국의 경기침체 외에도 변경소액무역이 감소할 수 있는 요인으로 다른 무역 방식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최근 들어 변경소액무역 이외에도 각종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변경무역보다 더 다양한 대상국과 간접무역을 할 수 있는 보세무역이나 가공무역 등의 방식이 있으므로 이들에 의해 점점 대체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역형태는 진료가공무역과 래료가공무역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두 형태의 무역 모두 완제품의 해외수출을 전제로 관세혜택을 제공한다. 원재료를 수입할 때는 관세와 일종의 부가가치세인 증치세가 면제되고 가공 후 수출되는 화물은 증치세가 면제된다.

105) 이종운, 홍이경(2013), pp. 55~56.

106) 홍익표(2006), p. 193.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최근 3년간 진료가공무역은 증가했고 래료가공무역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진료가공무역은 2014년에 대폭 증가했는데 총 대중 수출의 10%에 육박했다. 래료가공무역도 진료가공무역보다는 적지만 꾸준히 북한의 총 대중 수출의 4~5%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북한 내 생산공정 중 일부가 중국으로 아웃소싱되어 분업체제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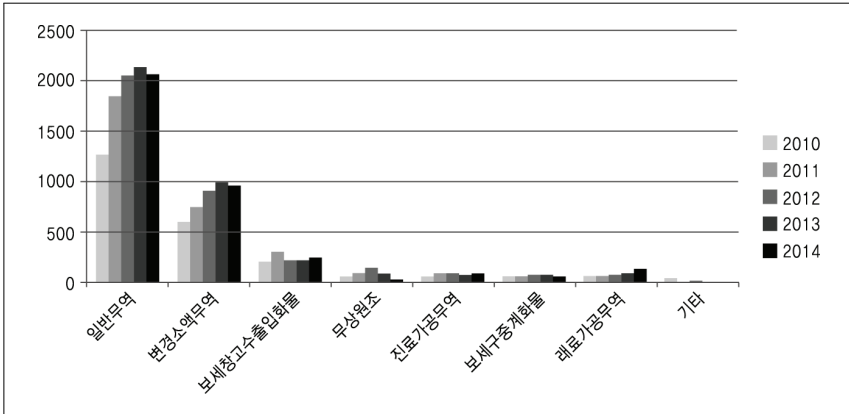
그다음 보세구중계화물이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보세창고와는 달리 보세구를 통과해 제3국으로 다시 수출되는 물품들이다. 최근 3년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여러 양자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무역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미 언급했듯이 보세구를 통해 중국이 아닌 제3국으로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제3국들은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이 직접 수출하는 길이 막힌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이 대부분을 이룰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이(2015)도 5·24 조치 이후 이러한 중계형태의 무역이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은 규모가 줄고 있고 보세창고수출입화물 및 보세구중계화물, 진료 및 래료가공무역은 규모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중국경제의 수요 변화에 따른 북한 수출의 변화를 그대로 나타내준다.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은 수입국 자체에서 소비될 물품으로 주로 구성되고 있는 반면, 보세무역이나 가공무역은 중국 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으로 주고 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무역형태별 북한의 대중 수입을 살펴보면 [그림 4-5]와 같다. 북한의 수입 면에서 무역형태별 분류는 수출보다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관세는 대부분 수입품에 부과하여 해외시장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없는 자국 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중국의 경우 무역형태별 분류별로 관세를 차등 부과하여 무역형태별 분류가 이루어지는 이유와 유형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북한은 관세제도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어 북한의 수입을 무역형태별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중국 간의 제도적 유사성을 전제로 북한도 중국의 분류방법을 따라 대중 수입을 분류한다는 가정을 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5. 북한 대중 수입의 무역형태별 분류

(단위: 백만 달러)



주: 명목 기준.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5]에서 볼 수 있는 북한의 대중 수입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일반무역 규모가 가장 크다. 일반무역규모는 2010년부터 꾸준히 커지다 수출에서와 같이 2014년 수입규모가 2013년보다 다소 작아졌는데,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실제로 2014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가 감소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14년 북한의 대중 원유수입 통계 누락의 영향일 수 있다.

대중 수출과는 달리 수입에서 일반무역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은 변경소액무역이다. 이는 북한의 대부분의 수입이 변경지역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봤을 때 놀랍지 않은 현상이다. 본 장의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논하겠지만 중국해관 통계의 세관별 분류를 살펴보면, 북한의 대중 수입의 변경지역 세관 집중도가 수출보다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수입에 있어 변경지역 세관 집중도가 높은 만큼 변경소액무역도 그만큼 더 많이 발생할 것은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으며, 이는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대중 수입의 특징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수출은 원자재 위주로 이루어지는 반면, 수입은 변경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수입을 위한 재원의 일부가 해외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임을 감안하면, 중국에서 노동력을 파는 북한 노동자의 경우 자신에게 돌아오는 노임을 현금 형태로 북한으로 갖고 들어가기보다 물품으로 구입해 반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반입이 수입통계에 잡힐 경우 변경소액무역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보세창고수출입화물의 규모가 크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이 북한으로 수출된다는 의미일 것이므로

제3국으로부터 북한으로의 수입이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보세창고를 통해 양자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통로로 북한의 수출이 이루어지듯이, 수입도 동일하게 중국을 통해 간접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출 규모보다는 작다.

수출과는 달리 수입에서는 가공무역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작은 편이며, 진료와 래료가공의 규모가 유사하다. 다만 래료가공무역은 최근 3년간 규모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다. 북한 쪽보다 중국 쪽이 좀 더 기술력이나 공장시설 등이 우수하지만 북한이 인건비가 더 저렴하므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공공정을 의뢰할 동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공무역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북·중 간의 분업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더 면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보세구중계화물은 북한의 대중 수출과 마찬가지로 관세가 매겨지지 않은 채 대부분 제3국으로부터 수입해 창고를 통과하여 바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의 무역형태일 가능성이 크다. 정승호(2014)의 분석에 따르면 5·24 조치 이후 한국에서 많은 물품이 중국의 보세창고를 통해 북한으로 여전히 수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종합해볼 때 중국해관 통계에서 북·중 무역으로 잡히는 보세구중계화물 분류는 어찌 보면 순수하게 중국과 북한의 교역액이라기보다는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의 수출이나 수입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는 보세구중계화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특이한 점은 무상원조로 분류되는 수입이 2010년부터 점차 증가했다가

2012년부터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역분류 방식에 따른 북한의 대중 수출입 통계의 구체적 수치를 살펴보면, 변경소액무역은 수입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보세창고수출입화물이 수출에서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공무역은 수입에서는 래료가공, 진료가공무역을 합쳐서 5% 내외로 미미한 반면, 수출에서는 2012년과 2013년에는 10% 수준에서 머물다가 2014년에는 14.1%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4-2 참고).

표 4-2. 무역형태별 무역액과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수입					수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일반무역	1,256 (55.3)	1,838 (58.4)	2,044 (58.1)	2,123 (58.5)	2,054 (58.5)	531 (44.7)	1,220 (49.3)	1,172 (46.8)	1,464 (50.1)	1,244 (43.7)
변경소액 무역	592 (26.0)	738 (23.4)	892 (25.3)	985 (27.2)	947 (27.0)	260 (21.9)	499 (20.2)	512 (21.3)	504 (17.3)	374 (13.2)
보세창고 수출입 화물	195 (8.6)	294 (9.3)	219 (6.2)	219 (6.0)	244 (7.0)	301 (25.3)	497 (20.1)	532 (21.3)	588 (20.1)	681 (24.0)
래료가공 무역	45 (2.0)	50 (1.6)	71 (2.0)	88 (2.4)	122 (3.4)	42 (3.5)	134 (5.4)	115 (4.6)	137 (4.7)	117 (4.1)
진료가공 무역	49 (2.2)	83 (2.6)	83 (2.4)	62 (1.7)	82 (2.3)	46 (3.9)	99 (4.0)	137 (5.5)	152 (5.2)	283 (10.0)
보세구중 계화물	48 (2.1)	58 (1.8)	69 (2.0)	67 (1.8)	46 (1.3)	9 (0.8)	22 (0.9)	32 (1.3)	75 (2.6)	138 (4.9)
무상원조	51 (2.2)	83 (2.6)	135 (3.8)	83 (2.3)	14 (0.4)	- (-)	- (-)	- (-)	- (-)	- (-)
총액	2,273	3,148	3,521	3,627	3,510	1,189	2,472	2,503	2,924	2,846

자료: 중국해관 통계(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보세창고나 보세구에 들어오는 물품 또는 가공무역을 위한 물품은 중국시장이나 반대로 북한시장에 바로 반입되지 않는 조건을 충족하면, (적어도 중국 쪽에서는) 일정한 관세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이 물품들이 어떤 경로로든 중국시장에 반입된다면 일반무역 관세율이 추가로 적용되므로, 보세구나 가공무역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결국에는 제3국으로의 무역을 위한 물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14년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 수입 면에서는 8.3~14%가, 수출에서는 28.9~43% 정도가 중국이 아닌 제3국으로 수출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북한의 대중 수출입 모두 일반무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수출에서는 보세구를 통과하는 물품 규모와 가공무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수입 면에서는 일반무역 외 변경소액무역이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했고 보세구무역이나 가공무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의 성격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보세구가 제재로 인해 물품교역이 용이하지 않은 제3국으로의 수출입 중계역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은 수출 면에서 이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 면에서는 2014년 기준으로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의 두 무역형태 수입이 총 대중 수입의 85%를 상회한 것을 보면, 3국의 역할이 수출보다는 적고 대부분 중국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공무역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특정 생산공정을 의뢰하는 것이 (북한의 대중 수출) 역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의뢰하는 것보다 (대중 수입) 절대적 액수와 비중이 크며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북·중 간 생산공정에 있어 어느 정도 규모의 분업이 형성되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3. 북·중 분업체계

가. 소비의 분업체계: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

소비 측면에서의 분업체계는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이를 비교우위의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장기간 고정된 무역패턴이 형성된 상황에 놓였을 때 소비의 분업체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장기간이라는 기간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역할이 고착화되어 변하지 않고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줄 때 해당 품목에 대한 소비의 분업, 즉 안정적인 비교우위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일반적인 북·중 무역 데이터에서는 원조, 보세무역, 가공무역이 다 혼합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수요에 의해 최종 소비되는 물품 외에 생산 또는 제3국 수출 목적의 무역 품목이 섞여 있다. 무역형태 분류가 제공되는 중국해관 자료로는 수요에 따라 최종 소비되는 목적의 무역형태인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해볼 수 있다. 이는 북·중 간 소비의 분업체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 잘 부합하여 [표 4-3]에서와 같이 일반무역, 변경소액무역 각각 분류하에 주로 수출입되는 품목을 살펴보았다.

먼저 일반무역에서 북한의 대중 수입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석유와 역청유를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보이나, 앞에서 언급한 2014년 중국해관 데이터 중 원유가 누락되었을 가능성 때문인지 그 품목은 제외되어 있다. 대신 시멘트 제품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외에도 황산암모늄, 도자제품, 자갈, 연료 등 산업 및 건설 원자재 등의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

표 4-3. 일반무역 분류하 북한의 대중 수입

(단위: HS코드 6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70900 석유와 역청유 528,3	270900 석유와 역청유 526,2	270900 석유와 역청유 523,0	270900 석유와 역청유 578,0	252329 기타 시멘트 109,2
310221 황산암모늄 113,9	252329 기타 시멘트 243,5	310221 황산암모늄 127,4	252329 기타 시멘트 79,2	630533 기타 섬유제품 71,9
252329 기타 시멘트 77,0	310221 황산암모늄 179,2	252329 기타 시멘트 94,3	690890 기타 도자제품 62,8	310221 황산암모늄 58,2
250100 소금, 순염화나트륨 55,5	250100 소금, 순염화나트륨 62,1	690890 기타 도자제품 72,7	310221 황산암모늄 60,8	960860 볼펜용 심 53,2
271019 기타 연료 40,0	251710 자갈, 왕자갈, 쇠석 58,0	271019 기타 연료 40,0	250100 소금, 순염화나트륨 47,0	540769 기타 인조필라멘트 섬유 50,0
690890 기타 도자제품 35,7	690890 기타 도자제품 53,7	540769 기타 인조필라멘트 섬유 36,4	540769 기타 인조필라멘트 섬유 40,2	690890 기타 도자제품 48,0
100630 정미 34,8	100590 기타 옥수수 42,0	250100 소금, 순염화나트륨 34,5	110100 밀가루나메슬린 (meslin)가루 35,8	271600 전기에너지 44,4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쌀(정미), 옥수수, 밀가루 등의 식품원료도 눈에 띈다.

변경소액무역 분류하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밀가루였다. 쌀(정미)의 경우 일반무역에서보다 더 많은 양이 변경소액무역의 형태로 수입되고 있으며, 5년간 점차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다. 전지류도 5년간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북한의 실정을 고려해볼 때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감자분말, 포켓형라이터, 포대, 타일 등의 변경소액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물품

표 4-4. 변경소액무역 분류하 북한의 대중 수입

(단위: HS 코드6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1101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12,8	1101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20,5	1101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31,6	1101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07,2	060290 기타 식물(뿌리 포함) 100,2
270112 유연탄 80,4	110590 감자 분말류 91,1	850610 이산화망간제 일차전지 61,4	850610 이산화망간제 일차전지 56,8	690890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 74,3
100590 감자 분말류 80,0	850610 이산화망간제 일차전지 52,5	252329 시멘트류 46,2	100630 정미 46,5	850610 이산화망간제 일차전지 68,4
850610 이산화망간제 일차전지 49,1	252329 시멘트류 50,4	100630 정미 45,8	150790 대두유 43,8	100630 정미 58,8
961310 포켓형라이터 46,5	100630 정미 48,7	961310 포켓형라이터 40,0	690890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 43,1	1101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53,1
100630 정미 41,8	961310 포켓형라이터 30,7	230400 대두유 추출 시 얻어지는 고품유박 32,5	630533 포장용 포대 30,0	150790 대두유 49,9
252329 시멘트류 32,8	230400 대두유 추출 시 얻어지는 고품유박 19,7	100590 감자 분말류 24,6	961310 포켓형라이터 29,4	230400 대두유 추출 시 얻어지는 고품유박 36,1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은 개별 소비자가 가게에서 소비하는 물품이기에 소규모로 거래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산업, 건설용 원료는 기업에서 대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져 대부분 일반무역으로 수출입되는 반면,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은 일반무역보다 관세가 낮은 소액변경무역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5. 일반무역 분류하 북한의 대중 수출

(단위: HS코드 6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70111 무연탄 325,0	270111 무연탄 943,0	270111 무연탄 943,0	270111 무연탄 1150,0	270111 무연탄 1030,0
260111 철광석 118,0	260111 철광석 167,0	260111 철광석 132,0	260111 철광석 186,0	260111 철광석 117,0
790112 아연 (함유량 99,99% 미만) 38,5	790112 아연 (함유량 99,99% 미만) 44,7	790112 아연 (함유량 99,99% 미만) 23,7	790112 아연 (함유량 99,99% 미만) 33,8	790112 아연 (함유량 99,99% 미만) 37,5
720110 비합금선철 (인 함유량 0,5% 이하) 17,3	720110 비합금선철 (인 함유량 0,5% 이하) 16,0	790111 아연 (함유량 99,99% 이상) 15,3	720110 비합금선철 (인 함유량 0,5% 이하) 18,1	030624 계 12,6
720120 비합금선철 (인 함유량 0,5% 초과) 33,3	261690 귀금속광과 그 정광 11,0	720110 비합금선철 (인 함유량 0,5% 이하) 13,2	790111 아연 (함유량 99,99% 이상) 16,2	260300 동광과 그 정광 9,0
790111 아연 (함유량 99,99% 이상) 31,5	790111 아연 (함유량 99,99% 이상) 7,4	261690 귀금속광과 그 정광 8,6	030624 계 14,3	760110 비합금알루미늄 4,7
261610 은광과 그 정광 29,6	270120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 · 조개탄 4,3	261400 티타늄광과 그 정광 6,9	890800 해체용 선박 9,3	890800 해체용 선박 4,1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일반무역 분류하에서의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는 총수출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연탄과 철광석이 가장 많이 수출되었다. 그러나 무연탄과 철광석 모두 2014년에는 그 수출량이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원인은 제3장에서 이미

표 4-6. 변경소액무역 분류하 북한의 대중 수출

(단위: HS코드 6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60111 철광석 70.9	270111 무연탄 162.0	270111 무연탄 183.0	270111 무연탄 180.0	260111 철광석 99.6
270111 무연탄 35.9	260111 철광석 145.0	260111 철광석 107.0	260111 철광석 104.0	270111 무연탄 74.3
030749 연체동물 30.4	030749 연체동물 26.3	260700 납광과 그 정광 34.6	260700 납광과 그 정광 59.1	260700 납광과 그 정광 56.3
260700 납광과 그 정광 13.6	720110 비합금선철 (인 함유량 0.5% 이하) 25.6	030749 연체동물 33.2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24.1	261690 금광과 그 정광 19.9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 13.1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 25.4	720110 비합금선철 (인 함유량 0.5% 이하) 28.8	030749 연체동물 21.0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15.9
720110 비합금선철 (인 함유량 0.5% 이하) 12.1	260700 납광과 그 정광 23.1	261690 금광과 그 정광 17.6	261690 금광과 그 정광 20.8	030749 연체동물 14.7
720719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9.1	720719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11.0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 17.3	720110 비합금선철 (인 함유량 0.5% 이하) 14.3	271600 전기에너지 8.4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검토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아연 또는 비합금선철, 귀금속광, 은광, 티타늄 광 등으로 주로 광물성 품목이 많이 수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특이한 점은 게와 해체용 선박이 많이 거래되고 있는 점이다. 수산물도 많이

거래되는 북·중 무역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계가 많이 거래되는 것은 별로 놀랍지 않으나 해체용 선박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일반무역으로 수출된다는 점은 특이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변경소액 분류하 북한의 대중 수출을 살펴보면 5년간 일반무역과 마찬가지로 철광석과 무연탄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무연탄과 철광석은 일반무역을 통한 대규모 무역거래뿐 아니라 변경지역에서 소규모로도 수출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무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연탄, 철광석 모두 2014년에는 그 수출량이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무연탄은 2013년에 1억 8,000만 달러가 수출된 데 반해 2014년에는 7,400만 달러로 절반 이하의 규모로 줄어들어 감소폭이 일반무역보다 훨씬 급격하게 나타났다. 연체동물 품목 역시 많은 양이 수출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중국에서 동해 쪽의 해상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징어류가 동해에서 많이 잡히는 것을 감안해볼 때 접경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납광, 음극, 구리광, 철, 금광 등의 광물류가 일반무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변경소액무역 분류하에서도 다량 수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소비 측면에서 북·중 분업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대상기간인 5년 동안 품목 구성에 큰 변화 없이 양국에 소비를 위한 수출 및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과 수입 품목 종류가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중 수입 면에서 일반무역으로는 건축 및 산업용 원료, 식품 원료, 변경소액무역에서는 생필품류와 곡류, 식품류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대중 수출 면에서

는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 모두 광물류 및 수산물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다.

소비를 위한 무역 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 특이점 중 하나는 총무역에서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두드러지는 의류제품이나 그 원료가 소비를 위한 무역 측면에서는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품목은 다음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가공무역 분류에서 큰 규모로 수출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생산의 분업체계: 가공무역

생산 측면에서 북·중 분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공무역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가공무역은 생산공정의 한 부분을 다른 국가에 아웃소싱하는 개념과 일치하므로 북·중 간 가공무역에서 어떠한 물품이 거래되는지를 살펴보면 양국간 분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은 파악해볼 수 있다. 중간재를 중심으로 분업체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Ng and Yeats(2001)가 있는데, 이들은 SITC 코드분류체계에서 중간재로 분류된 품목을 가공무역을 나타내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활용하여 분업체계를 분석하였다. 중국해관 통계는 Ng and Yeats와 같이 별도의 코드를 활용하여 중간재를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관세를 중심으로 무역형태를 가공무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때 가공무역으로 분류된 것은 대부분 중간재나 가공무역의 원료를 위한 것으로 Ng and Yeats의 중간재와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¹⁰⁷⁾

107) Ng and Yeats는 SITC에서 중간재가 중간가공 생산공정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계의 부품을 교체할 때 쓰이는 물품

표 4-7. 북·중 간 가공무역 규모

(단위: 억 달러)

	북한의 수입	북한의 수출
2010	0,9	0,9
2011	1,3	2,3
2012	1,6	2,5
2013	1,5	3,0
2014	2,1	4,0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Ng and Yeats(2001)의 중간재가 원료인 동시에 최종재로도 쓰일 수 있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중간재로 분류된 것과 달리 중국해관 통계의 분류방식은 해당 무역형태가 온전히 가공무역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가공무역만을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가공을 위한 북한의 대중 수출입 규모가 거의 비슷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규모가 더 커져 2013년과 2014년에 이르러 북한이 원자재를 수출해서 중국에서 가공하는 무역규모가 그 반대의 경우의 약 2배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가공무역을 래료가공과 진료가공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2010년에는 수입과 수출 모두 래료가공과 진료가공이 비슷한 규모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에서는 래료가공이 커지는 반면 수출에서는 진료가공이 커짐을 볼 수 있다. 래료가공과 진료가공 분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자재 제공과 완제품 판매의 주체가 해외기업인지 국내기업인지의 여부이다.

데이터상에서 북한 대중 수입의 래료가공이 진료가공보다 많아지는 것

이라고 했다. 그 외에는 중간재를 수입하거나 수출할 경우 최종 소비를 위한 무역이라기 보다는 국가간 생산공정 분업체계를 나타내주는 무역으로 보았다(Ng and Yeats 2001, p. 26).

표 4-8. 가공무역의 연도별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수입		수출	
	래료가공	진료가공	래료가공	진료가공
2010	45,8	49,0	42,9	46,8
2011	50,5	83,2	134,4	99,5
2012	71,7	83,6	115,0	137,1
2013	88,1	62,3	137,1	152,1
2014	122,6	82,4	118,0	283,4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으로 보아 중국기업이 북한 내 기업에 원자재를 제공하고 완제품의 판매를 담당하고 북한기업은 가공서비스만 제공해주는 방식의 무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반면 북한의 대중 수출 측면에서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원자재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해 가공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의 가공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가공무역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는 [표 4-9]와 같다.

북한의 대중 가공무역 중 수입을 먼저 살펴보면, 경질 석유 및 그 조제품이 가장 규모가 크다. 그다음으로 고무, 플라스틱, 특수직물 등이 있다. 가공무역 분류에서 원자재 이외에 가공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류도 수입 시에는 가공무역으로 분류되므로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석유가 북한의 가공무역 물품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석유, 광물류, 고무 등이 5년간 북한의 대중 가공무역 수입의 상위를 차지한 것을 미루어볼 때, 중국이 위탁한 가공무역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이 에너지 및 자본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가공산업에서의 제약요인 중 하나가 에너지 수급이며, 이는 중국 측에서 대북 위탁사업을

표 4-9. 북한의 대중 수입 가공무역 주요 품목 종류

(단위: HS코드 6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71011 경질석유 및 조제품 40,1	271011 경질석유 및 조제품 57,8	271012 경질석유 및 조제품 58,7	271012 경질석유 및 조제품 54,2	271012 경질석유 및 조제품 75,0
401120 버스용 및 화물차용 고무 9,5	401120 버스용 및 화물차용 고무 16,2	401120 버스용 및 화물차용 고무 24,2	271019 광물성 연료, 광물류 18,4	271019 광물성 연료, 광물류 41,2
392010 플라스틱 중 에틸렌의 종합체 7,1	610910 의류와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12,1	610910 의류와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14,9	401120 버스용 및 화물차용 고무 16,4	030749 연체동물 15,9
853690 전기기기, 녹음기, 음성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등의 부분품과 부속품 6,6	392010 플라스틱 중 에틸렌의 종합체 8,2	271019 광물성 연료, 광물류 12,1	610910 의류와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11,3	610910 의류와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15,2
030551 어류 중 대구 4,1	030551 어류 중 대구 8,1	392010 플라스틱 중 에틸렌의 종합체 10,3	392010 플라스틱 중 에틸렌의 종합체 9,4	392010 플라스틱 중 에틸렌의 종합체 12,1
901380 광학, 사진용, 영화용, 측정, 검사, 정밀, 의료용 기기 등의 부분품과 부속품 3,2	030749 연체동물 4,2	030559 어류 (삼어지느러미, 멸치, 명태, 조기, 복어 등) 7,0	581092 특수직물,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6,9	401120 버스용 및 화물차용 고무 6,7
271019 광물성 연료, 광물류 2,4	581092 특수직물,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4,1	581092 특수직물,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5,4	030749 연체동물 4,7	550320 인조스테이플섬유 6,0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할 때 그 부분까지 감안해야 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대북 사업을 위해
서는 최소 자체적인 발전설비와 이들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원료 공급

표 4-10. 북한의 대중 수출 가공무역 주요 품목 종류

(단위: HS코드 6단위,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080290 잣, 은행 9,2	030749 연체동물 40,0	030749 연체동물 34,3	620293 의류와 부속품 38,5	080290 잣, 은행 100,0
030749 연체동물 8,3	080290 잣, 은행 26,7	620293 의류와 부속품 29,6	080290 잣, 은행 31,8	620293 의류와 부속품 45,3
620213 의류와 부속품 (인조, 합성) 5,5	620293 의류와 부속품 17,6	080290 잣, 은행 18,8	620193 의류와 부속품 (인조, 합성, 재생, 반합성 섬유) 30,0	620193 의류와 부속품 (인조, 합성, 재생, 반합성 섬유) 42,3
620293 의류와 부속품 5,4	610910 의류와 부속품 (면) 15,9	620193 의류와 부속품 (인조, 합성, 재생, 반합성 섬유) 18,1	610910 의류와 부속품 (면) 11,4	610910 의류와 부속품 (면) 27,9
610910 의류와 부속품 (면) 5,4	620193 의류와 부속품 (인조, 합성, 재생, 반합성 섬유) 13,3	620213 의류와 부속품 (인조, 합성) 16,2	030749 연체동물 11,3	030749 연체동물 20,2
620193 의류와 부속품 (인조, 합성, 재생, 반합성 섬유) 4,8	850431 계기용 변압기, 전압조정기 7,8	610910 의류와 부속품 (면) 13,9	581092 특수직물,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저수포 8,5	620213 의류와 부속품 (인조, 합성) 15,4
850431 계기용 변압기, 전압조정기 4,5	850490 인쇄회로조립품 6,8	850490 인쇄회로조립품 7,6	621133 의류와 부속품 (인조, 합성, 재생, 반합성 섬유) 7,6	620333 의류와 부속품 (합성섬유) 10,7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 필요한 것이다.

그 외 가공무역에서 원자재로 쓰일 만한 물품은 의류와 그 부속품, 섬

유제품, 그리고 갑오징어 등을 꼽을 수 있다. 예상대로 의류를 비롯한 경공업 분야에서 중국이 북한으로 위탁가공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갑오징어의 경우 동해나 서해에서 중국어선이 포획을 한 후 북한 쪽에서 기본적인 가공을 한 후 중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형태로 가공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가공무역에서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견과류, 어류와 의류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중국으로 들어가 적어도 한 번의 가공공정을 더 거쳐 중국시장이 아닌 북한 또는 제3국으로 바로 수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중간재를 중국에 가공무역 형태로 낮은 관세를 매겨 수출하고, 이를 한 번 더 가공해 한국이나 일본 등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양자 경제 제재를 중국을 경유해 우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의 소비의 분업체계에서 변경소액무역 분류하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도 다량의 연체동물이 수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변경소액무역에서보다 가공무역으로 연체동물을 더 많이 수출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대북 제재와 중국을 통한 제3국 수출로 설명할 수 있다. 변경소액무역으로 수출되는 연체동물은 중국 내 소비용이고, 가공무역 분류로 수출되는 연체동물은 중국에서 간단한 가공공정을 한 후 관세혜택을 받아 한국, 일본 등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11. 북한의 대중 수출 세관별 가공무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2		2013		2014	
	래료가공	진료가공	래료가공	진료가공	래료가공	진료가공
다롄	101,5	72,1	134,0	86,8	109,9	142,0
장춘	13,5	61,9	3,0	64,6	8,1	141,0
상하이	-	1,9	-	0,1	-	-
선전	-	1,8	-	0,3	-	-
우한	-	0,1	-	-	-	-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세관별로 북한의 대중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북한의 가공무역은 전체 무역 규모가 가장 큰 다롄, 즉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은 곳이 북한과 인접한 장춘, 즉 지린성이다. 특이한 점은 래료가공의 경우 절대다수가 다롄(단둥 포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진료가공은 장춘을 비롯한 지린성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에는 진료가공의 규모가 래료가공을 넘어섰다.

이는 중국 현지에서 외국인이 북한의 물품을 수입해 가공하는 비중보다 중국인이 북한 물품을 수입해 가공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가공무역 증가 속도는 비슷하다. 래료가공은 랴오닝성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에 외국인이 더 활발하게 가공무역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자료를 통해 외국기업의 국적은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현지조사 결과 단둥에 한국기업들이 많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보아, 래료가공무역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 사업주는 상당수가 한국 국적으로 5·24 조치의 우회방법으로 제3국 무역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다. 성별 분업체계

북한 대중 성별 수입통계를 보면 북한으로부터 가장 수입이 많은 성은 랴오닝성이다. 이는 랴오닝성의 북한과의 지리적 인접성 때문인데, 랴오닝성과 북한의 대도시인 신의주와 평양까지의 접근성과 물자이동을 위한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은 헤이룽장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로 원유 공급의 영향이다. 외교부 보고서¹⁰⁸⁾에 따르면 헤이룽장성에 자리 잡고 있는 다칭유전에서 생산된 원유가 지하 파이프를 통해 단둥-신의주로 공급된다. 다만 이미 수차례 지적했다시피 2014년 중국해관 통계에서 대북 원유수출이 사라져 헤이룽장성의 북한 대중 수입량이 급격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중국해관 통계에서 갑자기 2014년 전체와 2015년 중반기까지의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38 North¹⁰⁹⁾에서의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원유 정제소가 있는 봉화화학공장에 지속적으로 물자이동이 있고 또 작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2014년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휘발유나 디젤유의 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¹¹⁰⁾ 최근에는 오히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일부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보도¹¹¹⁾로 미루어볼 때 통계에서 누락된 것이지 원유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08) 주선양 총영사관(2011).

109) Bermudez(2015, Online, 검색일: 2015. 7. 29).

110) 「북, 휘발유나 디젤유 가격 변동 없어」(2014. 7. 14, Online, 검색일: 2015. 5. 20).

111) 「북 휘발유 값도 폭락」(2015. 2. 11, Online, 검색일: 2015. 5. 20).

표 4-12. 중국 성별·세관별 북·중 무역 수입

(단위: 억 달러, %)

북한 대중 성별 수입통계			북한 대중 세관별 수입통계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라오닝성	12.9 (37.4)	14.2 (39.1)	16.0 (45.5)	다렌 (라오닝성)	28.1 (79.4)	28.7 (79.0)	25.3 (72.0)
헤이룽장성	6.3 (18.3)	6.3 (17.4)	0.2 (0.6)	장춘 (지린성)	4.9 (13.9)	6.0 (16.7)	8.3 (23.6)
지린성	4.2 (12.2)	5.3 (14.6)	7.6 (21.6)	칭다오 (산둥성)	1.1 (3.1)	1.0 (2.7)	0.6 (1.6)
산둥성	2.7 (7.8)	2.5 (6.9)	2.2 (6.3)	난징 (장쑤성)	0.4 (1.0)	0.08 (0.4)	0.2 (0.7)
장쑤성	1.8 (5.2)	1.5 (4.1)	2.0 (5.7)	스자좡 (허베이성)	0.4 (1.0)	0.08 (0.2)	0.2 (0.3)
광둥성	1.4 (4.1)	1.3 (3.6)	1.4 (4.0)	톈진	0.2 (0.5)	0.07 (0.2)	0.1 (0.7)
저장성	1.1 (3.2)	1.2 (3.3)	1.8 (5.1)	상하이	0.9 (0.2)	0.03 (0.1)	0.05 (0.6)
총계	34.5	36.3	35.2	총계	35.3	36.3	35.2

자료: 한국무역협회(Online, 검색일: 2015. 9. 10);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북한의 중국 성별 수입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입을 하는 곳은 동북 3성 중 마지막 성인 지린성이며, 이 역시 국경을 접하는 옌지나 훈춘 등의 경로를 통해 물자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다음으로 많은 곳은 장쑤성, 광둥성, 저장성 순이며, 이는 육로보다는 서해를 통한 해상무역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교역규모가 아닌 교역통로를 좀 더 면밀히 보기 위해서는 중국 해관 통계 중 세관별 분류 통계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세관별 분류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국세관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국에는 총 34개의 성에 41개의 상위세관과 562개의 하위세관이 있으며 (2014년 기준), 모든 무역과 국경세관에 대한 업무는 중국 중앙정부의 해

관총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위세관의 통계는 상위단계의 도시에 위치한 상위세관이 집계하여 발표한다. [표 4-12]의 통계는 41개 상위세관의 통계이다. 예를 들어 다론헩과 단둥시를 통한 수출입은 모두 다론헩의 상위세관의 통계로 집계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1개의 성에 1개의 상위세관이 있으나, 대규모 항이나 통상구를 가진 일부 성에는 복수의 상위세관이 있기도 하다. 예컨대 랴오닝성에는 선양 상위세관과 다론헩 상위세관이 있다.

각각의 세관마다 수출입을 위한 상이한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다. 바다에 인접한 세관은 해상 운송을 중심으로 통관이 이루어지나, 그렇지 못한 세관은 육로 운송을 중심으로 통관이 이루어진다. 다만 육로 운송은 대부분 도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부 세관만이 철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보다 더 소수의 세관이 공항을 통한 운송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운송수단을 가진 세관에 물동량이 많은데, 북한과 인접한 단둥은 육로, 철도, 공항, 항구를 모두 갖춘 세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단둥이 북·중 무역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는 이유일 것이다.

북한의 대중 수입 대부분은 다론헩(단둥 포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표 4-12]를 보면 북한의 총 대중 수입의 70% 이상이 다론헩(단둥 포함)을 통해 북한으로 반입됨을 알 수 있다. 특히 헤이룽장에서 유입되는 원유 파이프라인이 단둥지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중 수입은 다론헩 및 단둥을 거쳐서 오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유수입에 대한 기록이 누락된 2014년 통계에서도 여전히 이 지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수입규모가 70%를 상회하는 것을 볼 때, 북·중 무역에서 이 지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3. 중국 성별·세관별 북·중 무역 수출

(단위: 억 달러, %)

	북한 대중 성별 수출통계			세관별 수출통계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랴오닝성	9.5 (38.3)	11.0 (37.8)	11.3 (39.8)	다롄 (랴오닝성)	9.6 (38.4)	11.1 (37.9)	11.5 (40.4)
산둥성	6.5 (26.2)	7.1 (24.4)	6.5 (22.9)	칭다오 (산둥성)	6.4 (25.8)	7.2 (24.8)	6.0 (21.2)
허베이성	3.1 (12.5)	3.4 (11.7)	2.5 (8.8)	스자좡 (허베이성)	3.0 (12.1)	3.3 (11.4)	2.5 (8.8)
지린성	2.6 (10.5)	3.4 (11.7)	4.3 (15.1)	장춘 (지린성)	2.7 (10.8)	3.4 (11.8)	4.6 (16.0)
장쑤성	1.8 (7.3)	3.2 (11.0)	2.5 (8.8)	난징 (장쑤성)	2.1 (8.3)	3.1 (10.8)	2.5 (8.9)
톈진	0.4 (1.6)	0.3 (1.0)	0.4 (1.4)	톈진	0.5 (2.2)	0.3 (1.1)	0.4 (1.5)
총계	24.8	29.1	28.4	총계	25.0	29.2	28.3

자료: 한국무역협회(Online, 검색일: 2015. 9. 10);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 북한의 대중 성별 수출통계(표 4-13 참고)를 보면, 북한의 대중 수입과 동일하게 랴오닝성으로 가장 큰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그 다음으로 수출규모가 큰 것은 지린성이나 헤이룽장성이 아닌 산둥성과 허베이성임을 알 수 있다. 물론 2014년에는 지린성이 허베이성보다 대중 수출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북한과 인접한 지린성보다 산둥성으로의 수출액이 두 번째로 많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점이다. 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북한의 대산둥성 수출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무연탄(HS코드: 270111)이다. 2012년 대산둥성 총수출 6억 5,000만 달러 중 무연탄 수출은 5억 6,0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그해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액의 46%를 점하는 것으로 산둥성 외에 허베이

성(총 무연탄 수출의 23.9%)과 랴오닝성(26.6%)으로 수출되었다. 산동성으로의 무연탄 수출이 많은 것은 산동성의 주요 산업이 철강업으로 무연탄과 철광석 수요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¹²⁾ 동북 2성(랴오닝, 허베이)은 북한과 인접해 있으면서 주요 생산물이 철광석과 무연탄으로 북한과 산업적 특성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동북 2성에서 육로 운송을 통해, 혹은 육로와 해상 운송을 통해 산동성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북한의 평안남북, 함남고원, 평남안주 등지에서 생산된 광물을 육로로 운송하여 남포, 송림항 등을 통해 산동, 허베이, 랴오닝 등으로 해상 운송¹¹³⁾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여 북한의 대산동성 수출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점은 수입의 경우와 달리 북한의 대중 수출의 세관별 통계를 보면 성별통계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수입의 경우와 달리 대중 수출의 경우 대부분 광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광물에 대해 북한 수출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중국 극동북부지역과 비교할 때) 수송과정에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주로 선박을 이용해 직접 중국 동부 연안 세관에 바로 수송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수입의 경우는 품목의 종류도 수출의 경우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경우 국경지역에서 육로로 직접 수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 다롄 및 단둥 지역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12)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2014).

113) 위와 동일.

표 4-14. 대중 수출입의 세관별 품목당 거래량

(단위: 총액/품목)

	수출	수입
2012	3,648,417 (HS코드 8자리 기준 686개 품목) (SD: 47,000,000) 최소값 3 최대값 1210000000	880,239.2 (4,013개) (SD: 9,926,566) 최소값 2 최대값 578,000,000
2013	5,130,076 (570개) (SD: 59,300,000) 최소값 3 최대값 1,380,000,000	938,620.8 (3,870개) (SD: 10,400,000) 최소값 3 최대값 598,000,000
2014	5,138,814 (554개) (SD: 49,800,000) 최소값 1 최대값 1,140,000,000	903,702.2 (3,897개) (SD: 4,306,996) 최소값 2 최대값 110,000,000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수입과 수출의 세관별 유동량 차이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품목당 거래량을 살펴보았다. 한 해 동안 북·중 간 거래되는 총수출 품목수는 2012년 기준 686개, 수입은 4,013개로 수입 품목수가 수출 품목수보다 5배 넘게 차이가 났다. 수입규모가 수출규모보다 크므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결과이나 수출수입 총액을 이로 나누어보면 HS코드 8단위 기준 품목별 평균 수입수출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 이 역시 5배 정도 된다. 이는 북한의 수출의 경우 한 품목당 수출규모가 수입규모보다 평균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수입이 다렌과 단둥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출은 더 다양한 지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과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출은 주로 광물성 원료 중심으로 선박을 이용해 운송이 되므로 한 품목당 수출량이 많은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수입은 다양한 물품이 이루어지고 특히 개인이나 국경지역에서의 육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품목당 수입량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현시 비교우위지수로 본 분업체계

현시비교우위지수는 Ricardo의 기술격차에 의한 비교우위 개념 또는 Heckscher-Oglin의 각국의 생산요소 차이에 의한 비교우위를 직접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무역을 통해 드러나는 형태를 통해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현시비교우위지수는 다양하나 본 장에서는 이를 처음 제창한 사람 중 한 명인 Balassa(1965)의 방법을 차용하기로 한다.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산업별·품목별 분석을 주로 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품목별 HS코드 2단위로 분석하였다. 더 세부적인 분석도 가능하나 상위 분류체계 분석을 통해 먼저 전반적인 비교우위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국가 단위에서의 상대적인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측정하기보다 북한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세관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중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북한과의 비교우위를 논하는 것은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큰 데다 중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서 이를 하나의 단위로 뭉쳐 보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본 장에서는 북한과 가장 교역규모가 큰 라오닝성의 다롄 세관과 지린성의 장춘 세관 데이터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비교우위지수 도출결과를 분석해본다. 여기서는 양자간 현시비교우위지수(Bilateral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를 사용하기로 한다. 보통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전 세계 또는 지역 단위에서 도출하는데, 양국간의 무역을 비교할 때에는 양자간 현시비교우위지수가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출할 수 있다.

$$BRCA_{ij} = (X_{ij}^k / X_{ij}) / (X_{wj}^k / X_{wj})$$

$BRCA_{ij}$ = j 국가에 대한 i 국가의 양자간 현시비교우위지수

X_{ij}^k = 물품 k 를 i 국가에서 j 국가로 수출하는 총액

X_{ij} = i 국가에서 j 국가로의 총수출액

X_{wj}^k = 물품 k 를 전 세계에서 j 국가로 수출하는 총액

X_{wj} = 전 세계에서 j 국가로의 총수출액

여기서 양자현시비교우위지수가 1 이상이면 해당 품목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렌 세관과 북한의 교역을 중심으로 HS코드 2단위 분류단계에서 양자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살펴보면 [표 4-15]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HS코드 2단위 분류체계는 비교적 높은 분류단계이며, 총 97개 단계로 분류되어 있다.

북·중 무역에서 다렌(단둥 포함)을 통과하는 무역의 규모가 가장 큰데, 북한에서 다렌을 통과하는 수출품목 수보다 수입품목 수가 더 많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다렌 세관을 통과해서 북한으로 수입되는 HS코드

표 4-15. 북·중 간 RCA > 1인 품목수(HS코드 2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북한에 대한 다렌의 RCA	55 / 93	41 / 92	35 / 93	36 / 91	58 / 93
다렌에 대한 북한의 RCA	28 / 67	26 / 65	22 / 64	24 / 65	25 / 67
북한에 대한 장춘의 RCA	41 / 88	41 / 84	29 / 90	38 / 83	34 / 87
장춘에 대한 북한의 RCA	30 / 43	30 / 43	31 / 44	33 / 42	36 / 49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단위 분류(총 97개)의 수는 90개 초반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중 현 시비교우위지수가 1 이상, 즉 다른 지역에서 북한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비해 높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류는 2010년에는 절반 이상인 55개였다가 2012년과 2013년에는 30개 중반으로 다소 줄었으며, 2014년에는 다시 58개 분류로 증가했다. 반대로 북한이 다렌에 대해 수출하는 HS코드 2단위 분류는 70개가 채 되지 않으며, 그중 현시비교우위지수 기준으로 비교우위를 갖는 분류도 절반이 되지 않는다.

장춘 세관을 통과하는 무역에 대해서는 북한으로 수출되는 분류가 연도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80~90개 분류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중 북한에 대해 비교우위를 차지하는 분류의 개수는 다렌의 경우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도에는 총 수출되는 분류의 3분의 1도 안 되는 29개 분류에서만 비교우위를 차지했다. 반면 장춘 세관을 통과하는 북한의 수출 면에서 비교우위 분류를 살펴보면, 수출되는 대부분의 분류단위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전반적으로 북한은 다렌에서보다 장춘에 대한 수출에서 더 경쟁력이 높으며 북한의 수입 면에서는 장춘과 다렌 모두 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북한의 전 세계로부터의 수입대비 다렌을 통과하는 수입에 대한 다렌의 비교우위를 HS코드 2단위 분류체계에서 살펴보면 그 순위가 [표 4-16]과 같다.

표 4-16. 북한에 대한 다렌의 현시비교우위지수 품목 순위

순위	2010	2011	2012	2013	2014
1	93 무기	51 양모, 수모	45 코르크	81 기타 비금속	96 잡품
2	75 니켈과 그 제품	75 니켈과 그 제품	51 양모, 수모	51 양모, 수모	75 니켈과 그 제품
3	37 필름, 인화지, 사진용 재료	43 모피, 모피제품	65 모자류	43 모피, 모피제품	66 우산, 지팡이
4	80 주석과 그 제품	88 항공기	43 모피, 모피제품	37 필름, 인화지, 사진용 재료	59 침투, 도포한 직물
5	43 모피, 모피제품	37 필름, 인화지, 사진용 재료	5 기타 동물성 생산품	53 마류의사와 직물	67 조제우모, 인조제품
6	36 화약류, 성냥	58 특수직물	37 필름, 인화지, 사진용 재료	79 아연과 그 제품	60 편물
7	66 우산, 지팡이	54 인조 필라멘트 섬유	54 인조 필라멘트 섬유	58 특수직물	37 필름, 인화지, 사진용 재료
8	54 인조 필라멘트 섬유	66 우산, 지팡이	83 각종 비금속 제품	2 육류	51 양모, 수모
9	51 양모, 수모	5 기타 동물성 생산품	58 특수직물	5 기타 동물성 생산품	5 기타 동물성 생산품
10	5 기타 동물성 생산품	55 인조 스테이플 섬유	53 마류의사와 직물	54 인조 필라멘트 섬유	54 인조 필라멘트 섬유
11	58 특수직물	65 모자류	66 우산, 지팡이	66 우산, 지팡이	83 각종 비금속 제품
12	55 인조 스테이플 섬유	81 기타 비금속	81 기타 비금속	23 조제사료	55 인조 스테이플 섬유
13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36 화약류, 성냥	87 일반차량	87 일반차량	43 모피, 모피제품
14	87 일반차량	83 각종 비금속 제품	75 니켈과 그 제품	94 가구류, 조명기구	61 의류(편물제)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섬유 또는 의류가공에 쓰이는 원재료 품목이다. HS코드 2단위 43, 51, 54, 55, 58번 등이 이에 속하는데, 43번은 모피 및 인조모피 등이며, 51, 52번은 각각 모와 면 직물과 실, 55번은 합성필라멘트 섬유, 특수직물은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 자수천 등을 포함하는 분류이다. 이는 모두 의류 생산 시 원재료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물품이다. 단동을 포함한 라오닝성이 북한 내 의류가공 원료를 무역을 통해

제공해주고 있으며,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품목에 대해서 높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니켈, 아연, 각종 비금속 제품, 주식, 화약류, 차량 등의 산업용 원료 품목에 대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어 다렌을 비롯한 라이닝성의 북한에 대한 비교우위는 개인의 생활용품보다는 산업용 원료 또는 차량과 같은 자본재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17. 다렌에 대한 북한의 현시비교우위지수 품목 순위

순위	2010	2011	2012	2013	2014
1	78 납과 그 제품	62 의류(편물제 이외)	62 의류(편물제 이외)	67 조제우모, 인조제품	62 의류(편물제 이외)
2	62 의류(편물제 이외)	61 의류(편물제)	78 납과 그 제품	62 의류(편물제 이외)	78 납과 그 제품
3	61 의류(편물제)	67 조제우모, 인조제품	61 의류(편물제)	78 납과 그 제품	67 조제우모, 인조제품
4	46 조물재료의 제품	78 납과 그 제품	50 견, 견사, 견직물	61 의류(편물제)	61 의류(편물제)
5	79 아연과 그 제품	46 조물재료의 제품	67 조제우모, 인조제품	46 조물재료의 제품	65 모자류
6	25 토석류, 소금	65 모자류	79 아연과 그 제품	65 모자류	46 조물 재료의 제품
7	50 견, 견사, 견직물	25 토석류, 소금	65 모자류	57 양탄자	57 양탄자
8	67 조제우모, 인조제품	79 아연과 그 제품	25 토석류, 소금	50 견, 견사, 견직물	50 견, 견사, 견직물
9	7 채소	50 견, 견사, 견직물	46 조물재료의 제품	79 아연과 그 제품	25 토석류, 소금
10	65 모자류	7 채소	57 양탄자	25 토석류, 소금	7 채소
11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14 기타 식물성 생산품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7 채소	66 우산, 지팡이
12	28 무기화합물	57 양탄자	7 채소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58 특수직물
13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14 기타 식물성 생산품	14 기타 식물성 생산품	8 과일, 견과류
14	24 담배	58 특수직물	58 특수직물	58 특수직물	14 기타 식물성 생산품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으로 다렌 및 라오닝성 대비 북한의 비교우위 품목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품목분류는 편물제 의류(HS코드 61번)와 편물제를 제외한 의류(HS코드 62번)로 꾸준히 북한의 현시비교우위지수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다렌의 북한에서의 현시비교우위지수에서 섬유제품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과 쌍을 이루어 의류분야에서 일종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북한이 다렌, 단둥 등지에서 섬유와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의류를 그 지역으로 수출하는 분업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두 지역에서 의류 분야의 원자재와 완제품에 각각 높은 현시비교우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류가 더 높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나 북한 역시 견류, 견사 분야, 특수직물 부문에서는 다렌에 대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특수직물 품목은 북한에 대한 다렌의 비교우위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상호 비교우위를 갖는데, 이 경우에는 같은 분류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품질이나 용도가 달라 수출입 모두 비교우위가 생기는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총무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납, 알루미늄, 무기화합물(희토류 포함), 토석류 등의 광물류에서도 북한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며 모자류, 조물재료의 제품, 우산, 지팡이 등과 같은 생활용품에서도 높은 비교우위 지수 순위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 대한 장춘을 비롯한 지린성의 상위 현시비교우위 품목을 살펴보면, HS코드 14번 기타 식물성생산품이 2010, 2011, 2013년에 1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품목 분류하에는 ① 주로 편조물용, 브러시 또는 비의 제조용, 또는 충전물에 사용하는 원

표 4-18. 북한에 대한 장춘의 비교우위

	2010	2011	2012	2013	2014
1	14 기타 식물성생산물	14 기타 식물성생산물	62 의류(편물제 이외)	14 기타 식물성생산물	44 목재, 목탄
2	65 모자류	61 의류(편물제)	2 육과 식용설육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62 의류(편물제 이외)
3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64 신발류	44 목재, 목탄	33 향료, 화장품	91 시계
4	61 의류(편물제)	16 육, 어류조제품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64 신발류	61 의류(편물제)
5	7 채소	9 커피, 차, 향신료	61 의류(편물제)	16 육, 어류조제품	42 가죽제품
6	46 조물재료의 제품	82 비금속제공구, 스푼, 포크	42 가죽제품	62 의류(편물제 이외)	46 조물재료의 제품
7	64 신발류	91 시계	63 기타 섬유제품, 냅마	7 채소	63 기타 섬유제품, 냅마
8	9 커피, 차, 향신료	33 향료, 화장품	91 시계	61 의류(편물제)	64 신발류
9	62 의류(편물제 이외)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7 채소	30 의료용품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10	22 음료, 주류, 식초	22 음료, 주류, 식초	64 신발류	8 과실, 견과류	82 비금속제공구, 스푼, 포크
11	42 가죽제품	7 채소	14 기타 식물성생산물	9 커피, 차, 향신료	7 채소
12	95 완구, 운동용품	3 어패류	95 완구, 운동용품	22 음료, 주류, 식초	14 기타 식물성생산물
13	16 육, 어류조제품	60 편물	66 우산, 지팡이	82 비금속제공구, 스푼, 포크	3 어패류
14	86 철도차량	86 철도차량	16 육, 어류조제품	36 화약류, 성냥	20 채소, 과실의 조제품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료 또는 간단한 가공을 한 식물성 재료, ② 조각용 단추와 장신구류의 제조용 종자 등이 포함된다. 63번 기타 섬유제품, 냅마 품목 분류 역시 2012년과 2014년에 높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보이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북한에서 지린성으로부터 생활용품이나 의류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재료의 수입이 높은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비록 품목 수는 그보다 적지만 랴오닝성의 주요비교우위 품목이 섬유제품

표 4-19. 장춘에 대한 북한의 비교우위

	2010	2011	2012	2013	2014
1	13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13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7 채소	5 기타 동물성생산물	7 채소
2	67 조제우모, 인조제품	67 조제우모, 인조제품	13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6 산수목, 꽃	14 기타 식물성생산물
3	79 아연과 그 제품	79 아연과 그 제품	5 기타 동물성생산물	8 과실, 견과류	46 조물재료의 제품
4	7 채소	7 채소	12 채유용 종자, 인삼	7 채소	23 조제사료
5	23 조제사료	23 조제사료	24 담배	14 기타 식물성생산물	50 견, 견사견직물
6	50 견, 견사견직물	50 견, 견사견직물	46 조물재료의 제품	23 조제사료	8 과실, 견과류
7	11 곡물의 분과 조분 밀가루, 전분	11 곡물의 분과 조분 밀가루, 전분	50 견, 견사견직물	24 담배	5 기타 동물성생산물
8	16 육, 어류조제품	16 육, 어류조제품	8 과실, 견과류	46 조물재료의 제품	12 채유용 종자, 인삼
9	8 과실, 견과류	8 과실, 견과류	61 의류(편물제)	79 아연과 그 제품	61 의류(편물제)
10	61 의류(편물제)	61 의류(편물제)	67 조제우모, 인조제품	13 식물성수액과 추출물	62 의류(편물제 이외)
11	12 채유용 종자, 인삼	12 채유용 종자, 인삼	62 의류(편물제 이외)	15 동식물성 유지	26 광, 슬래, 회
12	25 토석류, 소금	25 토석류, 소금	11 곡물의 분과 조분 밀가루, 전분	50 견, 견사견직물	79 아연과 그 제품
13	5 기타 동물성생산물	5 기타 동물성생산물	74 동과 그 제품	62 의류(편물제 이외)	16 육, 어류조제품
14	62 의류(편물제 이외)	62 의류(편물제 이외)	25 토석류, 소금	61 의류(편물제)	25 토석류, 소금

자료: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그 외에는 주로 산업용 원료 또는 자본재 분류품목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다렌 및 라오닝성의 북한에 대한 비교우위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보인다. 즉 장춘의 비교우위는 광물류보다는 모자류, 신발류, 음료 및 주류, 완구, 우산, 육류, 어류 등 생활용품 또는 음식류에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의류(61, 62번)의 비교우위지수가 높다는 점이다. 다렌

및 라오닝성의 북한에 대한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에서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의류 분류 품목이 장춘 및 지린성의 비교우위 품목에서는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의류 품목이 장춘 및 지린성의 대북 수출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출입되는 의류의 품질 면에서 차등적인 비교우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채유용 종자 및 인삼은 꾸준히 비교적 높은 비교우위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북한의 고려인삼의 수요가 중국에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10월 단둥에서 개최된 제4회 북·중 박람회 현장에서도 북한에서 주요 상품으로 내놓은 것 중 하나가 인삼뿌리, 인삼을 사용한 약재 및 건강식품 등이었는데, 이는 중국 소비자 사이에 품질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다렌 및 라오닝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현시비교우위에 의류(61, 62번)와 견사 및 견직물이 5년간 높은 순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다렌 및 라오닝성의 경우와 차별되는 부분은 채소, 조제사료, 과실, 견과류, 식물성 수액 등 농산물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담배 역시 2012, 2013년에 높은 비교우위지수를 보여 지린성에서는 북한 담배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다렌을 비롯한 라오닝성의 북한에 대한 비교우위는 경공업 또는 의류 생산에 필요한 산업용 원료에 있고, 북한의 다렌에 대한 비교우위 품목에는 의류 및 기타 생활용품, 그리고 북한 총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물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적어도 의류생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교우위에 따른 분업체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주장과 부

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장춘을 비롯한 지린성의 북한에 대한 RCA는 일용품과 의류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린성에 대한 북한의 RCA는 의류, 농산물 또는 특산품에 집중되어 있었다.

5. 소결

본 장에서는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북·중 간 무역에서의 소비의 분업체계, 생산의 분업체계, 그리고 성별 분업체계와 비교우위 품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북·중 무역에서 소비 및 생산의 분업체계가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무역형태 분류별로 최근 5년간 북한의 대중 수출입 모두에서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이 계속 증가하다가 2014년에 소폭 하락한 반면, 가공무역은 전반적으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북한의 대중 수입 면에서는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 즉 소비를 위한 무역의 비중이 컸으며 수출 면에서는 제3국 중개무역 또는 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이 주로 이루어지는 부세구무역이나 가공무역의 비중이 대중 수입보다는 상대적으로 커 북한의 대중 수출입의 주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소비의 분업체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양국의 주요 품목이 안정적으로 수출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 일반무역 분류하에서는 산업원자재 및 건설자재, 식품류 등이, 변경소액무역 분류하에서는 곡류 및 생활용품 등이 많이 거래되고 있었다. 대중 수출에서는 일반무역과 변경소액무역 모두에서 무연탄과 철광석이 가장 큰 규모로 꾸준히 거

래되어왔으나 2014년에는 그 규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고, 그 외에 기타 광물류와 수산물 등이 큰 규모로 거래되고 있었다.

가공무역을 매개로 한 생산의 분업체계 역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북한의 대중 가공무역 수입의 주요 품목으로는 석유, 고무, 플라스틱, 특수직물 등 가공에 필요한 에너지류 및 원자재가 있었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견과류, 수산물, 의류 등이 있었다. 의류 품목은 앞에서 분석한 소비의 분업체계에는 그다지 큰 규모로 거래되지 않았던 반면, 생산의 분업체계에는 큰 규모로 거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대중 수출 면에서는 소비를 위한 무역은 주로 광물 등 1차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반면, 제3국으로의 수출 또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가공무역 형태의 생산의 분업에서는 의류나 식품가공 등의 2차 산업과 연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세관별로는 북한의 대중 수입 면에서는 70% 이상이 다렌(단당 포함)세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수출 면에서는 그보다 집중도가 낮았다. 이를 통해 수입은 주로 육류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나 수출은 해상으로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다.

현시비교우위지수(RCA)로 동북 2성과 북한 간의 주요 비교우위 품목을 살펴본 결과 분업구조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북한에 대한 다렌의 RCA는 섬유 또는 의류가공에 쓰이는 원재료에 특히 높게 나타났고, 이외에도 각종 비금속 제품 및 산업용 원료 및 자본재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렌에 대한 북한의 RCA는 완제품 의류에서 높게 나타나, 의류 부문에서 다렌에서 원자재를 공급하고 북한에서 완제품에 대한 비교우위가 있는 분업체계의 존재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의류 외에도 광물류, 생활용품

등에서도 높은 RCA를 나타냈다. 북한에 대한 장춘의 RCA는 생활용품이나 의류 생산 시 사용되는 재료, 생활용품, 식품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반대로 장춘에 대한 북한의 RCA는 인삼, 채소, 과일 등의 특산품 및 식품류, 의류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의류 분야에서도 역시 비교우위에 따른 생산공정에 분업체계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제5장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분업체계 실태조사

1. 조사방법
2. 조사내용
3. 소결



본 장에서는 문헌조사와 통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제1~4장에서 정립한 분업체계의 개념과 결정요인, 북·중 무역 추이와 전망의 현실적합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실제 대북 사업을 하는 현지기업이 북·중 분업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체감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발전해갈지, 또 북·중 무역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중국 동북지역은 북한과 접경지역으로서 북·중 분업체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현지 대북 사업 관계자는 북·중 분업체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북·중 경제협력을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정은이(2015), 정승호(2014), 이종운, 홍이경(2013) 등이 있다. 정은이(2015)는 남북교역과 남·북·중 교역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두었고, 특히 남한의 대북 제재, 소위 ‘5·24 조치’ 이후 중국을 거점으로 한 남·북·중 교역의 활성화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남북교역과 남·북·중 교역이 상호 촉진관계에 있고, 남한의 대북 제재가 북·중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정승호(2014)는 북·중 무역의 주요 주체인 중국기업의 대북 사업 성공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 역시 ‘5·24 조치’ 전후 교역구조의 변화에 주목하여, 중국기업이 대북 기업 운영에 있어 남한의 대북 제재가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이종운, 홍이경(2013)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경무역, 대북 위탁가공, 밀무역 등을 포함한 경제협력과 함께 이와 관련된 통관 및 물류운송 등 거래관행에 대해 연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북·중 간 다양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관행이 고착화 되어있다고 분석하였다.

본 장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북·중 분업체계라는 거시적인 방법론적 틀을 활용하여 분업 결정요인이 향후 북·중 경제협력의 변화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였다는 데 있다. 현지조사를 수행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한국의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의 교역구조 변화를 조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조사방법¹¹⁴⁾

실태조사는 동북지역 기업인의 대북 사업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¹¹⁵⁾ 선행연구 중 KOTRA(2012)는 105개의 중국 내(대만, 홍콩 포함) 대북 기업을 보고하였고, 정승호(2014)는 단둥을 중심으로 접경지역에서 총 138개 기업(한족, 조선족, 화교, 한국인)에 대해 면접 혹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현지조사가 북·중 관계가 과거보다 더욱 악화된 시점에 진행되었고, 또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해 장기간 체류하며 다수의 관련 업계 종사자를 면담하는 데는 제한이 있었다. 이로 인해 조사는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접경지역에서 20명의 기업이 및 관련 업무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원 비공개를 전제로 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¹¹⁶⁾

114) 면담자의 안전과 신변보장을 위하여 면담자의 정확한 사업형태와 사업 관련 정보, 면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어 일부 내용을 생략 및 축약함. 자세한 내용은 저자에게 문의 바람.

115) 애초에 중국 접경지역 기업의 대북 사업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해 이를 대리 수행할 업체를 찾지 못해 연구진이 직접 대표성을 가진 대북 사업체를 면담함.

116) 본고에서는 20명의 면담자를 A~T로 지칭함.

면담내용은 북·중 분업체계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문의하면서, 특히 중국의 결정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린성의 경우는 연구진의 사전조사에 근거해 기관 소속의 대상자와 면담을 통해 중국의 결정요인 중에서도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에 대해 집중 검토하였다. 반면 랴오닝성의 경우는 실제 민간 종사자와 면담을 주로 진행하였는데, 랴오닝성이 북·중 무역의 최대 거점인 관계로 북·중 분업체계의 현황에 대해 집중 확인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심층면접 대상자의 대표성과 객관성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연구진과 면담을 한 업체는 남·북·중 무역에 깊이 종사하고 있어서 남한 내 동향 파악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면담에 응한 면이 있다. 정작 필요한 북·중 분업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북·중 무역 종사 업체나 한족 기업은 면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북한과 중국 양측 모두 폐쇄적인 기업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북 사업 자체가 매우 민감한 영역에 있기에 모집단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지역의 관련 문헌을 함께 검토하였고, 또 관련 전문가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였다. 끝으로 부록으로 2011~2013년 동안의 북·중 접경지역의 물류, 인원, 교통수단 이동현황을 제시하여 통계적으로 이를 보완하였다.

2. 조사내용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장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앞의 제1~4장에서 정립한 분업체계의 개념과 분업 결정요인의 현실적합성 및 전망을 분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북 사업자가 실제 종사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 분석과 면담을 토대로 분업체계의 개념과 분업 결정요인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가. 북·중 분업체계에 대한 인식

앞의 제2장에서는 북·중 분업체계를 북·중 접경지역 내에서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생산에 있어 생산공정연계(production sharing), 소비에 있어 조달(procurement)과 소비 고착화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면담자 중 대다수가 가공무역을 매개로 한 생산의 분업체계와 중국이 모든 소비용품을 공급하고 북한이 이를 소비하는 소비의 분업체계의 개념에 동의하였다.

다만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의 성장단계에 대해서는 각기 의견을 표하였는데, ‘태동, 형성, 성숙, 쇠락’ 중 무역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경제협력사업이 형성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데에는 의견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적으로 구분된다기보다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관련 업무에 어느 정도로 깊이 관여하고 파악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랐다. 경제협력사업 혹은 관련 업종에 깊이 관여된 면담자일수록 북·중 분업체계라는 개념에 동의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또 분업체계에 대한 인식은 국적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인보다 중국 국적의 면담자가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북·중 분업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구조적·정책적 변화요인이 어떻게 분업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문의해보았다.

나. 중국 경제성장을 둔화가 북·중 분업체계에 미치는 영향

중국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와 이와 연계한 각종 정책의 변화가 북·중 분업체계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북·중 분업체계에 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중 무역으로 인해 형성된 분업체계가 한층 확대되는 가운데, 생산공정의 이전 등을 비롯한 새로운 경제협력사업을 포괄한 분업체계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현지 대북 사업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둔화가 북·중 교역환경의 분업체계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면담자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경제의 활성화, 둘째, 중국경제의 성장 속도 둔화와 접경지역 대북 교역의 낮은 상관성, 셋째,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가 반부패정책이라는 중국 내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된 측면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경제 성장이 둔화 추세라고 할지라도, 북한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오히려 교역품목과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랴오닝성의 면담자들이 면담에서 많이 보고하였는데, 특히 K, L은 북한 내 자산 규모에 따른 계층분화가 이루어지고 전반적으로 소득이 상승하면서, 북한 내에서 소비되는 상품의 종류와 양이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별개로 대북 수출이 늘어났음에도 많은 경우 관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밀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밀무역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I, J 역시 북·중 무역 통계보다 훨씬 큰 규모(정규 무역의 0.5~1배)로 추정하였다.¹¹⁷⁾ 요약하면 북한경제의 활성화 추세에 따라 수요품목이 다변화되고 있고, 이는 관세 회피를 위해 밀무역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어서 비록 통계상의 수치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적어도 접경지역 기업들이 중국경제 둔화로 인해 북·중 분업체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된다고 해도 북·중 접경지역의 경기 둔화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중국의 경기 둔화는 중국 연해지역과 중부지역 등 발전한 지역의 경기 둔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접경지역은 아직 개발 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 전체 대륙의 경기 둔화와는 다소 시간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A, B는 중국 동북지역이 원래 낙후된 지역이고, 동북노후공업기지 구조조정이 계속하여 추진되고는 있으나 이는 개혁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동북지역의 해상출로가 확보되면 오히려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셋째, 다수의 면접대상자가 최근 중국경제 성장의 둔화 배경으로 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반부패정책을 지목하였다. 이 중 D는 강도 높은 반부패정책으로 인해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던 정부주도방식의 경제성장이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곧 중국경제 성장률의 둔화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접경지역의 대북 사업 종사자는 북·중 분업체계가 형성된 지역에서는 중국 경제성장 속도 둔화로 인해 직면하는 부정적인 피해를 아직 실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품

117) 관련 전문가 역시 이러한 추정규모를 확신할 수는 없으나, 무역통계보다 더 큰 규모의 밀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함.

인 철광석과 무연탄이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의 대중 수입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경제가 둔화되고 있을지라도 북한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중국의 대북 주요 수입처로서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실제 통계에서 나타난 2015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입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긴 하나, 이러한 감소 현상이 지역적으로 주요 수입처의 역할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중 분업체계는 중국의 경기성장 둔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시차를 두고 영향이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또는 북·중 분업체계 중에서도 중국 동부 연안과 연관이 있는 경우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나, 동북지역과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분업체계는 시차를 두고 향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면담 내용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면담자의 응답이 동북지역의 실제 경제지표의 변화와 상반되어 있다는 점이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자원개발팀(2015) 보고서에서는 2015년 상반기에 북한의 대중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년 동기대비 2015년 상반기 중국 동북지역의 GDP 감소폭이 중국 전체 GDP의 감소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면담자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실제 북·중 무역의 감소를 왜곡하여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중국의 경기 둔화는 경제성장의 둔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중국경제의 역성장(0 이하의 경제성장률 기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경기 둔화가 북·중 무역의 감소보다는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다음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데, 셋째, 면담자의 답처럼 밀무역이 과거보다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와 우연의 일치로 교역상품에서도 구성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연탄과 철광석 일변도의 무역상품이 의류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과거 저관세 상품 위주의 구성에서 상대적으로 고관세 상품 위주로 상품의 구성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관세를 피하기 위하여 밀무역이 증가하였고, 이를 북·중 무역통계가 반영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앞의 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시차를 두고 북·중 교역환경 악화를 야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시간을 두고 북·중 통계를 관찰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 에너지관리정책 및 환경보호정책이 북한산 자원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제3장에서 중국에서 에너지관리정책 및 환경보호정책이 추진되면서, 석탄사용 업체의 생산비 증가와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저품질의 석탄 수입 억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관련한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 동북지역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환경보호정책에 따른 기업비용 증가현상에 대해 문의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환경보호정책이 실시되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응답자 E는 환경보호정책은 과거부터 줄곧 강조되어왔으나, 실제 강력하게 정책이 시행된 것은 최근 들어서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규제 당국이 모니터 설치 등 환경오염 규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에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이로 인해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환경보호정책으로 북·중 경제협력이 줄어들 가능성은 다소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접경지역의 기업가들은 중국의 환경규제로 인해 오염유발산업이 북한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과제를 지적하였는데, 먼저 전력, 기초시설 등 인프라 구축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G는 북한 시설이 낙후되어 전력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될 경우 더 많은 중국의 산업기반이 북한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에너지관리정책의 경우, 그 정책적 효과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G는 북한의 석탄 품질 문제를 지적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중국의 대북 광산 투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 I, J, K 모두 북한광산에 대한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가 이어지고 있음을 밝히며, 특히 최근에는 한족 중심의 민간거대자본이 대북 자원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동향과 달리, 중국의 에너지관리정책 강화로 인해 중국의 대북 무연탄 수입이 감소한다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점이 북한산 석탄의 대중 수출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진이 조사한 지역은 중국의 동북지역이나 실제 환경보호정책과 에너지관리정책의 주요 관심지역은 중국 중앙 내륙지역과 연안지역이며, 이들 지역이 북한산 석탄의 주요 수출지이기도 하다. 환경보호정책과 에너지관리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동북지역보다는 중국 연안과 수도인 베이징 인근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현지조사에서는 적어도 동북지역에 한해서는 환경보호와 에너지관리 등 중국경제의 정책적 요인이 대북 기업운영에 직접적

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이 중국의 유휴 투자능력과 결합되면 중국의 대북 자원투자의 잠재적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중 분업체계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오염유발 산업이 북한의 접경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 생산공정 중 오염유발이 심한 산업이 북한으로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의 대북 투자 역시 동남아의 오염유발산업 유치와 유사하게 자원유출형 투자에서 오염유발산업 투자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더 정확한 상황 이해를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라. 중국의 인건비 증가와 북한인력 수요 증가

인건비 상승은 중국 진출 해외기업의 기업철수 핵심 요인으로 거론되어왔다. 실제 중국 내 인건비 상승은 대북 사업 유인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의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건비는 최저임금 상승을 비롯해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한다. 또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강화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고용보장정책 역시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E는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할지라도 실제 북한 노동력 고용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내에 북한 노동인력을 데리고 온다고 할지라도 임금, 사회보장비용 등 기본적인 인건비를 비롯하여 관리기관에 주는 비용,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에 드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므로 북한 노동력 활용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령 중국 노동자 1인 고용에 월 2,500위안 전후가 소요된다면, 북한 노

동자의 경우는 인건비에 월 2,000위안 전후가 소요되나 실제로 인건비 전체 총액은 그다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 노동력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농촌을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젊은 인력의 유출이 심각하고, 북한인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강한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경제의 성장에 따라 젊은 인력이 단순노무 중심의 업무를 회피하고 있고, 무엇보다 농촌이나 낙후된 지역에서 저임금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기보다는 신형도시화를 통해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E, J, K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봉제작업부터 식당 서빙 등 단순 서비스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출된 젊은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북한 노동력이 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M, N은 평양, 남포, 사리원, 숙천 등지에 위탁가공을 하기 위한 소형 발전기 등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풍부하고 숙련된 노무인력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더 많은 오더(주문)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A, C는 중국 지방정부가 북한의 노동력 활용을 위해 북한의 대중 산업연수생 파견을 비롯한 여러 협약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¹¹⁸⁾ 지린성 접경지역의 경우, 나진 지역의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나선 특구에 중국과 북한의 역외 가공지역인 ‘중·조 라선경제무역구’가 운영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J, K는 분명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대중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남한의 대북 제재 이후 중국동포(조선족)가 일시적으로 기존의 산업시설을 회수하며 대북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지만, 이후 중국의 한족을 중심으로 한

118) 북한의 대중 산업연수생 파견은 해당 기업의 법인대표가 중국인인 경우에만 가능함.

거대자본 진출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가령 P는 현재 중국 화동지역의 저장성 기업가협회에서 대북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단둥신구에 입지한 부동산 역시 이들의 투자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I는 최근 선양-단둥-신의주-평양 철도 운행노선이 개통되면서 중국의 투자자가 사업 기회를 찾아 더 활발히 진출하고 있고, 더욱이 기존의 중국 북방 쪽 투자자뿐만 아니라 남방 쪽 투자자 역시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등 대북 사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J, K, O, L, M은 모두 북한 내 위탁가공업의 최대 장점이 우수한 기술의 노동력을 일정한 가격 수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내 농촌지역과 낙후지역에서 이촌향도로 인력유출현상이 발생하면서 북한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향후 중국의 대북 기업으로의 진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북·중 분업체계 확대로 최대 결정요인은 북한의 대중 해외인력 파견이라고 보았다.

마. 동북지역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 강화

지린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 나선지역, 백두산지역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대북 경제협력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나진항을 이용하여 교역로를 구축하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다. 이는 비단 북한과의 교역 활성화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중국 상품이 북한 항구를 경유하여 다시 중국 남부로 연결되는 새로운 교역로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A, B는 지린성이 차항출해(借港出海)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 나진

향으로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 ‘내국무역 외국운수(內貿外運)’의 일환으로 훈춘-나진-상하이 노선이 개통되면서 나진항 활용 여지가 더욱 커졌다. 또한 취안허(圈河) 통상구와 북한 원정지역을 잇는 신두만강대교가 곧 완공 예정이어서 개통 이후 훈춘의 물류중심지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F 역시 북한 나진항을 비롯해 러시아 극동지역이 개방되어 더욱 원활하게 물류를 이동할 수 있게 되면 지린성의 가치가 올라가고, 더불어 대북 경제협력정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북·중 접경지역의 관광사업 역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두산 지역에 최근 지정된 무봉국제관광지대는 양국이 관광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나선과 광천(防川) 지역에서도 협력을 모색하는 등 협력의 방식을 더욱 다변화하고 있다. B는 샤틀즈(沙坨子) 통상구를 통해 일일 자전거여행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 다양한 관광사업이 개발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훈춘의 경우, 수산물 가공업을 필두로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중 수산물 가공업, 의류 임가공업에 북한 산업연수생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었다. C에 따르면 아직 양국간 노동력 활용 문제에 있어 실무적인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나 북한 동해 수산물을 비롯해 러시아 산 수산물도 유입되고 있어, 북한 노무자가 이를 가공하는 산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중 분업체계와 경제협력에 긍정적 시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북한의 소극적이고 비일관적인 정책의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E는 중국이 추진하는 대북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북한의 호응이 소극적인 편이고, 지린성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이 부족하여 대북 경제협력의

추진동력이 적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중국이 외자기업에 제공하는 특별한 우대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린성 내 중국기업이 대북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볼 산업이 마땅히 없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랴오닝성의 경우, 선양-단둥 라인이 북한과의 핵심 비즈니스 지역으로 판단된다.¹¹⁹⁾ J, K, O는 대부분의 대북 사업이 단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J, K는 단둥항이 사유항으로서 사용료 부담이 있어 주로 다롄항, 잉커우항, 산둥 르자오항, 옌타이항으로 북·중 무역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실제 계약은 거의 단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해당 지역이 북·중 교역의 핵심 창구라고 거명하였다. O는 북한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이 일반무역, 밀무역 등 다양한 거래방식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북한에 있어 단둥지역이 갖는 특수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노동력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O, L은 북한 노동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북한 노동력을 중국 내로 데리고 와 생산활동을 하는가 하면, 반대로 북한 내 생산이 가능한 기업소에 오더(주문)를 하여 생산물을 반제품상태로 다시 중국으로 들여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완제품은 약 35%의 세금(관세 17% + 증치세17%)이 부과되는 반면, 반제품의 경우는 증치세가 면제되기에 반제품으로 단둥 보세구역에 유치하여 이를 완제품으로 가공해 중국산 제품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119) KOTRA(2012)는 대북 교역 및 투자기업이 랴오닝성보다 길림성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랴오닝성의 경우 단둥-선양-대련, 지린성의 경우 옌지-훈춘-투먼 등 접경 지역에 집중되어있다. 그러나 중국 내 대북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이를 비공개로 은밀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확실한 수치를 알기는 어렵다.

반면 랴오닝성의 대북 경제협력정책은 과거에 비해 다소 정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압록강대교와 황금평 개발 등 경제협력사업이 정체되는 한편, 임호열 외(2015)에서 단둥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대북 관행관세율 변화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랴오닝성이 대북 경제협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O, M, N은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접경지역이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이 지린성의 경우는 정책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실제로는 추진 동력이 미흡한 상황인 반면, 랴오닝성의 경우는 경제협력정책의 추진은 미진한 편이었으나 민간교류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었다.

끝으로 면담자들은 대체로 북·중 분업체계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P는 북·중 관계가 개선되면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분업체계 확대에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가령 신압록강대교만 개통되더라도 북·중 교역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R은 분업체계가 무조건 확대되기보다는 북한 인프라 및 투자 환경의 개선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3. 소결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중국경제의 구조적·정책적 변화가 북·중 분업 체계에 단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분명 점진적으로 대응하여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의 구조적·정책적 변화에 따라 분업체계

의 주체인 기업들이 실제로 기업 운영에서 느끼는 정도는 각 세부 요인별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중국 경제성장 속도 둔화가 북·중 분업체계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북한경제의 활성화로 인해 북한 내 소비계층이 다변화되면서 요구되는 수입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접경지역의 중국계 대북 사업자의 기업 운영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중국 내 반부패정책으로 인해 관(官)에서 모든 사업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서 경제성장률이 저하됐다고 할지라도 실제 민간경기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보호정책은 최근 한층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북·중 분업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부 당국이 환경오염 규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별 생산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향후 비용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에너지관리정책의 추진이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단 실태조사를 통해 아직도 많은 중국계 투자자가 북한의 광산 및 지하자원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유추하자면, 무연탄을 수출하는 북한의 무역회사가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중국 내 유희 투자여력이 북한 내의 투자처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과 낙후지역의 인력 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은 가공업체를 위주로 한 단순노동집약적 기업의 대북 사업 진출에 가장 큰 유인요소로 북·중 분업체계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노동력을 활용할 경우, 우수한 기술의 노동력을 일정 가격 수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중국 내에서 운영하던 사업 중 일부 생산공정을 북한으로 이전하거나 혹은 북한인력을 중국 내로 데리고 와 생산을 시키는 초기 단계의 분업체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식당 서빙, 건물 공사 등 저임금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에도 근로자 파견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지린성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차항출해를 위해 북한 나진항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훈춘-나진-상하이 노선이 개통되면서 ‘내국무역 외국 운수’가 실현되어 향후 지린성 훈춘시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과 북한의 분업체계가 지역적 차원에서 한층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랴오닝성은 대북 경제협력정책 추진의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단둥시를 필두로 북·중 분업체계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끝으로 실제 대북 사업 종사자가 북·중 분업체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더욱 확신하였는데, 이를 볼 때 한국 정부와 기업에서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 제6장에서는 북·중 분업체계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시사점
3. 정책제언



지금까지 북·중 분업체계의 정의, 현황, 북·중 교역환경 변화와 관련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장은 북·중 분업체계의 마무리 장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내용 요약과 북·중 분업체계 형성 및 확대의 의미, 남·북·중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한다.

1. 요약

2002~2011년 동안 중국은 연평균 9%가 넘는 경제성장을 해왔고, 북한을 위시한 몽골,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은 무역을 통해 중국 경제성장의 수혜를 입으며 경제적 안정기를 누렸다. 2000년대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을 수출하며 무역이 가져다주는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맛보면서 1990년대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와 함께 찾아온 고난의 행군의 상처를 추스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북한은 무역이 주는 경제적 안정을 극대화하고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내·외적인 동인이 맞아떨어지면서 빠르게 심화되었는데,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자원에 대한 높은 수요에 동조하여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련의 움직임이 내적 동인이었다면, 경제안정을 핵무기 개발로 풀어내는 북한을 저지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외적 동인이었다.

북·중 경제협력은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2012년부터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국제원자재시장의 무연탄과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2년 이후 북한의 대중 무역

은, 특히 무연탄과 철광석의 수출은 2015년 상반기까지 부침은 있었으나 어느 정도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북한 무역을 하나하나 살펴 보면 북·중 무역이 2010년대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질적 변화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북·중 무역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면, 대외협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북한의 열의가 새로운 양상의 북·중 관계를 빚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을 바탕으로 북·중 교역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0년대 중국경제 성장의 수혜로 경제적 안정을 이룩한 북한의 경제관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된 중국의 경기 둔화가 2000년대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을 꿈꾸는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중 경제협력을 국경을 마주한 국가간 분업체계로 정의하고, 분업체계가 형성되고 성장하는 여러 요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뒤, 이런 요인이 중국 중앙정부와 라오닝성과 지린성의 지방정부가 경기 둔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한 일련의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쳐 북·중 분업체계의 형태를 변화시켰는지 밝혔다.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은 연구 자료와 방법론에 있다. 먼저 연구 자료의 차별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북·중 무역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중국해관이 제공한 2010~2014년의 북·중 무역통계로 HS코드 8단위에서 연도별·국가별 수출입 현황을 넘어 세관별·무역형태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하여 북·중 무역이 단순교역에서 위탁가공과 중간재 교역으로 발전하는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응하여 일부 무역에서 북한이 3국(중국)을 경유한 대한, 대일 우회무역을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도 밝혔다. 연구방법론의 차별점으로 북·중 경제협력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 것과 중국 현지조사를 수차례 실시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론적 틀을 통해 국경을 매개로 한 분업체계의 발생요인을 밝히고, 북·중 분업체계의 분야를 규명하였으며, 현지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규명한 다양한 가설과 분석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접경지역에서 대북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사를 만나 면접조사를 함으로써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분업체계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북·중 분업체계란 생산의 분업과 소비의 분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산의 분업이란 북·중 접경지역에서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생산에 있어 중국 내 생산공정(생산과정)의 일부가 북한으로 이동(production sharing)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의 분업이란 소비에 있어 중국이 북한에 필요한 소비물품을 조달(procurement)하고 북한이 중국으로만 편향된 독점적 거래를 통해 이를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경제학에서는 기술이 발달한 고소득 국가와 자원이 풍부한 저소득 국가 간에 발생하는 무역관계, 즉 고소득 국가가 저소득 국가에서 자본재를 수입하고 또 소비재를 수출하는 수직적 분업체계와 고소득 국가의 기술력과 저소득 국가의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하여 생산공정의 일부가 고소득 국가에서 저소득 국가로 이동하는 수평적 분업체계를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생산의 분업체계는 수평적 분업체계와 유사한 것이며, 소비의 분업체계는 수직적

분업체계와 유사한 것이다. 다만 소비 측면에서 북·중 분업체계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하여 독특한 양상을 보여왔기에 소비의 분업체계로 규정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규정한 북·중 분업체계는 북한과 중국 전체의 경제협력관계를 칭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과 북한에 접경한 중국 동북 2성간 북·중 경제협력관계를 칭하는 것이다.

북한이 광물 위주의 수출을 하는 자원유출형 수출구조를 가지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있다. 중국이 2002~2011년 동안 고성장을 거듭하며 전 세계 제조업 공장역할을 하여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였고, 주변국인 북한이 이에 호응하여 철광석과 무연탄의 수출을 급격히 늘렸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 일본, 2010년 한국의 대북 제재로 북한과의 교역이 중단되자,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북한의 대중 무역비중은 2005년 50%를 돌파한 이래 2014년 90.1%를 기록하며 급증하였다. 여기에 북한의 순외국인투자(FDI) 유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부터 연평균 90%를 상회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8년 이후의 중국의 대북 투자는 줄어들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상을 통해 무역과 외국인투자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북·중 무역이 단순 무역에서 생산과 소비에서 산업적인 연계를 갖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생산의 분업으로 상품교역에 있어 위탁가공, 서비스 교역에 있어 해외노동자 파견, 북·중 접경지역 관광, 광업투자, 중국의 북한수역 조업 및 수산물 양식 투자, 중국의 대북 부동산투자, 운수업투자, 철도·도로·항만 건설을 꼽았으며, 소비의 분업으로는 일반 소비재 교역을 꼽았다. 생산의 분업으로 일반 해외노동자 파견과 북·중 접경지역 관광을 꼽았다. 북한의

대중 해외노동자의 파견의 경우, 2012년 145명을 시작으로 2015년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수준으로 급증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인력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요구와 북한의 노동자 공급, 즉 중국의 기획, 북한의 인력 공급으로 생산의 분업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또 북·중 접경지역 관광의 경우, 북한관광이 북한의 기획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개는 지린성과 랴오닝성 관계자가 지린성과 랴오닝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박 2일 정도의 북한관광을 포함해 중국 동북지역 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때문에 북·중 분업체계, 특히 생산의 분업의 한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관광에 있어 주요 기획이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제3장에서는 향후 북·중 분업체계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북한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비무역분야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은 중국의 환경보호 강화와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있다. 북·중 무역활성화를 견인한 무연탄과 철광석의 대중 수출이 정체 혹은 감소되고 있는데, 무연탄의 경우는 환경보호와 에너지자원 관리정책 강화, 경제성장 둔화가 저품질 석탄 수입에 대한 규제와 중국산 석탄산업 보호조치로 이어지면서 북한산 무연탄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철광석의 경우는 세계적인 철강 수요 감소와 함께 중국의 경기 둔화로 철강산업이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북한산 철광석 수입이 빠르게 줄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그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은 북·중 무역에서 무연탄과 철광석 등 전통적인 무역상품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또 중국은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으로 민생보장에 무게를 두면서

인건비, 사회보장비용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과 함께 북한과 접경한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젊은 노동력이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동부 연안의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인력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 노동자가 중국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연수생으로 파견되어 의류, 수산물 가공 등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일하게 됨으로써 비무역 분야인 해외노동자 파견이 확대되면서 분업체계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동북지역 중소도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랴오닝성의 단둥시와 지린성의 훈춘시이다. 이들 도시는 선행선시(先行先試) 지역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하고 있다. 여기서 선행선시 지역이란 중국 당국의 승인 없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벌인 뒤 차후에 중국 당국에 신고하여 당국의 승인을 얻어도 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적극적인 대북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잘 알려진 것으로 신압록강 대교 건설, 중·조 접경민간호시구 신설, 출경무역 시행, 대북 소액변경무역 확대 등이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북·중 경제협력 중 생산의 분업으로 접경지역 관광, 해외노동자 파견, 의류 위탁가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의 분업으로 중국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대북 변경소액무역과 대북 수산물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적 요인도 있는데, 북한 당국의 과정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분권화와 결합되면서 북

한의 대중 의존도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정책적 목표로 민족적 자립경제를 강조하면서 각 경제주체에 달성하여야 할 성과를 할당하는데, 각 주체는 할당을 채우기 위하여 중국 측 사업자의 경제적 도움을 끌어 쓰고, 반대급부로 중국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북한 대중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또 북한은 국내에 부족한 생필품과 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하여 광물 위주의 수출전략을 펴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생산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하자원 개발권과 이용권을 활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에는 광물 수출과 탄광 개발을 중심으로 북·중 분업체계가 발전하였다. 이들 분야에서의 북·중 경제협력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무연탄과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면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북·중 분업체계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투자로 경제협력 가능한 위탁가공무역을 통한 경공업·제조업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북한은 경제 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외자유치를 위해 접경지역 관광과 해외노동자 파견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분야는 북한이 중국 지린성, 랴오닝성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북한 내부적으로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해외 산업연수생 파견에 대한 정책적인 강조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해외노동자 파견의 확대는 북·중 양국의 노동시장의 안정성 및 북한의 정치체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소지가 있어 장기적인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중국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2010~2014년까지 5년 동안

북·중 간 무역에서 생산의 분업과 소비의 분업, 성별 분업, 비교우위 품목을 분석하였다. 먼저 무역형태별 분류를 보면, 생산의 분업은 북한의 가공무역과 보세무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가공무역은 2003~2010년 동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2011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보세무역은 한국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2010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가공무역의 대표적인 것은 의류와 수산물 위탁가공이며, 보세무역은 북한은 중국에 위치한 창고를 이용하여 한국, 일본 등 제3국으로의 우회수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이다. 생산의 분업 중 가공무역에서는 석유, 고무, 플라스틱, 특수직물 등 위탁가공에 필요한 원자재와 연료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에 주요 수출 품목으로 견과류, 수산물, 의류 등이 있었다. 소비의 분업은 일반무역과 변경무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변경무역은 중국의 라오닝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북 수출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부터 그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대중 수입 중 일반무역에서는 산업원자재와 건설자재, 식품류가 주를 이루었으며, 변경소액무역에서는 곡류와 생활용품이 주를 이루었다.

세관별로는 북한의 대중 수입은 70% 이상이 다렌(단동 포함)세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 반해 수출은 비교적 다양한 세관과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수입은 대부분 육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출은 해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시비교우위지수(RCA)로 동북 2성과 북한 간의 주요 비교우위 품목을 살펴본 결과 분업체계가 더욱 명확해졌다. 다렌의 대북한 RCA는 섬유 또는 의류가공에 필요한 원재료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외에도 각

중 비금속 제품과 산업용 원료, 자본재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북한의 대다렌 RCA는 원재료보다는 완제품 의류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렌과 북한의 RCA 분석을 통해서도 북한과 다렌 간에 생산의 분업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대장춘의 RCA는 역시 생활용품이나 의류 생산 시 사용되는 원재료와 생활용품, 식품 등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장춘의 대북한 RCA는 인삼과 채소, 과일 등의 특산품, 식품류, 의류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의류 분야에서도 역시 비교우위에 따른 생산공정에 분업체계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대북 경제협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먼저, 북·중 분업체계의 개념과 형태, 추세에 대하여 대부분의 면담자가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북·중 경제협력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면담자일수록 북·중 분업체계라는 개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제4장에 제시된 생산과 소비의 분업에 근간되는 무역 통계와 추세에 대해서는 면담자마다 다소 관점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면담자 수가 적고, 각기 종사분야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대다수 면담자가 저렴한 고용이 안정적인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대중 해외 노동자 파견 확대와 중국의 대북 위탁가공을 중심으로 한 북·중 분업체계의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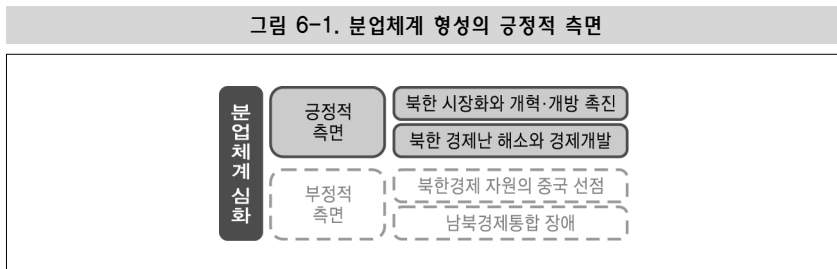
제6장에서는 북·중 분업체계의 심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북한의 시장화와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북한 경제난 해소와 경제 개발을 꾀았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북한경제 자원의 중국 선점, 남북경제통합 장애를 꼽았다. 북·중 분업체계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해 남·북·중 다자협력 사업으로 IT 산업협력, 중국 나진항 개발 참여, 북·중 호시무역구 진출, 북한의 GTI 재가입 유도 등을 제안하였고,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남북통화 교환비율에 관한 연구와 5·24 대북 제재의 단계적 해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2. 시사점

가. 북·중 분업체계 형성의 긍정적 측면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을 매개로 한 북·중 분업체계의 심화는 북한의 시장화와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북한의 경제난 해소와 경제개발의 긍정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6-1 참고).



자료: 저자 작성.

먼저 북·중 분업체계의 심화는 북한의 시장화와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00년대에는 북한 당국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시장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북한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갔다면, 2010년대에는 북한 당국이 개혁·개방과 시장화의 성과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면서 북한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대 북·중 분업체계의 성장으로 인한 시장화의 확산은 북한 당국의 북한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로 이어졌다. 북·중 분업체계 성장의 동력은 북한의 경제난과 재화 부족이었고, 북한경제에 대한 통제력 상실의 원인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 정책수단의 미흡이었다. 2000년대 초반의 경제난과 재화 부족으로 사회주의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계획경제 부문과 수입품에 의존한 장마당의 시장지향적인 사경제가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민간 부문의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북한 당국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사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려 하였으나, 사경제 통제에 대한 경험 부족과 정책적 대응 미숙은 높은 물가 상승(hyper inflation)과 북한 원화 사용 축소와 외화 사용 확대를 야기했다. 2000년대 중반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빈번해지기 시작했으나, 중국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 투자 행위에 대한 부적절한 간섭, 이득에 대한 합법적인 이윤의 환수 보장 미흡 등의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중국기업의 반발과 북한 당국의 비일관적인 대응이 이어졌다. 수입품 중심이 된 장마당의 확산과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의 확산 등 시장경제의 성향을 가진 변화가 일어났으나, 북한 당국의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사회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간 것이다.

그러나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사회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분업체제 확산으로 인한 시장화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북한이 상실했던 북한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북·중 관계에 있어 중국이 대북 투자의 선제조건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북한의 제도 및 법령 개설 및 개선을 요구하였고 이에 북한이 중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다양한 법령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법과 제도도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¹²⁰⁾ 또 중국이 무역결재 원활화와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북한 내 금융조직을 확산시켰고, 북한 당국이 이를 인정하고 일부 차용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화를 수용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7·1 조치로 장마당 내 소비재 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소비재의 시장화가 이루어졌고, 2015년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자 재산몰수 금지와 토지이용권 거래 허용을 법제화한 것으로 보아 생산수단의 부분 시장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고려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에는 경제개발특구를 지정하였다. 그리고 「대외경제계약법」, 「대외경제중재법」, 「토지임대법」, 「대외민사관계법」, 「외국인투자은행법」 등 외자유치 및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북·중 무역과 경제협력사업의 확대는 북한 내 시장 활성화, 제도 개선, 외부사회 노출 확대로 이어지면서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 개혁·개방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20) 현지조사 내용을 토대로 작성. 현지조사 결과, 제도 보안을 위해 북한 관료와 학자들이 중국에 파견되어 다른 국가의 법령과 제도를 배우는 형태의 연수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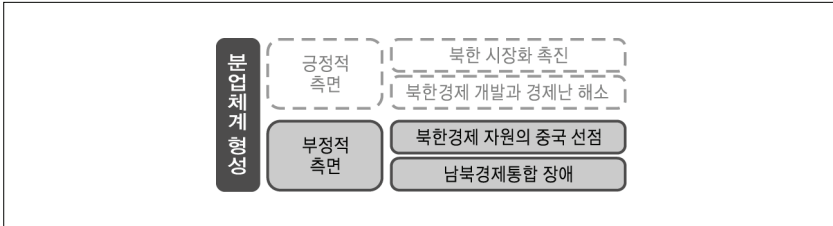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 북·중 분업체계의 심화는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남북의 경제격차를 줄이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중국에서 반입된 수입품은 북한의 경제난과 재화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2004년 중국 자본의 북한광산 투자와 2012년 북한 노동자의 동북 3성 파견은 외화벌이와 북한 주민의 고용 확대로 이어져 북한 주민의 소득 향상과 수입품에 대한 소비 확대로 이어졌다.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졌고 이는 남북의 경제와 소득격차 완화에 기여하였다.

나. 북·중 분업체계 형성의 부정적 측면

북·중 분업체계의 심화는 북한경제의 외부 경제에 대한 의존도 증대, 즉 중국경제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의미한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조치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러 경제제재로 북한의 주변국 중 안정적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외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해 중국을 활용하면서 북한 지하자원과 기반시설 개발, 상품유통, 운수산업 등의 중국 선점이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상승하였고, 한국의 대북 영향력은 축소되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 강화는 북한과 중국 모두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 측 요인에 의하여 심화되고 있다. 중국 동북 지역의 인건비 상승과 노동인력 공동화 현상, 북한 노동자의 높은 생산성과 안정적 고용 등의 이유로 노동집약적인 생산공정 분야에 북한 노동자

그림 6-2. 분업체계 형성의 부정적 측면



자료: 저자 작성.

의 고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나아가 노동집약적인 생산 공정이 위탁가공을 위해 북한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북한의 접경지역이 동북 3성의 산업 문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성장하면서 동북지역 산업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제조업의 경우, 북·중 분업체계를 통해 북한의 북부지역이 중국 동북지역의 배후 생산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의 에너지 조달 문제만 해결된다면, 중국 동북지역의 오염유발 산업(섬유 염색, 피혁, 보석가공)이 북한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지린성은 해상항구 확보의 경우, 북한 나진항과의 연계가 절실하여 나진항과 중국 훈춘의 도로 확충과 철도 연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나진항 인근에 조중공동관리구역을 설치하여 위탁가공 확충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 일련의 북·중 분업체계 심화는 북한 북부지역에 대한 중국의 선점, 중국경제와의 결속 강화를 의미하는 만큼 해당 지역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다.

북한의 동북 3성과의 분업체계 심화는 북한의 접경지역에 대한 주권은 북한이 갖되, 해당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주도권은 중국이 갖는 것

을 의미한다. 추후 남북경제통합 혹은 통일 시 중국이 기존에 북한과 협력 중인 각종 사업은 추진이나 보류, 성패 여부에 상관없이 중국이 우선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기존에 북한과 중국이 논의 중인 사업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업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는 남북경제통합과 통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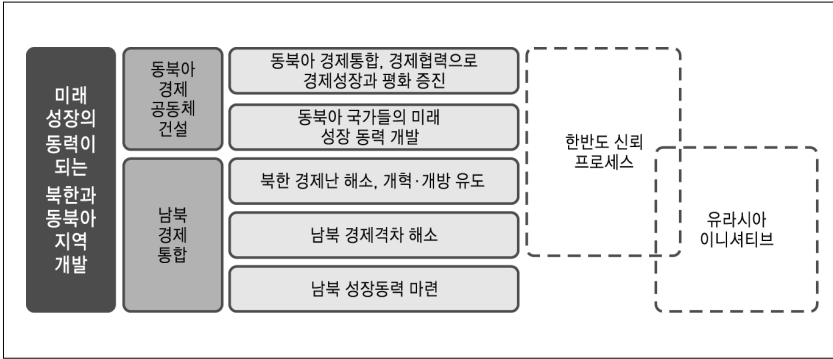
북·중 분업체계의 심화는 남북경제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무역을 제외한 북·중 경제협력의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경우, 북한의 남부지역은 한국과 협력하고, 북한의 북부지역은 중국과 협력하여 개발한다는 ‘남남북중(南南北中)’의 북한 개발구도가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항구적으로 남북경제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북한과 밀접한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이 주요 파트너가 되어 북한의 남부지역 개발을 주도하는 한편, 북한의 북부지역 개발에도 다자협력의 틀에서 참여하여 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남북경제통합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3. 정책제언

북·중 경제협력 심화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시장화를 야기하고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남북 경제격차를 축소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북한의 경제자원을 중국이 선점하여 남북경제통합에 장애가 되는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중 분업체계를 활용하는 정책적 목표로 [그림 6-3]을 제안한다. 먼저

그림 6-3. 북·중 분업체계 활용의 정책적 목표



자료: 저자 작성.

북한과 동북아지역 개발은 미래세대의 경제성장의 동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과 함께 남북경제통합을 통해 동북아 경제권에 속한 모든 국가가 상생하는 경제 개발을 이룩하고 남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고 구상하였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은 동북아 경제통합과 경제협력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평화를 증진하고, 동북아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경제통합은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하며, 남북의 경제격차를 줄이고, 남북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남북경제통합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이런 방침 속에서 북·중 경제협력 심화는 남북경제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이를 잘 활용하여 이번 정부가 목적인 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과 남북경제통합의 핵심은 북한의 변화를 통해 동북아의 경제성장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있다. 북·중 분업체계를 분석하는 핵심도 북·중 분업체계 기저에 있는 다양한 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과 남북경제통합을 이룩하자는 것에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불리한 상황이다. 먼저 동북아에는 다양한 양자·다자 제재조치가 있다. 북한을 연계한 다자 혹은 양자의 경제협력에서는 대북 제재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 현재 한국은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대러 제재와의 연계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규모나 투자여력, 기술수준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중국과 차별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적인 분야에서 수익률이 매우 낮아 투자의 위험(risk)을 분담하거나, 안보적 측면에서 특정국이 양자협력보다는 다자 협력을 선호하는 분야 외에는 우리가 중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다. 특히 협력분야가 국내가 아닌 동북아지역이고 북한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취약점의 영향력은 더욱 큰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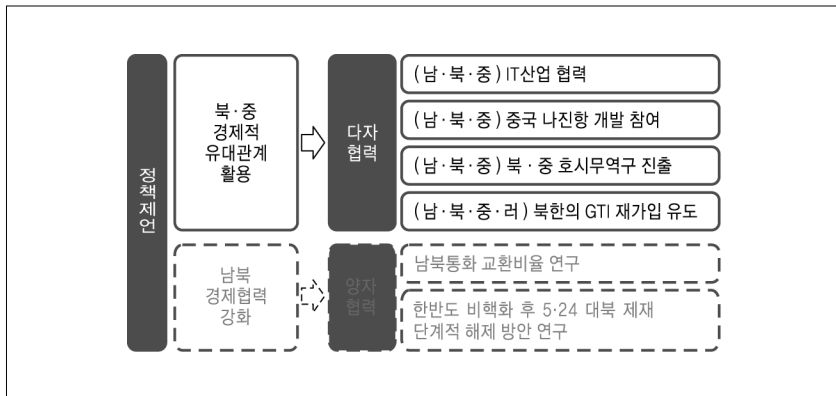
이런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다자협력과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가. 다자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취지에 맞게 북·중의 밀접한 경제관계를 활용하여 대북 경제협력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남·북·중의 다자적 틀

에서 경제협력이 가능한 것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중의 교역환경이 악화되면서 북한이 무역 외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하나, 중국 중앙정부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중국 지방정부나 민간 차원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나서서 중국 중앙정부를 설득한다면 남·북·중 다자적 틀에서 경제협력이 실현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이다.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중 간 밀접한 경제협력으로 북한의 노동인력이 접경지역에 다수 파견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국 동북지역의 지방정부들도 해외투자자본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싶어 하는 만큼, 남·북·중 협력은 중국 동북 2성의 토지와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한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6-4 참고).

그림 6-4. 다자협력 방안



자료: 저자 작성.

먼저 남·북·중 IT 산업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린성 훈춘의 국제 공업지구에 한류를 활용한 애니메이션·게임 분야의 IT 산업협력을 시도하는 방안이다. 지린성 훈춘에 한·중이 함께 IT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북한 인력을 활용하여 IT 산업 중 노동집약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다. IT 분야는 초기 투자비용이 30만 달러 내외로 저렴하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협력 추진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남·북·중 다자협력사업으로 나진항 개발사업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 나진지역은 북·중 분업체계가 발달한 지역 중 하나로 이미 ‘나선경제지대 조·중 공동개발 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공동사업위원회’가 발족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3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중국 훈춘시가 항구 개발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곳이나,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 지역의 발전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 특히 2014년부터 북한이 나선 개발을 중국 위주로 하던 것에서 벗어나 러시아와의 협력을 본격화하면서, 나진항 개발이 중국의 기대와 달리 저조한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 개발이 저조한 상황을 한국이 참여하여 반전시킬 수 있다면, 중국도 한국의 나진항 개발 참여를 거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만 나진항의 시설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먼저 훈춘시가 나진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훈춘·나진·상하이 물류 노선 개발에 한국기업이 참여하여 해당 물류 노선의 물동량을 늘려가고, 향후 제반환경이 변화하면 나진항의 시설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최근 길림성의 석탄, 수산물, 목재 등의 원자재를 중국 남부 시장에 공급하는 훈춘·나진·상하이 컨테이너 화물운수 정기노선이 취항하였다.¹²¹⁾

그러나 훈춘 → 나진 → 상하이 노선은 원자재 화물 운송은 원활한 반면, 상하이 → 나진 → 훈춘 노선은 길림성 수요 부족, 중국 당국의 정책적 허용 미흡 등으로 수익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하이 → 훈춘 노선이 화물 부족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한·중 물동량의 일부를 상하이 → 부산 → 나진 → 훈춘으로 바꾸고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기존의 상하이 → 나진 → 훈춘 노선의 경제성 부족 문제 해결과 부산항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중 다자협력사업으로 중국 단둥의 북·중 호시무역구 진출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호시무역구는 역시 제3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북·중 분업체계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중국 랴오닝성의 성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북·중 무역의 활성화보다는 중국의 대북 수출 활성화를 통해 중국 랴오닝성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업체계 활성화의 동인이 북한보다는 중국에 있는 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 사업초기이기는 하나 북한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여 호시무역구가 성대한 출발과는 달리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기업이 이 지역에 진출한다면, 부실화를 우려하는 중국의 염려를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경제협력의 접점을 넓히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다만 북·중 호시무역구는 5·24 대북 제재조치 등으로 인한 북·중 무역 증가와 중국을 매개로 한 우회무역 증가로 단기적인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대규모보다는 중·소규모의 업체가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

121) 『中 연변 훈춘, 북·러시아 연결 무역·관광거점 급부상』(2015. 8. 7, Online, 검색일: 2015. 10. 21).

해 보인다. 개념적으로 남한의 북·중 호시무역구 진출은 남한의 면세품 판매상점을 중국에 열어 북한과 중국인을 상대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호시무역구 진출을 통해 북한이 남 → 중 → 북의 우회무역을 통해 소비하고 있는 한국산 물품의 대북 수출을 증대하는 한편 화장품, 유아용품 등 최근 중국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산 물품의 중국 내 판매 증가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중 분업체계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으나, 남·북·중·러 다자협력사업으로 북한의 동북아 경제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6년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GTI에 북한의 재가입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2016년 GTI 의장국인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북한의 GTI 재가입 유도에 유리한 상황이다. 북한의 재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GTI의 하위 협의체인 연구기관협의회, 농업분과를 참관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GTI는 AIIB의 동북아 지역 프로젝트 추진기관(project implementation unit)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AIIB의 대북 투자 이행을 위해서는 북한의 GTI 참여가 긴요함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GTI에 가입할 경우, GTI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 및 기술 교육이 가능해지며, 이는 북한의 국제기구(AIIB, IMF, World Bank) 가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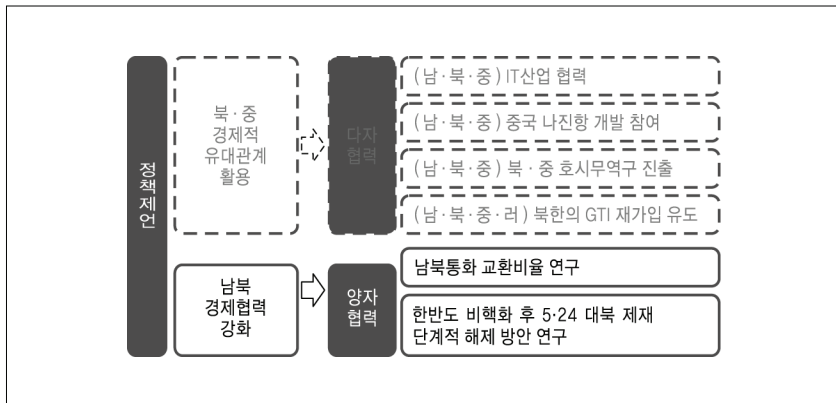
나. 남북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제언

북·중 분업체계와는 별개로 남북 분업체제도 형성·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북한과 동북아 국가 간 신뢰형성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동

북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자협력의 틀과 함께 남북경제협력도 병행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경제통합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다자협력이 북한 주변국과 북한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활용하여 북한 개발의 불안정성(risk)을 낮추고 북한 북부지역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면, 남북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남북경제통합을 촉진하는 한편, 이를 발판으로 다자협력의 주도권을 확충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5·24 대북 제재조치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 강화를 시행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이에 앞의 다자협력과 방안을 실질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한 것과는 달리, 향후 남북 분업체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만, 당장은 남한 독자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그림 6-5]와 같이 제안한다.

그림 6-5. 남북경제협력 강화 방안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에서는 남북 분업체계의 형성·발전을 위하여 기존의 남북경제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것 외에 새로운 분야의 남북경제협력 분야로 남북 통화 교환비율 제정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남북 통화 교환비율은 현재 유일한 남북 분업체계 형성의 대표 모델인 개성공단에서 남북상점을 열고, 이들 상점에서 시범적으로 재정된 남북통화 교환비율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도록 해보는 것이다. 이는 남북 분업체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남북통화 교환비율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통일 이후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재 북한에는 외화통용이 확산되면서 북한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환율 외에 장마당에서 사용되는 시장환율이 존재하고 있고, 위안화와 북한 원화 간에도 환율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에서도 남북 분업체계 형성 차원에서 통일 이전에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남북통화 교환이 가능한지, 또 교환한다면 어떤 비율로 제정하여야 하는지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성공단과 같은 한정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남북통화의 교환비율을 제정하고 사용해봄으로써 향후 전면적인 통화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남북 분업체계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후 5·24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5·24 대북 제재 해제는 2006년에 시행된 일본의 대북 제재와 연계한 검토도 필요하다. 일본이 한국보다 빠르게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하였을 경우 남북 분업체계의 규모는 북·일, 북·중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가 남북교류와 북·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함께 반대로 한국이

일본보다 빠르게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하였을 경우 남북교류와 북·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대북 제재는 단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해제될 수 있으므로, 이들 간의 영향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는 향후 한반도 비핵화 후 남북경제통합을 위해 5·24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할 때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남북 분업체계를 형성하는 주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강택구, 조성재 외. 2013. 「주요산업의 중국 내 동북아국가들의 경쟁구조 분석, [제2권] 중국의 환경 및 노동문제와 업계의 대응」. 연구보고서 2013-671. 산업연구원.
- 김광일. 2005. 「중국의 對北투자 熱氣, 그 의미는?」. 한국무역진흥공사.
- 김부용, 이상훈, 임민경. 2012. 「중국의 노무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환발해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12-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영운. 2010. 「中北 경제적 밀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북정책의 대안 Koloflo 칼럼』. 남북물류포럼.
- 김화섭, 이진면, 리소영. 2013. 「중국 가공무역의 구조변화와 정책전개방향」. 정책자료 2013-190. 산업연구원.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4. 「중국 동부 5성의 북한 광산물 무역 분석」. 『남북협회 북한자원 보고서』, 14-No3호. 남북협력지원협회.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자원개발팀. 2015. 「2015년 상반기 북·중 광산물 무역동향」. 『남북협회 북한자원 보고서』, 15-N-04호. 남북협력지원협회.
- 남진욱. 2015. 「북중무역 통계의 특이성」.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 박건일. 2006. 「북·중 관계 어떻게 봐야 하나」. 『통일시대』, 3월호.
- 법무부 북한연구지원단. 2013. 『북한실태 연구 보고』. 법무부.
- 손수운. 2007. 「북중변경무역 향후 전망과 시사점」. Global Business Report 07-02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윤병수. 2012. 「최근 북·중 경제협력 동향과 전망」. 『하나 북한정보시리즈』, 11호. 하나금융그룹.
- 윤병수, 동애영. 2010.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가 남북경제협력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시리즈』, 제3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윤승현. 2010. 「최근 북중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평화재단 제38차 전문가포럼. 평화재단. (4월 20일)

- 윤인주. 2015. 「5·24 조치 이후 남·북·중 간 수산물교역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2월호. 한국개발연구원.
- 이교은. 2014. 「중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현황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T 산업경제』, 11월호. 산업경제연구원.
- 이교덕, 김병로, 박병광. 2014.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통일연구원.
- 이 석. 2008. 「북한무역에 대한 쟁점 분석: 북중, 북일, 남북교역」. 『북한무역의 무역구조 분석과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2008-05. 한국개발연구원.
- _____. 2010.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남북교역, 북중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 『KDI 경제리뷰』, 5월호. 한국개발연구원.
- _____. 2013a. 「5.24 조치 이후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의 변화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_____. 2013b. 「북중무역의 결정요인: 무역통계와 서베이 데이터의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이석기, 양문수, 정은이. 2014. 『북한 시장실태 분석』. 산업연구원.
- 이영훈. 2011. 「중국의 대북경제적 영향력 분석」. 『통일경제』, 1호. 현대경제연구원.
- 이재호, 고일동, 김상기. 2010. 『동북아 분업구조하에서의 북중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 이종운, 홍이경. 2013.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연구자료 13-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민경, 여지나. 2013.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유턴유형화 및 유턴정책 개선방안』. 연구자료 13-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수훈, 김준영. 2015. 『중국 뉴노멀시대 북·중협력구조의 구조적 변화』. 오늘의 세계경제 15-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조복. 2007. 「중국의 경제발전현황과 전망 그리고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호열, 최장호, 방호경, 임소정, 김준영, 주센평, 진화립, 정은이. 2015.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승호. 2014. 「북중무역: 집계 데이터와 기업수준 데이터를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학위논문.

- 정우진. 2014. 『북한 광물자원 개발 · 가공 분야의 투자 잠재력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14-20. 에너지경제연구원.
- 정은이. 2015. 『5·24 조치가 북·중 무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27권 1호(통권 제63호), pp. 101~130. 평화문제연구소.
- 정은이, 박종철. 2014. 『중국의 대북한 무역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6권 2호. 평화문제연구소.
- 정지현, 김홍원. 2014. 『중국 지역경제 변화와 새로운 한·중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동호, 이상근. 2008. 『북한경제 중국예측론의 비판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제12권 3호, pp. 363~394.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조명철, 양문수, 박순찬, 정승호. 2005.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5-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선양 총영사관. 2011. 『동북3성 지역 석유자원현황』. 주선양총영사관.
- 诸建芳. 2014. 『부동산 이후 시대의 중국경제』. 2014년 제5회 한중 경제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월 13일)
- 중국해관. 2014. 『중국통상구연감』.
- 한국개발연구원. 2010. 『최근 북한경제와 남북경제협력: 평가와 전망』. 『KDI 북한경제 리뷰』,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 허진석. 2015. 『중국 쇼크로 철강원료 저가격 시대 초장기화 가능성』. 『POSRI 보고서』. 포스코경영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소. 2009.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파급영향: 북중 경제협력 5대 특징과 시사점』. 『경제주평: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09-43(통권 372호). 현대경제연구소.
- 홍익표. 2006. 『북·중 변경무역의 실태분석 및 향후 전망』. 『통일정책연구』, 15권 2호.
- _____. 2010. 『북한 경공업 현황 및 향후 발전과제』. 『수은북한경제』, 봄호. 한국수출입은행.
- KIEP. 2013. 『중국의 과잉설비 문제 현황과 대책』.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제16권 10호.

KOTRA. 2012. 『북한 비즈니스 어떤 외국 회사가 하나』. KOTRA 자료 12-035.
KOTRA.

[영문자료]

- Balassa, Bela. 1965. "Trade Liberalis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1." *The Manchester School*, Vol. 33, No. 2, pp. 99-123.
- Gereffi, Gray and Miguel Korzeniewicz. 1994. "The Organization of Buyer-Driven Global Commodity Chains: How US Retailer shape Overseas Production Networks." *Commodity Chains and Global Capitalism*, pp. 95-122. Praeger Publishers.
- Lee, Jongkyu. 2015. 6. 5. "Decline in the DPRK's Anthracite Export to China: Causes and Implications." *KDI Focus*. KDI.
- Ng, Francis and Alexander Yeats. 2001. "*Production sharing in East Asia: who does what for whom, and why?*" pp. 63-109. Springer US.
- UN. 1999. "World Investment Report 1999: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Challenge of Development."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중문자료]

- 国务院办公厅. 2013. http://www.gov.cn/zwggk/2013-11/28/content_2536862.htm
(검색일: 2015. 6. 17).
- _____. 2014.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11/19/content_9222.htm
(검색일: 2015. 6. 17).
- 李克强. 2010. 在改革开放进程中深入实施扩大内需战略, 『求是』.
- 税委会. 2014.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49564/info720982.htm>
(검색일: 2015. 6. 17).
- 『中国口岸年鉴』. 2012, 2013, 2014. 각 연도.
- 辽宁省人民政府. 2015. <http://www.ln.gov.cn/zfxx/jrln/wzxw/201507/t20150711>

_1730058.html?from=timeline&isappinstalled=0(검색일: 2015. 9. 10).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2015. 『2014年度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hrss.gov.cn/SYrlzyhshbzb/dongtaixinwen/buneyaowen/201505/t20150528_162040.htm(검색일: 2015. 8. 4).

新华网. 2012. 十八大报告. http://www.xj.xinhuanet.com/2012-11/19/c_113722546_8.htm

(검색일: 2015. 6. 12).

[북한자료]

손홍도. 2013.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반적 분석』. 『경제연구』, 3호 주체 10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전충혁. 2013.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지방예산수입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중요방도』. 『경제연구』, 4호 주체10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차금순. 2015.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망계획을 세우고 실현하는 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2호 주체10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2013. 『노동신문』. (4월 1일)

『당 창건 65돌을 맞은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의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 2010. 『노동신문』. (1월 1일)

『사랑하라 우리의 것을』. 2015. 『노동신문』. (3월 30일)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 연구 완성을』. 2013. 『조선신보』. (5월 15일)

[신문기사]

『<5·24 조치 5년> ③ 북한의 대중의존도 급격히 커져』. 2015. 『연합뉴스』. (5월 20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9/0200000000AKR20150519187000083.HTML?input=1195m>(검색일: 2015. 6. 7).

『‘북한, 중국 공동 어로 협약’ 정부 대책 촉구』. 2004. 『연합뉴스』. (9월 26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

d=0000754747(검색일: 2015. 10. 20).

- 「北, 중코버스가 관찬다?」 대중교통 마비 속 시설 장거리 버스 활개, 2015. 『국민일보』. (5월 3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403535&code=61111111&cp=nv>(검색일: 2015. 10. 20).
- 「中 기업들, 북한 투자 열기 높아」. 2004. 『통일뉴스』. (6월 29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235>(검색일: 2015. 10. 20).
- 「中 여행업계, 북 관광특수 부문 기대감」. 2008. 『데일리NK』. (9월 4일)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9000&num=61139>(검색일: 2015. 10. 21).
- 「中 연변 훈춘, 북·러시아 연결 무역·관광거점 급부상」. 2015. 『연합뉴스』. (8월 7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7/0200000000AKR20150807070200097.HTML>(검색일: 2015. 10. 21).
- 「中 운수업체 7억위안 대북 투자 계획」. 2004. 『연합뉴스』. (11월 28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15>(검색일: 2015. 10. 20).
- 「中 인력난 해소, 北 외화벌이로 양측 이해 맞아」. 2011. 『연합뉴스』. (12월 22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433299>(검색일: 2015. 7. 13).
- 「"北인력 145명 中투먼 섬유공장 근무시작"」. 2012. 『국제신문』. (7월 30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20730.99002202524>(검색일: 2015. 7. 14).
- 「中, 대북 임가공품 통관 절차 간소화」. 2014. 『연합뉴스』. (5월 24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5/29/0200000000AKR20140529043500014.HTML?from=search>(검색일: 2015. 7. 13).
- 「中, 북한 근로자 수만명 수입」. 2012. 『연합뉴스』. (7월 2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02/0200000000AKR20120702104600075.HTML>(검색일: 2015. 7. 13).
- 「中, 자국 관광객 방북절차 간소화」. 2007. 『연합뉴스』. (12월 20일)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4%B8%AD%2C+%EC>

%9E%90%EA%B5%AD+%EA%B4%80%EA%B4%91%EA%B0%9D+%EB%B0%A9%EB%B6%81%EC%A0%88%EC%B0%A8+%EA%B0%84%EC%86%8C%ED%99%94&sm=top_hy&fbm=0&ie=utf8&url=http%3A%2F%2Fblog.joins.com%2Fnhao9292%2F8883848&ucs=jgT4Rgwy4ySa(검색일: 2015. 10. 25).

- 「北 근로자 고용, 北中 경제협력 새로운 모델」. 2010. 『연합뉴스』. (11월 10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754336>(검색일: 2015. 10. 25).
- 「北 종합시장 거래상품 80% 중국산」. 2005. 『데일리NK』. (9월 30일) <http://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9000&num=12627>(검색일: 2015. 10. 24).
- 「北, 中 무단장에 여성노동자 2천명 파견 추진」. 2011. 『연합뉴스』. (1월 19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1/19/0200000000AKR20110119190900097.HTML>(검색일: 2015. 10. 24).
- 「北, 軍병력 30만명 경제 부문에 배치하기로」. 2013. 『조선일보』. (7월 10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10/2013071000238.html(검색일: 2015. 7. 13).
- 「北, 지방개발에 속도내나… ‘자체 외화벌이’ 강조」. 2013. 『연합뉴스』. (11월 10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09/0200000000AKR20131109047100014.HTML?from=search>(검색일: 2015. 7. 13).
- 「北·中 경제협력 가속… 南北은 정체」. 2005. 『통일뉴스』. (5월 29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06>(검색일: 2015. 5. 10).
- 「朝, 원산-금강산 국제 관광지대 개발에 박차」. 2015. 『홍콩강신문』. (6월 3일) <http://kr.cntv.cn/2015/06/03/VIDE1433300043076475.shtml>(검색일: 2015. 10. 21).
- 「고난의 행군 종료(송년특집)」. 2000. 『연합뉴스』. (12월 13일) www.premiumnews.co.kr(검색일: 2015. 5. 4).
- 「고도성장 신흥국, 원자재 ‘블랙홀’ 됐다」. 2011. 『이데일리 뉴스』. (5월 11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31&newsid=01095526596247936&DCD=A00803&OutLnkChk=Y>(검색일: 2015. 6. 15).

- 『류인산 “전통적 북중우호 추진, 김정은과 광범위한 합의”』. 2015. 『연합뉴스』. (10월 10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0/0200000000AKR20151010056500083.HTML>(검색일: 2015. 10. 11).
- 『북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 의미와 배경』. 2002. 『통일뉴스』. (9월 19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27>(검색일: 2015. 7. 20).
- 『북 휘발유 값도 폭락』. 2015. 『자유아시아방송』. (2월 11일)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gasprice-02112015091938.html(검색일: 2015. 5. 20).
- 『북(北)·중(中) 국경 지역서 무역이 성행하는 이유는?』. 2009. 『조선일보』. (11월 20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19/2009111967012.html(검색일: 2015. 5. 20).
- 『북, ‘백두산 관광지구’ 본격 개발』. 2015. 『자유아시아방송』. (6월 4일)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tourregion-06042015102952.html(검색일: 2015. 10. 21).
- 『북, 광산분야 외국투자 유치 적극 모색』. 2002. 『연합뉴스』. (2월 7일) <http://www.premiumnews.co.kr>(검색일: 2015. 10. 15).
- 『북, 자재부족으로 건설사업 부진』. 2015. 『자유아시아방송』. (6월 11일)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construction-06112015094919.html(검색일: 2015. 9. 20).
- 『북, 철길주변 아파트 건설 중단』. 2014. 『자유아시아방송』. (5월 27일)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apartment-05272015093114.html(검색일: 2015. 9. 20).
- 『북, 휘발유나 디젤유 가격 변동 없어』. 2014. 『자유아시아방송』. (7월 14일)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nk_now/fe-ms-07142014104259.html(검색일: 2015. 5. 20).
- 『북·중, 경제협력 방식 변화 조짐』. 2004. 『연합뉴스』. (6월 1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57>(검색일: 2015. 5. 10).
- 『북한 ‘국산품 애용’ 강조… 특권층은 한국산 선호』. 2015. 『자유아시아방송』. (5월 16일)

-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2770829.html>(검색일: 2015. 9. 20).
- 「북한 고려항공, 4년 연속 세계 최악 항공사」. 2015. 『연합뉴스』. (8월 28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8/0200000000AKR20150828054000014.HTML>(검색일: 2015. 10. 20).
- 「북한 나선특구 중국인 상대 부동산 개발 ‘러시’」. 2013. 『연합뉴스』. (12월 13일)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12/12/0601400100AKR20131212100400097.HTML>(검색일: 2015. 7. 14)
- 「북한, 광산개발권 대가로 기반시설 건설 추진」. 2013. 『연합뉴스』. (1월 7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07/0200000000AKR20130107140300097.HTML>(검색일: 2015. 10. 21).
- 「북한, 상업·유통 부문 자율성 강화 추진」. 2013. 『연합뉴스』. (1월 10일)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5/31/0511000000AKR20130531211100014.HTML>(검색일: 2015. 7. 14).
- 「정부 “中, 北에 50만t 원유 지원 추정… 예년 수준”」. 2015. 『연합뉴스』. (9월 17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7/0200000000AKR20150917057451043.HTML>(검색일: 2015. 5. 20).
- 「조선, 중국 조선족 기업인 150명 금강산으로 초청」. 2015. 『흑룡강신문』. (4월 22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1/0200000000AKR20150421089100371.HTML>(검색일: 2015. 10. 21).
- 「중, 북한시장 공략 장기계획」. 2005. 『연합뉴스』. (5월 31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37>(검색일: 2015. 10. 21).
- 「중국 대북 원유수출, 사상 첫 5개월 연속 ‘제로’」. 2014. 『연합뉴스』. (6월 26일)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6/26/0511000000AKR20140626154500083.HTML>(검색일: 2015. 5. 20).
- 「중국 소재 북한전문 여행사, 백두산 마라톤 관광상품 출시」. 2015. 『미국의 소리』. (6월 11일) <http://m.voakorea.com/a/2896942.html>(검색일: 2015. 10. 17).
- 「중국 어선, 북한수역조업 현실화 우려」. 2001. 『연합뉴스』. (12월 17일) www.premiumnews.co.kr(검색일: 2015. 10. 15).

- 『중국은지투자유한회사 장백현서 조선손님 회견』. 2015. 『길림신문』. (5월 8일) http://kr.chinajilin.com.cn/econ/content/2015-05/08/content_155556.htm(검색일: 2015. 10. 17).
- 『카타르서 해고된 북한 노동자 90명 추방』. 2015. 『미국의 소리』. (5월 22일)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2781327.html>(검색일: 2015. 10. 17).

[온라인 자료]

- 강철환. 2015. 『포커스: 김정은 시대 이후 확대되는 해외 인력파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http://webzine.nuac.go.kr/tongil/sub.php?number=729>(검색일: 2015. 10. 5).
- 遊珊瑚. 2014.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2014. 『인민화보사 한국어 잡지』. <http://www.chinacore.com/per.php?class=453>(검색일: 2015. 5. 27).
- 윤덕민. 2006.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가가 되고 말 것인가, 미래연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41> 기고문』. 『프레시안』(3월 24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8986>(검색일: 2015. 9. 24).
- 중국국가통계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검색일: 2015. 8. 16).
-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31>(검색일: 2015. 9. 1).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검색일: 2015. 8. 4, 9. 10).
- 한국은행 북한통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3List.jsp?vwcd=MT_BUKHAN&parmTabId=M_03_02#SubCont(검색일: 2015. 9. 1).
- Bermudez, Joseph S. Jr. 2015. “North Korea’s Ponghwa Chemical Factory”. <http://38north.org/2015/07/jbermudez071015/>(검색일: 2015. 7. 29).
- KOTRA. 2012. 『중국기업의 북한진출 현황』. <http://www.sonosa.or.kr/newsletter/201301/2.pdf>(검색일: 2015. 10. 15).
- KOTRA 중국사업단. 각 연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 http://www.kotra.or.kr/kh/about/KHKICP020M.html?MENU_CD=F0138&TOP_MENU_CD=F0104&LEFT_MENU_CD=F0138&PARENT_MENU_CD=F0117&ARTICLE_ID=3005951(검색일: 2015. 7. 7, 8. 2).

Ministry of Commerc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Statistical Bulletin of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http://english.mofcom.gov.cn/article/statistic/foreigninvestment/?2>(검색일: 2015. 9. 1).

Oxford Economics. <http://www.oxfordeconomics.com/>(검색일: 2015. 9. 1).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검색일: 2015. 7. 7, 9. 1).

Stahler, Kevin. 2015. "How has the commodity bust affected North Korea's Trade Balance?" North Korea: Witness to Transformation(September 1). <http://blogs.piie.com/nk/?p=13778>(검색일: 2015. 9. 1).

[인터뷰 자료]

관련기관 담당자 면담(비공개 자료). 2015년 3월~2015년 10월까지 중국 현지에서 대북 사업 관련 종사자 면담. 구체적인 조사지역과 인터뷰 대상자는 신변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저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기타]

중국해관 통계(내부 자료).
CEIC DB(검색일: 2015. 8. 17).

부록



부록. 지리성 북·중 접경지역의 주요 통상구(口岸) 물류·인원·교통수단 이동현황

주요 사항		훈춘 취안허(圈河) 통상구			투먼(图们) 통상구			카이산툰(开山屯) 통상구			샤틀즈(沙坨子) 통상구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도로	수출(만 톤)	5.43	13.13	14.26	8.25	4.44	3.62	0.06	0.37	1.24	0.31	1.25	0.76
	수입(만 톤)	14.20	6.60	9.10	4.70	8.72	8.96	0.27	0.67	0.47	0.97	0.36	0.61
도로	이동인원 출경(만 명)	13.10	17.92	18.40	1.28	1.47	1.4	0.13	0.37	0.25	0.20	0.24	0.24
	이동인원 인경(만 명)	13.01	17.82	18.51	1.36	1.48	1.4	0.13	0.37	0.25	0.20	0.24	0.24
도로	교통수단 출경	40,309	51,377	59,092	4,982	5,663	5,136	505	1,306	1,279	846	1,045	808
	교통수단 인경	42,816	50,795	58,910	4,883	5,643	5,097	505	1,306	1,280	845	1,045	808
합계	수출입 합계(만 톤)	19.63	19.73	23.36	12.95	13.16	12.58	0.33	1.00	1.71	1.28	1.61	1.37
	이동인원 출입합계(만 명)	26.11	35.74	36.91	2.64	2.95	2.8	0.26	0.74	0.50	0.40	0.48	0.48
합계	교통수단 출입합계	83,125	102,172	118,002	9,865	11,306	10,233	1,010	2,612	2,559	1,691	2,090	1,616
	전년대비 수출입 증감률(%)	61.50	0.50	18.40	73.00	2.00	-4.41	-73.00	222.00	71.00	-49.7	25.3	-14.91
합계	전년대비 이동인원 증감률(%)	67.20	36.90	10.20	-10.87	14.16	-5.51	-59.00	194.00	-33.20	-50.7	23.1	1.30
	전년대비 도로 교통수단 증감률(%)	75.60	22.90	17.80	18.55	14.60	-9.49	-66.00	258.00	2.00	-60.8	23.6	-22.7

자료: 中国口岸年鉴(2012~2014)을 참고하여 작성.

부록 표 2. 싼허(三合), 난핑(南坪), 구청리(古城理) 통상구 물류·인원·교통수단 이동 현황

주요 사항		싼허(三合) 통상구			난핑(南坪) 통상구			구청리(古城理) 통상구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도로	수출(만 톤)	9,60	17,42	3,04	41,73	2,87	4,73	9,23	0,46	0,41
	수입(만 톤)	5,23	3,73	15,59	2,32	18,67	63,28	0,30	8,14	6,67
	이동인원 출경(만 명)	1,21	1,21	0,99	1,50	0,84	2,09	0,54	0,53	0,37
	이동인원 입경(만 명)	1,46	1,21	0,98	1,50	0,76	2,09	0,55	0,48	0,36
	교통수단 출경	6,722	6,527	5,859	12,437	7,196	17,968	3,696	3,571	2,596
	교통수단 입경	6,674	6,544	5,894	12,437	7,214	17,968	3,696	3,571	2,594
도로	수출인원 합계(만 톤)	14,83	21,15	18,63	44,05	21,53	68,01	9,53	8,60	7,08
	이동인원 출입합계(만 명)	2,67	2,42	1,97	3,00	1,60	4,18	1,09	1,01	0,73
	교통수단 출입합계	13,396	13,071	11,753	24,874	14,410	35,936	7,392	7,142	5,190
	전년대비 수출입 증감률(%)	197	43,00	-11,91	-17,00	-51,10	215,88	19,00	-9,60	-22,40
	전년대비 이동인원 증감률(%)	43	-18,00	-18,40	-38,50	-19,00	147,90	-7,50	-7,60	-30,70
	전년대비 도로 교통수단 증감률(%)	73	-2,00	-10,00	-2,70	-42,10	149,10	-11,10	-3,30	-27,30

자료: 中国口岸年鉴(2012~2014)을 참고하여 작성.

부록 표 3. 장바이(长白), 린장(临江), 지안(集安) 통상구 물류·인원·교통수단 이동 현황

주요 사항	장바이(长白) 통상구			린장(临江) 통상구			지안(集安) 통상구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수출(만 톤)	-	4,60	3,50	-	2,20	1,30	-	0,69	2,00
수입(만 톤)	-	10,60	6,70	-	2,30	2,40	-	1,24	4,00
이동인원 출경(만 명)	-	1,08	1,54	-	0,39	0,19	-	0,38	0,40
이동인원 입경(만 명)	-	1,09	1,54	-	0,36	0,19	-	0,42	0,40
교통수단 출경	-	6,418	6,158	-	2,300	700	-	948	1,254
교통수단 입경	-	6,418	6,158	-	2,209	700	-	948	1,256
수출인 합계(만 톤)	-	15,20	10,20	-	4,50	3,70	-	1,93	6,00
이동인원 출입합계(만 명)	-	3,17	3,08	-	0,75	0,38	-	0,80	0,80
교통수단 출입합계	-	12,836	12,316	-	4,509	1,400	-	1,896	2,510
전년대비 수출입 증감률(%)	-	20,00	-32,89	-	0,05	17,68	-	61,20	29,00
전년대비 이동인원 증감률(%)	-	4,10	-2,80	-	5,50	-64,00	-	1,80	-31,60
전년대비 도로 교통수단 증감률(%)	-	2,30	-4,00	-	51,50	-68,00	-	134,10	32,38

자료: 中国口岸年鉴(2012~2014)을 참고하여 작성.

Executive Summary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HOI Jangho, KIM Junyoung, IM So Jeong, and CHOI Yoojeong

From 2002 to 2011 China has maintained an average annual growth of over 9%, and North Korea as a result enjoyed economic stability benefiting from China's growth. In the 2000s North Korea goes beyond overcoming economic difficulties in the 1990s through anthracite and iron ore export, and begins to utilize its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s a tool for its economic growth. Its dependency on Chinese economy quickly intensified due to the internal motivation for North Korea's aspiration of economic growth through expansion of resource exports to China as well as external motivational factor of intranational economic sanctions. However, beginning from 2010, North Korea and China's economic cooperation faced a turning-point. China's economic slowdown induced a structural change in North Korea-China trade since 2012 and led to a new pattern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effect that recently facilitated North Korea and China's economic relations have on North Korean economy and find the implications this has on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For thorough analysi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e defined what exactly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stands for, theorized various factors that create and facilitate this cooperation, and analyzed how changes in trade environment and China's economic policy towards North Korea due to China's

economic slowdown impacts these various factors in terms of North Korea China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The originality of this research is in the data and methodology it adapts. The Chinese customs data from 2010 to 2014, consisted of 8 digit HS code product level list by year, country, import and export, custom districts, as well as customs regime categories enabled us to analyze the qualitative change in North Korea–China trade from simple trade to higher shares of process trade and intermediate goods trade. As for the methodology, we have provided a theoretical framework analyzing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countries and fieldwork results. Our theoretical framework delineates the sectors and incentives where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occurs which is used in our analysis of the North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As for the fieldwork, we tried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research by interviewing people who are indirectly and directly involved in trade and business with North Korea in the Chinese border region.

In chapter 2, we analyzed the intensification and the developing proces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e background of North Korea's resource extraction export structure has a lot to do with China's high level economic growth of over 9% from 2002 to 2011, serving as the world's manufacturing base, vacuuming raw materials to feed its demand. This in turn fueled North Korea's raw material export to China. This led to a steep increase of North Korea's trade with China, and bilateral sanctions initiated by Japan in 2006 and by South Korea in 2010 also played a role in this increase. China's share in North Korea's total trade exceeded 50% in 2005 and reached 90.1% in 2014, and its share of North Korea's total incoming net FDI exceeded 90% after 2008. Such statistics is an indication of the consolid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e assume tha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s created when

the cost of production or consumption domestically is more expensive than the cost of production or consumption out-sourced, using another country's resources, coupled with gradual reduction of border regulations that prohibit cross-border movement of various resources such as labor, capital, merchandise, and technology through international conventions. In this research, we concluded that North Korea and China's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rade is in its mature stage, and direct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business interactions is in the creation stage in the four stages of economic cooperation – formative stage, creation stage, mature stage, and declining stage.

In chapter 3, we explored determining factors that would facilitate North Korea and China's trade in the future. First of all, recently North Korea's exports of anthracite and iron ore to China which were the major export items has shown either stagnant or decreasing trends. Such changes in the previously major items of exports to China is predicted to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s in North Korea and China's economic cooperation.

Along with this trend, China's shift of its economic development methods to domestic-centered policies, businesses' costs are increasing due to increasing wages and social security costs. Specifically, the outflow of young labor in the Northeast China bordering North Korea is occurring in critical levels. In such situation the number of North Korean laborers that are dispatched to the Chinese border and engage in productive activities is predicted to increase.

Moreover, China's Northeast region's small and medium cities are actively engaging in economic cooperative projects with North Korea involving opening up of North Korea's economy as a part of its own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Especially, newly implemented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the new Yalu river bridge, establishment of China-North Korea civilian border mutual trade market, implementation of outbound trade are leading the China-North Korea division of labor.

In the case of North Korea, despite its policy to enhance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in order to maintain legitimacy, the difficulty of the so-called “self-reliant” economy led individual economic actors to rely more on trade with China.

Also, North Korea is also putting effort into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hrough development and usage rights of its natural resources in order to establish production infrastructure as well as expanding trade with China through its rich natural resources. However, underdeveloped investment infrastructure as well as political risks has been obstacles to foreign investment in production infrastructures that need big-scale investment. Therefore we predict that China’s investment will be focused in out-sourced processing trade which does not require a large scale investment.

Also, North Korea is showing active policy underpinnings to expand border area tourism as well as dispatch of its labor in China in order to earn foreign currency. Border area tourism is not a zero sum game and therefore is expected to increase and intensify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labor dispatch can be a threat to the labor market stability of the two countries as well as to the maintenance of the North Korean regim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forecast its future trend.

In chapter 4, we investigated economic cooperation in production, economic cooperation in consumption, economic cooperation in terms of provinces and comparative advantage items in North Korea China trade based on China customs data. We found that indeed there was a structural economic cooperation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irst of all, in terms of customs regimes, during the last 5 years ordinary trade and border trade in both exports and imports continuously increased and decreased a little in 2014. Processing trade continuously increased. In terms of North Korea’s import from China, trade for consumption, which are ordinary

trade and border trade had the biggest shares and in shares of bonded trade and processing trade, which are consisted of transit trades and raw material trade for processing were bigger in terms of North Korea's exports than imports. This indicates that the purposes of North Korea's imports from and exports to China are different.

In term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in consumption, the main items of both countries were being traded, showing a stable trend. In North Korea's import from China, industrial raw materials, construction materials, food products in ordinary trade, grains and household necessities under the category of border trade were mainly trade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production side through processing and assembling trade was also conducted at a regular basis. main products that were imported from China by North Korea under the processing trade category included materials and energy sources required in production such as petroleum oil, rubber, plastic, special fabric, and main products that were exported to China from North Korea included nut products, fish, and clothing. Clothes were not traded as a major product for trade for consumption, but it was one of the main traded item for trade for production categories.

By customs districts, more than 70% North Korea's imports from China goes through Dalian customs district (which includes Dandong). North Korea's exports to China show less concentration in a single channel of entry. This shows that North Korea's imports are mostly executed by land in small amounts while exports mostly by sea in bigger amounts.

By analyzing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between North Korea and the two Northeast Chinese Provinces we were able to find a clear patter of economic cooperation. Dalian's RCA vis-à-vis North Korea was high in raw materials for clothing manufacturing or other fabric materials, as well as nonmetal materials, industrial raw materials and capital goods. North Korea's

RCA vis-à-vis Dalian was high in finished clothing, which indicated a production sharing network in clothing manufacturing in which Dalian supplies North Korea with raw materials and North Korea supplies Dalian with completed clothing products. North Korea's RCA vis-à-vis Changchun was high in raw materials that are used in manufacturing apparel and other daily necessities, daily necessities, food products whereas Changchun's RCA vis-à-vis North Korea was high in local specialties such as Ginseng, vegetables and fruits, and other food products as well as clothing. This indicates a similar production sharing network as in the Dalian case.

In chapter 5, we provide analysi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people who engage in businesses related to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t the North Korea-China border. First, most interviewees agreed that there exists an economic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Specifically, interviewees that were more deeply involved in this cooperation had an easier time understanding and assenting to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Meanwhile,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perspectives among interviewees regarding the China factor as a determinant of the economic cooperation which we discussed in chapter 3. This was due to regional disparities, as well as different businesses the interviewees were engaged in. However, most of them agreed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will expand due to North Korea's cheap and reliable supply of labor to China.

In chapter 6, we analyzed the effect the intensification of North Korea and China's economic cooperation has on North Korea's economy. Positive effects included facilitation of North Korea's marketization, reform and opening up, resolving North Korea's economic difficulty, and economic development. Negative effects were China's preemptive monopoliza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resources, and setbacks 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and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North Korea and China economic cooperation, we suggeste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ripartite cooperative projects among South and North Korea and China, such as IT industrial cooperation, participation in China's Rajin port development plan, entering the North Korea–China civilian border mutual trade market, inducing North Korea's rejoining of GTI.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e suggested that there needs to be more research on exchange rat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urrencies as well as on plans for gradual removal of the 5.24 measures.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목록

■ 2015년

- 15-01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임호열 · 최장호 · 방호경 · 임소정 · 김준영 · 주선펡 · 진화림 · 정은이
- 15-02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 강태수 · 임태훈 · 서현덕 · 강은정
-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최혜린 · 한민수 · 황운중 · 김수빈
- 15-0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한민수 · 서봉규 · 임태훈 · 강은정 · 김영선
- 15-05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박순찬
- 15-06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성한경
- 15-07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 배찬권 · 김영귀 · 금혜윤
-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이승래 · 강준구 · 김혁황 · 박지현 · 이준원 · 이주미
- 15-09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노수연 · 오중혁 · 박진희 · 이한나
- 15-10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 이장규 · 김부용 · 최필수 · 나수엽 · 김영선 · 조고운 · 이효진
- 15-11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 정지현 · 김홍원 · 이승은 · 최지원
- 15-12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 최보영 · 방호경 · 이보람 · 유세별
- 15-13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김준영 · 임소정 · 최유정

- 15-14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이신애
- 15-15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인도 협력방안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 15-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 정지원 · 문진영 · 권 율 · 이주영 · 송지혜
- 15-17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광성일 · 이창수 · 정재완 · 이재호 · 김계국
- 15-18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이민영
- 15-19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동남아 경제협력 전망 / 오윤아 · 나희량 · 이재호 · 신민금 · 신민이
- 15-20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 박영호 · 정지선 · 박현주 · 김예진
- 15-21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 15-22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5-23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 윤여준 · 이 용 · 문성만 · 권혁주
- 15-24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장윤희
- 15-2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 / 제성훈 · 강부균 · 민지영

■ 2014년

-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정형곤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 김병연
-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 · 양다영 · 김수빈 · 이동은
-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 · 이동은 · 편주현

-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김수빈·강삼모
-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금혜윤·유새별·김양희·김한성
-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김민성·송백훈·이창수
- 14-07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강준구·엄준현·이주미
-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김혁황·이준원·박지현
-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박혜리·엄준현·선주연
-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김윤옥·이민영·이성희
-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최보영·이보람·이민영
- 14-12 Post-2015 개발자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권 울·정지선·이주영·송지혜·유애라
-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김규관·이형근·김은지·이신애
-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최필수·나수엽·이효진·이장규·박민숙
- 14-15 중국 신항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박진희·김홍원·이형근·최지원·張博
- 14-16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노수연·정지현·강준구·오종혁·김홍원·이한나
-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윤아·이 용·김유미·박나리·신민금
-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광성일·배찬권·정재완·이재호·신민이
-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용·조충제·최윤정·송영철·이정미

-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 · 한민수 · 김종혁 · 이성희 · 고희재
-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 14-23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채성훈 · 민지영 · 강부균 · Sergey Lukonin
-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 · 김예진 · 장종문 · 권유경

■ 2013년

- 13-01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최낙균 · 김영귀
- 13-02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 이동은 · 양다영 · 강은정 · 박영준
- 13-03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 정 철 · 이준원 · 김봉근 · 전영준
- 13-04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윤덕룡 · 송치영 · 김태준 · 문우식 · 유재원 · 채희을
- 13-05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영귀 · 배찬권 · 금혜윤
- 13-06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 서진교 · 오수현 · 박지현 · 김민성 · 이창수
- 13-07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이동은 · 강은정 · 편주현 · 안지연
- 13-08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이승래 · 김혁황 · 강준구
- 13-09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 배찬권 · 선주연 · 김정곤 · 이주미
- 13-10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 문진영 · 김보민 · 이성희 · 김윤옥 · 홍이경 · 이민영

- 13-11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지원 · 서정민 · 문진영 · 송지혜
- 13-12 아·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 정 철 · 박순찬 · 박인원 · 임경수
- 13-13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정여천 · 제성훈 · 강부균 · 최필수 · 김부용 · 김지연
- 13-14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문익준 · 이혁구 · 전재욱
- 13-15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조영관 · 엄구호 · 강명구
- 13-16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 정형곤 · 이유진 · 안병민
- 13-17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 양평섭 · 나수엽 · 남수중 · 이상훈 · 이혁구 · 유호림 · 조현준 · 최의현 · 장영석
- 13-18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 문익준 · 정지현 · 나수엽 · 박현정 · 이효진
- 13-19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 최필수 · 박영호 · 권기수 · 정재완 · 이효진
- 13-20 중국의 채권·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문익준 · 양다영 · 허 인
- 13-21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 양평섭 · 정지현 · 노수연 · 김부용 · 박현정 · 임민경 · 오종혁 · 김홍원 · 박진희 · 이상희
- 13-22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 김태윤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금 · 박나리 · 김유미
- 13-23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서영경
- 13-24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과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 강유덕 · 오태현 · 이철원 · 이현진 · 김준엽
- 13-25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이 용 · 송영철 · 초충제 · 최윤정
- 13-26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 이권형 · 광성일 · 박재은 · 손성현

13-27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 박영호·장종문·전혜린·김영기

13-28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김진오·박미숙·이시은·임태균

최장호(崔壯鎬)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choi.j@kiep.go.kr)

저서 및 논문

『통일농업 성장보고서 1991-2009』(2012)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5) 외

김준영(金俊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중국 칭화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現, E-mail: junyoung@kiep.go.kr)

저서 및 논문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5)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의의와 한국의 대응』(공저, 2015) 외

임소정(任炤貞)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학 석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現, E-mail: sjim@kiep.go.kr)

저서 및 논문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5) 외

최유정(崔有晶)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동아시아지역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저서 및 논문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공저, 2014)

『북한 경제개혁의 재평가와 전망』(공저, 2015) 외

연구보고서 15-13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2015년 12월 24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이일형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화: 044-414-1114 FAX: 044-414-1144

인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전화 02-2269-9917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1573-0 94320

정가 10,000원

978-89-322-1072-8 (세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권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I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CHOI Jangho, KIM Junyoung, IM So Jeong, and CHOI Yoojeong

이 연구는 북·중 양국의 경제협력을 분업체계로 의제하고 이론적 접근을 통해 중국에서 시작된 대외경제환경 변화가 북·중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북경제협력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북·중 경제협력을 분업체계로 규정한 뒤, 국경을 마주한 두 지역간 분업체계가 심화되는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업체계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북·중 경제협력 현황과 추이를 살펴 북·중 분업체계의 질적인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였고, 중국과 북한의 경제여건 변화 (economic shock)가 분업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망하였다. 이 연구의 기여는 첫째, 북·중 분업체계 분석의 이론적 접근을 하였다는 점, 둘째, 선행연구와 달리 새로운 통계자료를 활용한 점,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정립한 개념들을 현지조사를 통해 재확인함으로써 연구의 정합성을 높인 점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대에 들어선 세계경제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대북정책 수립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ISBN 978-89-322-1573-0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